

# 2023

The logo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is a circular wheel composed of 17 colored segments, each representing a goal. The tex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s written in a circular path around the wheel.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

2023





전 세계가 글로벌 위기와 갈등에 직면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목표 달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 에너지, 인도주의 및 난민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뭄, 산불과 홍수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해양 수온은 해양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성, 어린이 및 기타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여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및 통계정보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품질의 시의적절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는 현황 파악과 함께 미래의 요구 사항을 예측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발전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와 국제사회는 새로운 통계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SDG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서 통계청의 역할을 신설함으로써 SDG 이행 점검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했고, SDG 데이터 국가책임기관으로서의 통계청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표 개발 등 혁신적 SDG 지표 데이터 생산을 위해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기후, 환경, 도시 등 SDG 분야별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성영상 자료와 격자 기반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표 생산 연구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SDG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SDG 17개 목표에 대한 국가별 이행 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정의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저탄소 정책 추진과 회복력을 되살릴 수 있는 개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SDG에 제시된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 불평등 심화, 환경 악화 및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번영하려면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SDG 달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내외에서 글로벌 2030 의제를 달성하는 데 증거 기반의 핵심 지표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장 한 훈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그 시작을 알린 지 올해 8년 차로, 2030년 목표 시점까지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계개발원은 한국의 SDG 데이터 책임기관으로 ‘증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비전하에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비롯한 SDG 유엔 점검회의에 제공되어 전 세계 공동발전을 위한 논의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시에 국내 관계 부처 및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에도 전파되어, SDG 이해도를 고양시키고 정책 활용성을 진작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은 203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실행해야 SDG 달성이 가능한지를 보여 주는 나침반 역할로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전쟁 등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변화를 지표로 보여 줌으로써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건강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서의 코로나19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사회적 위기라는 긴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폐쇄 및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교육 공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생의 국어 과목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2019년 77.5%에서 2021년 64.3%로 하락했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를 가속화하는 부정적 징후들 또한 여러 지표에서 발견됩니다. 산림면적과 적색목록지수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의 감축 속도는 더디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4.7%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 각계각층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SDG 원칙을 되새기며, 취약집단과 빈곤국을 아우르는 포용 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공공사회지출의 증가,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 등은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 줍니다.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은 국책연구기관 간 협업의 산물입니다. 전 과정을 이끌어 주신 한국환경연구원 정우현 지속가능발전본부장님과 각 목표를 집필해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님들, 그리고 분야별 자문위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보고서를 기획·편집해 준 통계개발원의 박영실 사무관, 윤민희 주무관, 정지은 주무관의 노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번 보고서가 증거 기반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어 국내외 SDG 달성에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통계개발원장 송준혁



발간사	003
서문	005
요약	008
인포그래픽	011

SDG 목표별 분석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감소세가 둔화 (☞ 관련 지표 1.2.1)	017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은 점차 증가해 2021년에는 62.3%의 가구원이 수급 (☞ 관련 지표 1.3.1)	019
공공사회지출 증가는 가족, 노령 관련 지출에서 크게 상승 (☞ 관련 지표 1.b.1)	020
빈곤감소를 위한 ODA 공여액은 2020년 7억 7182만 달러 (☞ 관련 지표 1.a.1)	021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15년 이후 증가 추세 (☞ 관련 지표 2.1.1)	023
농가 규모에 따른 농업소득 격차 다소 감소 (☞ 관련 지표 2.3.2)	025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 높아, 가축 자원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 관련 지표 2.5.2)	026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심한 편 (☞ 관련 지표 2.c.1)	027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한국의 보건 대응 역량 OECD 국가 상위권 유지 (☞ 관련 지표 3.d.1)	029
보건의료 인력 증가 추세, 하지만 OECD 평균에는 못 미쳐 (☞ 관련 지표 3.c.1)	030
HIV 신규 감염자 수는 OECD 중 매우 낮은 수준 유지 (☞ 관련 지표 3.3.1)	031
흡연율 감소 추세, 남성 흡연율 OECD 중 상위 (☞ 관련 지표 3.a.1)	031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한국 높은 국제 학업성취도 수준 유지, 코로나19 이후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 감소 추세 지속 (☞ 관련 지표 4.1.1)	035
---	-----

만 5세 아동 취원율 90% 전후 수준 유지 (☞ 관련 지표 4.2.2)	038
코로나19 시기 평생 교육 참여율 큰 폭 하락, 취약집단의 평생 교육 참여율 낮아 (☞ 관련 지표 4.3.1)	039
한국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노력 드러나 (☞ 관련 지표 4.7.1)	040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낮은 수준 (☞ 관련 지표 5.5.1)	043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 낮은 편 (☞ 관련 지표 5.5.2)	044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 낮은 편 (☞ 관련 지표 5.5.1)	046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 관련 지표 5.2.1)	047
여성 농민의 토지 소유 비율 낮아 (☞ 관련 지표 5.a.1)	047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미급수 지역 감소로 식수 서비스 수준 향상 (☞ 관련 지표 6.1.1)	049
물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관련 지표 6.4.1)	050
기후변화 대응 담수자원 모니터링 지속 필요 (☞ 관련 지표 6.6.1)	050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재생에너지 비율은 증가 추세이나 OECD 하위권 (☞ 관련 지표 7.2.1)	053
에너지 원단위의 지속적 개선 추세 (☞ 관련 지표 7.3.1)	054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부터 회복세 확인 (☞ 관련 지표 8.1.1)	057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성별 격차는 확대 (☞ 관련 지표 8.5.2)	058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증가 (☞ 관련 지표 8.8.1)	059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였던 1인당 화석연료 소비량이 2018년부터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8.4.2)	060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취업자와 매출은 회복 추세 (☉ 관련 지표 9.2.2)	063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필요 (☉ 관련 지표 9.3.1)	065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적 수준 (☉ 관련 지표 9.5.1 / 9.5.2)	066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불평등 지수는 증가하지만, 부채 비율은 최근 감소 (☉ 관련 지표 10.4.2)	069
하위 40%의 순자산 점유율 감소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 (☉ 관련 지표 10.4.1)	071
금융건전성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 (☉ 관련 지표 10.5.1)	072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연속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취약계층에 집중 (☉ 관련 지표 11.1.1)	075
대중교통까지 접근거리 평균 8.18분, 미시적 취약 지역 존재 (☉ 관련 지표 11.2.1)	077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은 2000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나 실효성 있는 집행 필요 (☉ 관련 지표 11.7.1)	078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참여 운영 (☉ 관련 지표 11.3.2)	079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의 탈동조화 추세는 뒷걸음질 (☉ 관련 지표 12.5.1)	081
전체적인 재활용률은 증가하는 한편 생활계폐기물은 정체 (☉ 관련 지표 12.5.1)	083
코로나19와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 (☉ 관련 지표 12.5.1)	084
폐합성수지 폐기물 집계 보완으로 발생량 급증 (☉ 관련 지표 12.5.1)	086
사업장이 배출하는 유해폐기물은 꾸준히 증가 (☉ 관련 지표 12.4.2)	087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감소세이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13.1.1)	089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 관련 지표 13.2.2)	091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쓰레기 수거량 7년 만에 감소 (☉ 관련 지표 14.1.1)	095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활동은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14.6.1)	096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확대해 가는 중 (☉ 관련 지표 14.4.1)	097
해양수산 연구개발투자는 큰 변동 없음 (☉ 관련 지표 14.a.1)	097
연안통합관리에 이은 해양공간계획으로 영해에서 EEZ로 관리 범위 확장 (☉ 관련 지표 14.2.1)	099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산림면적의 꾸준한 감소 (☉ 관련 지표 15.1.1)	101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세 미약 (☉ 관련 지표 15.1.2)	10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 증가 (☉ 관련 지표 15.2.1)	103
국가 적색목록지수 지속적 악화 추세 (☉ 관련 지표 15.5.1)	104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살인 발생의 감소세 지속 (☉ 관련 지표 16.1.1)	107
폭력범죄 피해가 늘고 있으나 신고율은 여전히 낮아 (☉ 관련 지표 16.1.3 / 16.3.1)	108
공무원 뇌물 제공 등 부패행위 줄어들어 (☉ 관련 지표 16.5.1 / 16.5.2)	109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 0.16%로 증가 (☉ 관련 지표 17.2.1)	111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39.8%로 높아져 (☉ 관련 지표 17.2.1)	113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감소 (☉ 관련 지표 17.3.1 / 17.5.1)	114
최저개발국에 대한 교역규모 증가 (☉ 관련 지표 17.11.1)	115

**부록**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118
용어 약어	121
지표 총괄표	122
한눈에 보는 SDG 발자취	134



## 목적 및 활용

유엔 주도하에 전 지구적 목표로 설정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모두 협력해야 하며, SDG 17개 목표에 대한 전 지구적, 그리고 국가별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SDG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걸친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231개 지표(Indicators)로 구성되는데, 각 지표별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기반해 우리도 한국의 이행현황과 주요 이슈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유엔 SDG 이행에 관한 한국의 데이터 책임 기관(data focal point)으로, 2019년 이래 매년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책담당자와 각 분야 연구자를 위한 정책자료로, 또한 언론·미디어, 시민사회 등 대국민 정책홍보·교육·소통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의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되어 해외 관련기관 및 연구자 등도 활용 중이다.

## 분석 방법

지표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한국 SDG 데이터 플랫폼(<https://kostat.go.kr/sdg>)’을 우선적으로 활용했고, 그 외 필요에 따라 관련 승인통계, 정책자료 등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을 수집했다. 지표별 이행현황에 대한 유의미하고 풍부한 분석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계열 분석, 국제 데이터를 활용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 국내 인구집단 또는 지역 등에 따른 세분화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통계자료는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 정보의 활용도와 가시성을 높이고자 했다.

## 작성 원칙

분석을 위해 먼저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할 지표들을 목표별로 약 3~5개 선정했다. 분석할 지표를 선정할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SDG 달성의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가능한 모든 지표들이 한 번 이상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년도 보고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지표들을 고르게 선정하고자 했다. 또한 데이터의 가용성 및 공표 주기, 해당 지표가 한국적 상황에서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통계적 지표에 대한 분석이 여럿 포함되었다. SDG 지표는 통계적 지표와 비통계적 지표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관련 법 및 제도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예컨대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관련법에 주류화되어 있는지(목표4),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는지(목표11), 생태계 접근 기법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지(목표14) 등이 그 예로, 최근 국제적으로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지표 분석을 통해,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분석 결과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코로나19·전쟁·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경봉쇄 등으로 위축되었던 경제는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니, 회복세는 인구집단별로 상이했다. 또한, 계속된 코로나19 변이와 연이어 발생한 전쟁,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취업자 수 및 매출액 증가세가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취업자 수가 산업 전반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경우에도 2021년 들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관련: 목표8, 목표9).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배제된 집단은 없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관련: 목표8).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시

기인 2020년에 크게 증가했을 뿐더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증가했다(관련: 목표10).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관련: 목표9).

**② 코로나19의 파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 공백은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졌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감소했고, 평생 교육 참여율 또한 2020년·2021년 연속해서 떨어졌다(관련: 목표4).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은 2015년 이래 증가하고 있다. 전쟁 및 기후위기 등의 중첩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관련: 목표2). 보건 대응 역량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보건의료 인력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못 미치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관련: 목표3).

**③ 불평등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간극 또한 좁지 않다.** 지니계수에 의한 소득 및 부동산 등을 고려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다(관련: 목표10). 소득 불평등은 건강과 직결된 영양, 교육, 주거 등에서도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매우 긴박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관련: 목표2, 목표4, 목표11). 성불평등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된다. 무엇보다, 정치 및 행정, 경제 분야 내 의사결정권을 갖는 여성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은 사회에서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함을 의미한다(관련: 목표5). 장애인, 아동 및 고령층 등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관련: 목표1).

**④ 산림면적의 축소,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산림면적과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가축

멸종위험 또한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관련: 목표2, 목표15). 가뭄과 홍수 등은 가용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부문 물 이용 효율성은 감소하고 있다(관련: 목표6). 자연재난으로 발현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관련: 목표13). 국제적 차원에서의 육상 및 담수 보호지역의 설정,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관련법 제정을 통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에서의 관련 대책 수립,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촉구된다(관련: 목표12, 목표13, 목표14, 목표15).

**⑤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더디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7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관련: 목표7). 코로나19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1990년대 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관련: 목표13).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해 발포수지류 및 폐합성수지류 등의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률은 OECD 회원국 평균 2배 이상이나,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과 재활용 품질의 문제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관련: 목표12).

**⑥ SDG 달성을 위한 국내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 부문의 부정부패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고 있다(관련: 목표16). 국제적 책무 완수를 위한 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직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목표17). 더욱 고무적인 부분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자원이 될 것이다(관련: 목표9).



##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주요 결과

### 1 빈곤퇴치



공적외전급여수급률은 2021년 62.3%,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2020년 14.4%로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은 확대 추세. 그러나 2017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던 빈곤을 감소세는 잠시 주춤

### 2 기아종식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2020년 14.4%로 전년 대비 1.0%p 증가. 농축수산물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동식물 자원의 다양성 부족도 꾸준한 위협 요인으로 제기. 특히,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2011년 이후 80% 이상의 높은 수준 지속

### 3 건강과 웰빙 증진



한국의 보건 대응 책임역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인력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 성인 흡연율 또한 2001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이나,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편

### 4 양질의 교육 보장



유아의 취원율과 초·중등 학업성취도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나, 코로나19 이후 학업성취도 및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계층 간 격차에 주목할 필요

### 5 성평등달성



행정과 지방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 참여율이 증가했으나 관리직급에서는 여전히 여성 비율이 낮은 현실. 지방의원 여성 비율은 2022년 기준 30.3%이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1명도 없었으며,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은 3.1%에 불과

###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전국의 미급수율은 2002년 5.9%에서 2021년 0.6%로 감소해 도시와 농어촌 간 식수불균형은 해소. 그러나 물 이용 효율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자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2009년 대비 2019년 물 이용 효율성은 41.5% 상승했으나, 농업 부문의 효율성은 정체되고 있었으며, 계절변동 수역도 2011년 이후 증가

###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9년 3.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에너지 원단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실업률은 2022년 2.9%로 전년 대비 0.8%p 감소,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3분기 시작으로 9분기 연속 양의 성장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조짐. 2022년 산업현장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증가

###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와 매출액 회복세가 뚜렷한 한편,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중소기업의 활성화 필요.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10 불평등 감소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2년 0.606으로 2018년부터 증가세, 하위 40% 자산점유율은 4.9%로 감소해 불평등 심화 추세.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에 예의주시 필요

###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은 증가하는 등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청년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미시적 개선 필요

###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와 폐기물 발생 변화 확인. 2020년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중 비닐류와 같은 폐합성수지류 발생량이 2019년 대비 21.6% 증가, 종량제 봉투 폐기물 중에서 음식 포장용기류 등 기타 가연성 폐기물은 2019년 대비 13.7% 증가

### 13 기후변화 대응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2021년 연속 감소했으나, 2019년 기준 OECD 국가 간 비교 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6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과 공동 4위로 높은 편.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는 1998년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나 기후위기 대비하여 적극적인 적응 능력 향상 필요

### 14 해양생태계 보존



2021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약 12만 톤으로 7년 만에 감소를 기록했고 원안어선의 불법어업도 감소 추세이나, 해양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큰 도전과제

### 15 육상생태계 보호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은 2020년 64.4%, 적색목록지수는 2022년 0.69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그 추세는 정체

### 16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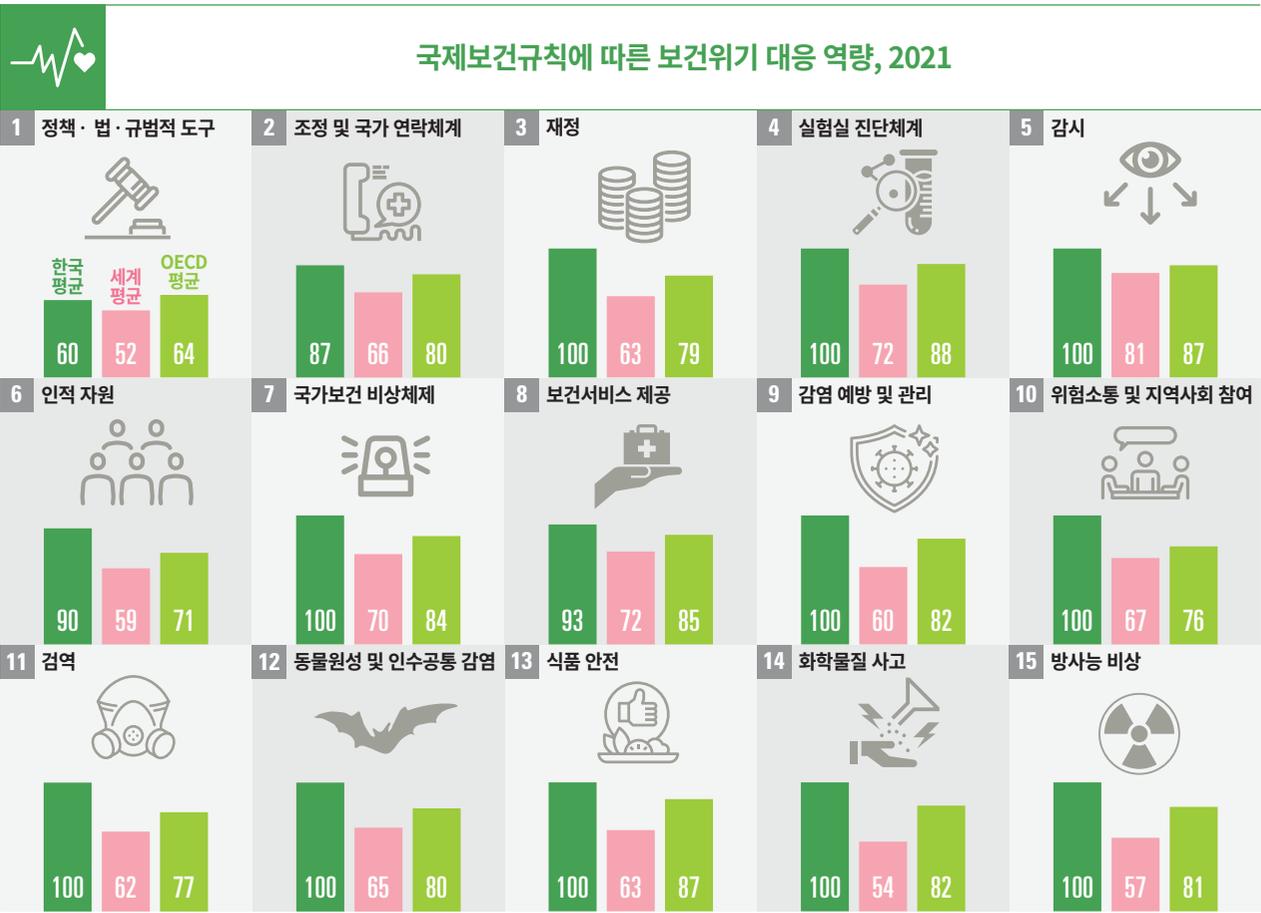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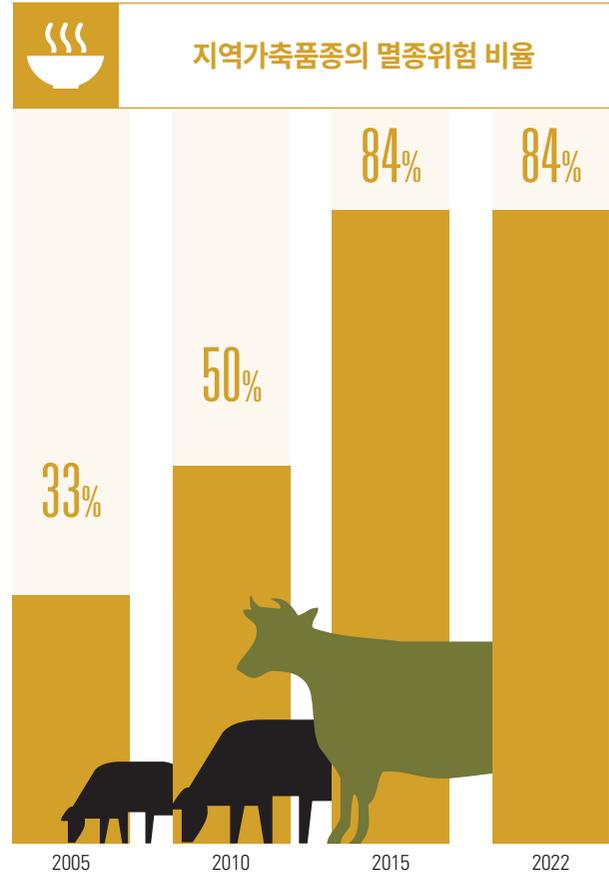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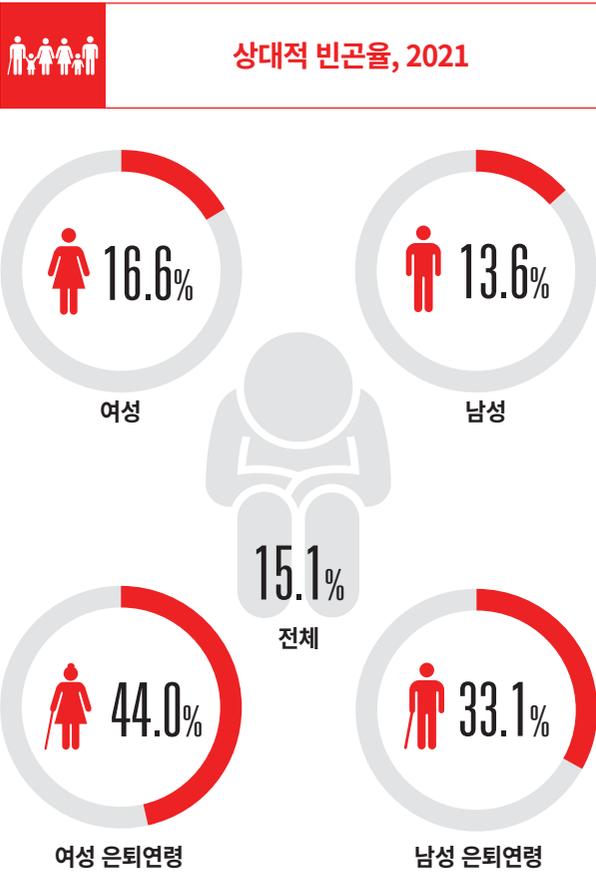
살인범죄는 2021년 270건으로 감소 추세. 폭행 및 성폭력 등 폭력범죄피해 보고율은 증가했으나, 경찰 신고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19%에 불과. 한편, 정부부문의 부패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

### 17 글로벌 파트너십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GNI 대비 비율은 2021년 0.16%로 DAC 회원국 중 25위.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비율은 높은 편이나 코로나19 이후 직접투자는 최근 크게 감소해 적극적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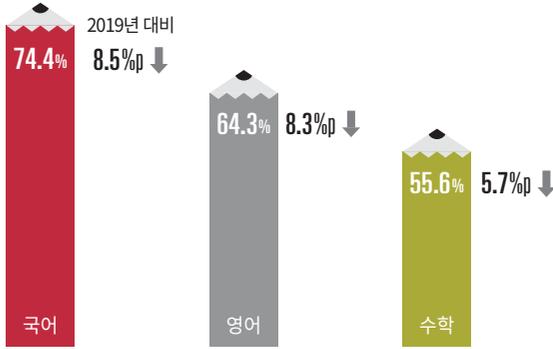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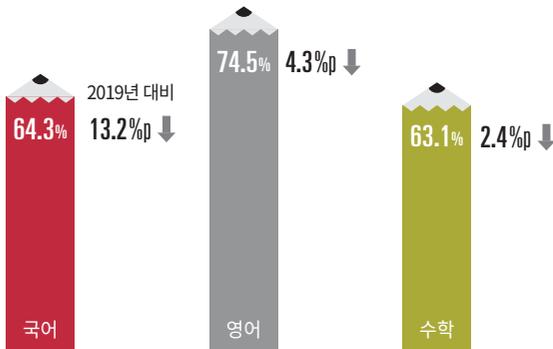


### 학업성취도 및 평생학습 참여율, 2021

중학교 3학년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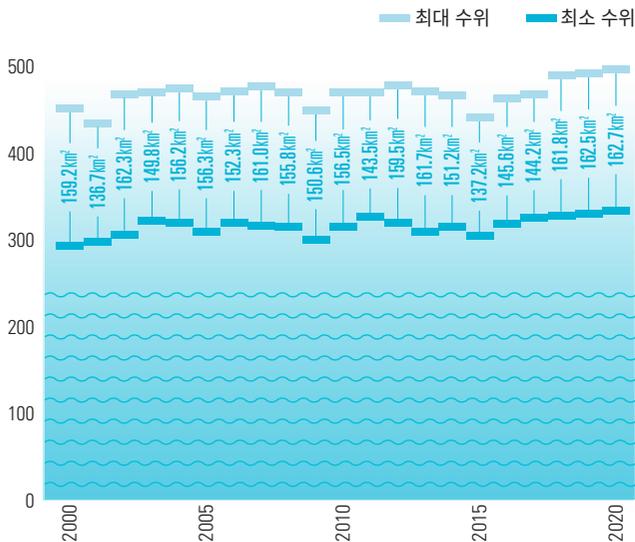
고등학교 2학년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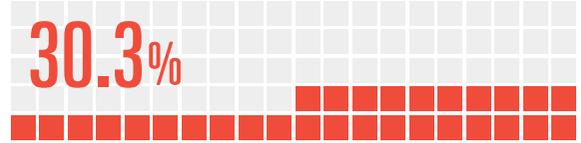


### 인공 저수지의 수표면적



###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2022

여성 지방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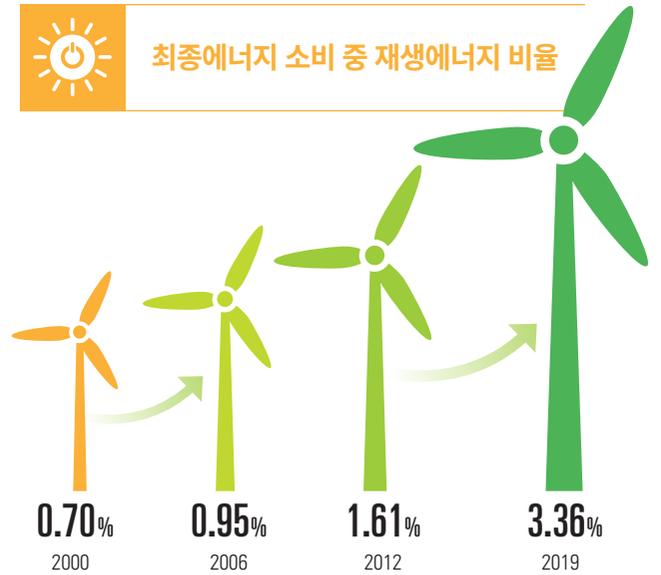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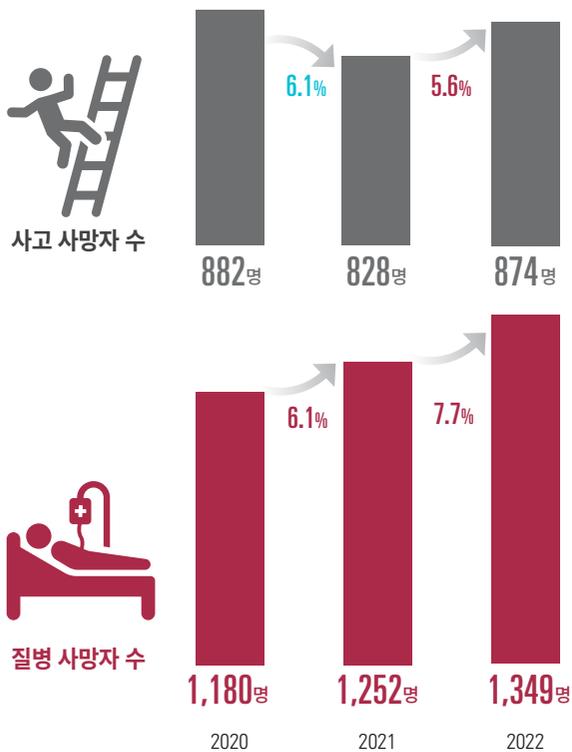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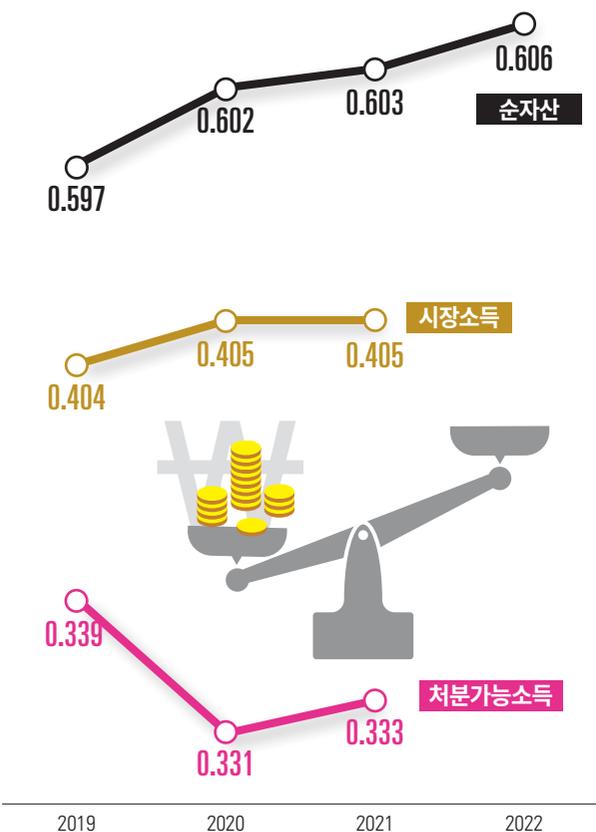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및 질병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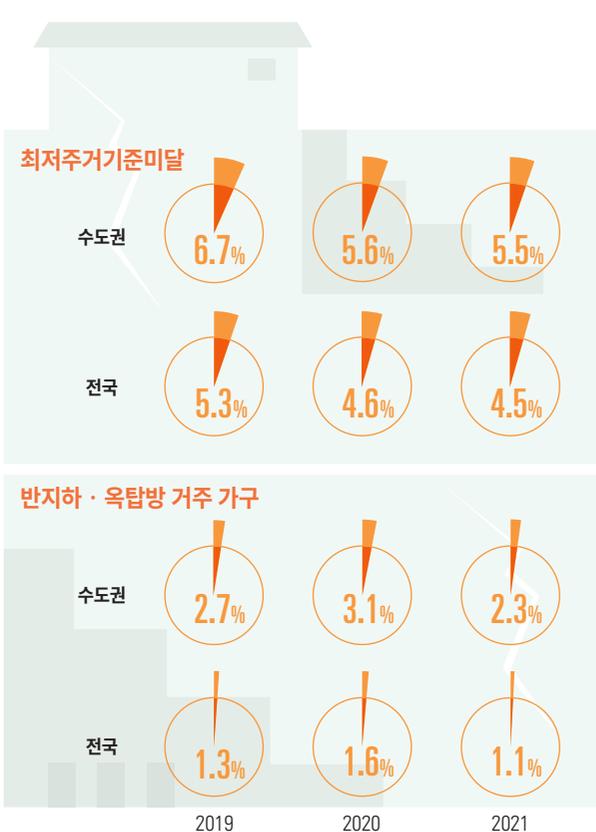
## 코로나19 전후 취업자 수 현황



## 지니계수로 본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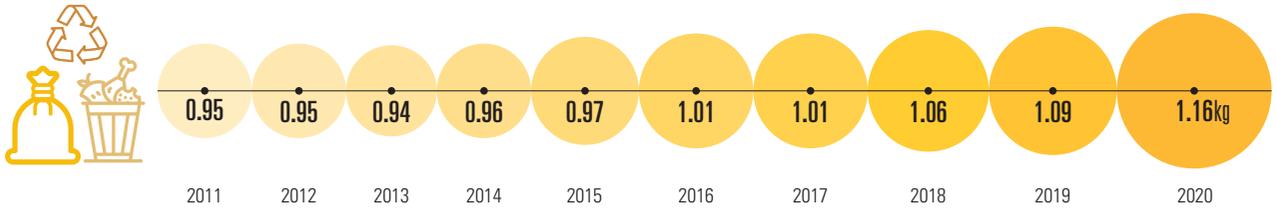


##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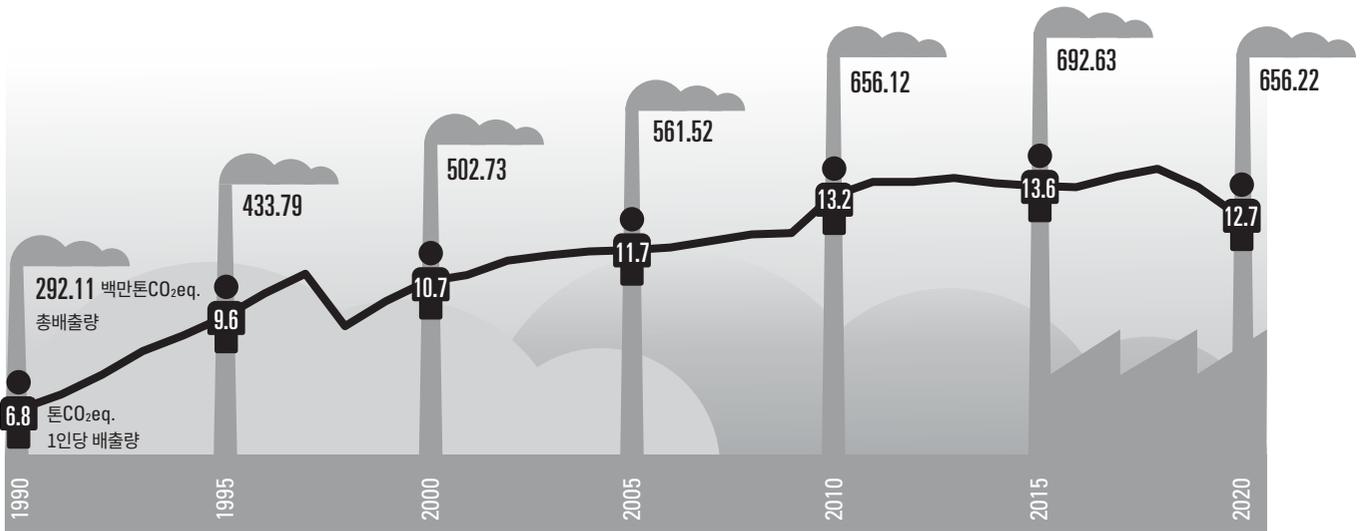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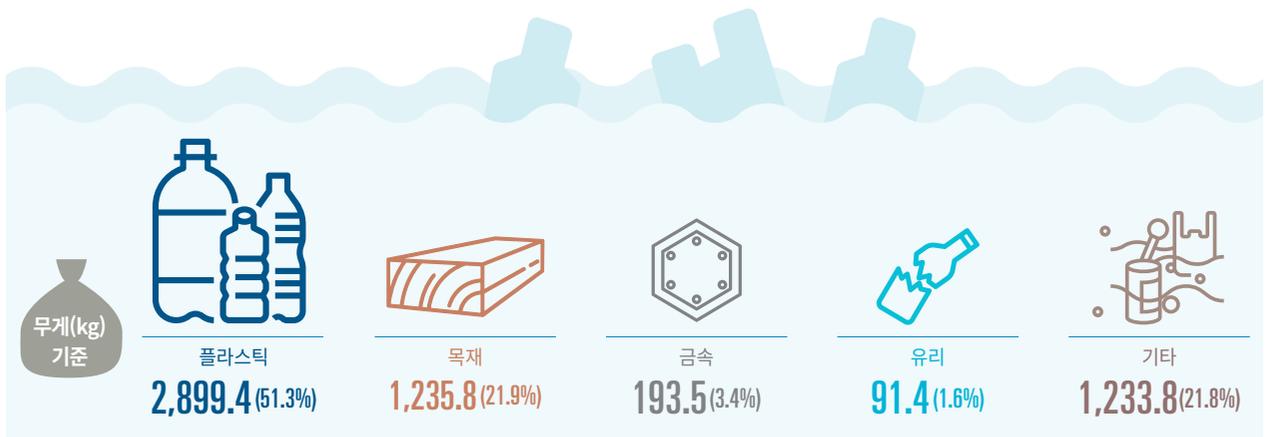
### 1인당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



### 국가 온실가스 연간 총배출량 · 1인당 연간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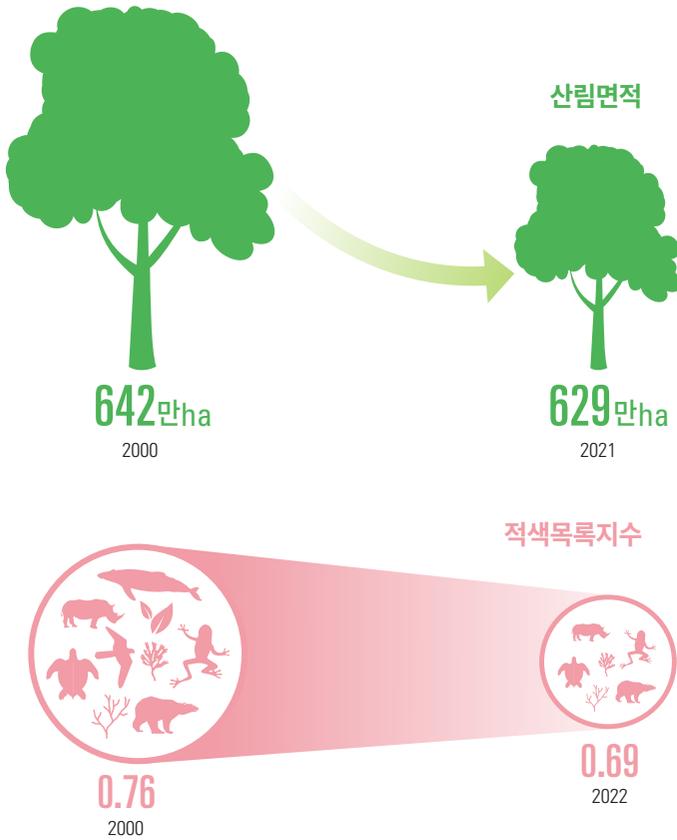


### 해안쓰레기 유형별 무게 비중,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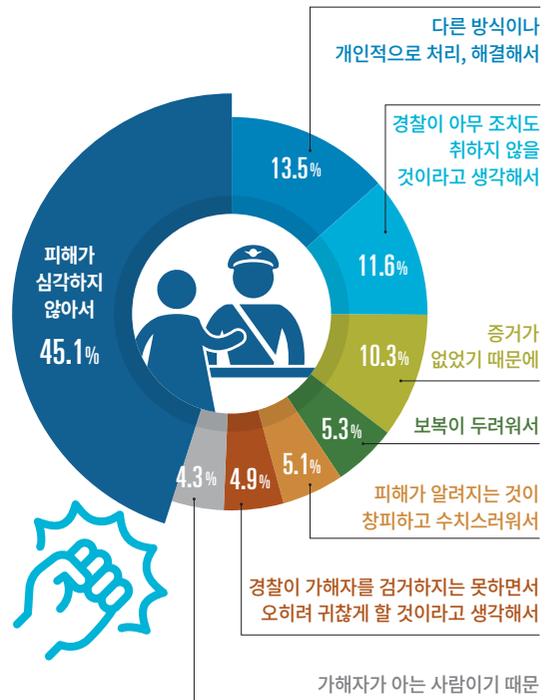




### 산림면적 · 적색목록지수 추이



### 폭력범죄피해 미신고 이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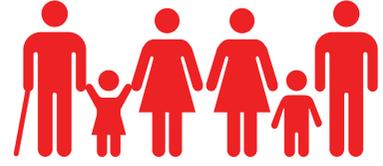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비중





# 1 NO POVERTY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SDG 1번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 이 목표에서는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며 나타나는 빈곤의 다양한 차원을 모니터링하고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재난 상황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SDG 1번 목표는 빈곤 그 자체뿐만 아니라 빈곤의 원인이 되는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투입에 관심을 둔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했다.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2022년부터는 순차적인 고용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정 투입을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이후 총 6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재정 지원,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빈곤감소 효과는 이전 시기에 비해 늘어났다. 특히 대부분의 가구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공적이전소득을 수급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재난지원금을 제외할 경우에도 2020년 기준 62.9%의 인구가 공적이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가구원이었다. 다만 2021년에는 공적이전의 감소에 따라 빈곤율 감소가 정체를 보였으며, 공적이전급여 수급률도 62.3%로 줄어들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990년 2.6%에서 2020년 14.4%까지 증가했다. 공공사회지출은 건강 보장에 5.1%, 노령 보장에 3.4%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 수원국 빈곤감소를 위한 공여액은 2011년 2억 4344만 달러에서 2020년 7억 7182만 달러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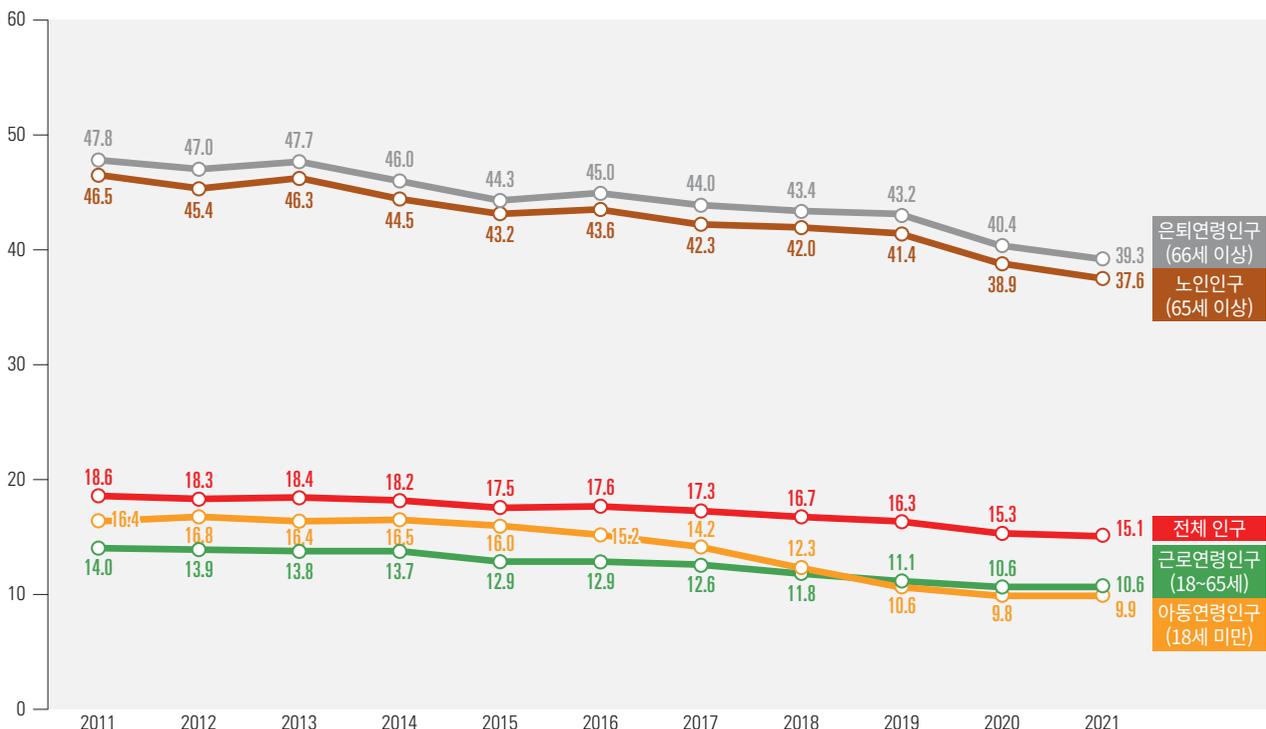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감소세가 둔화 (☞ 관련 지표 1.2.1)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원 수를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

다. 이 비율은 시장에서 확보하는 가계소득 수준과 공·사적 소득이전, 조세 부담 및 사회보험 납부 후 가계의 경제 상태를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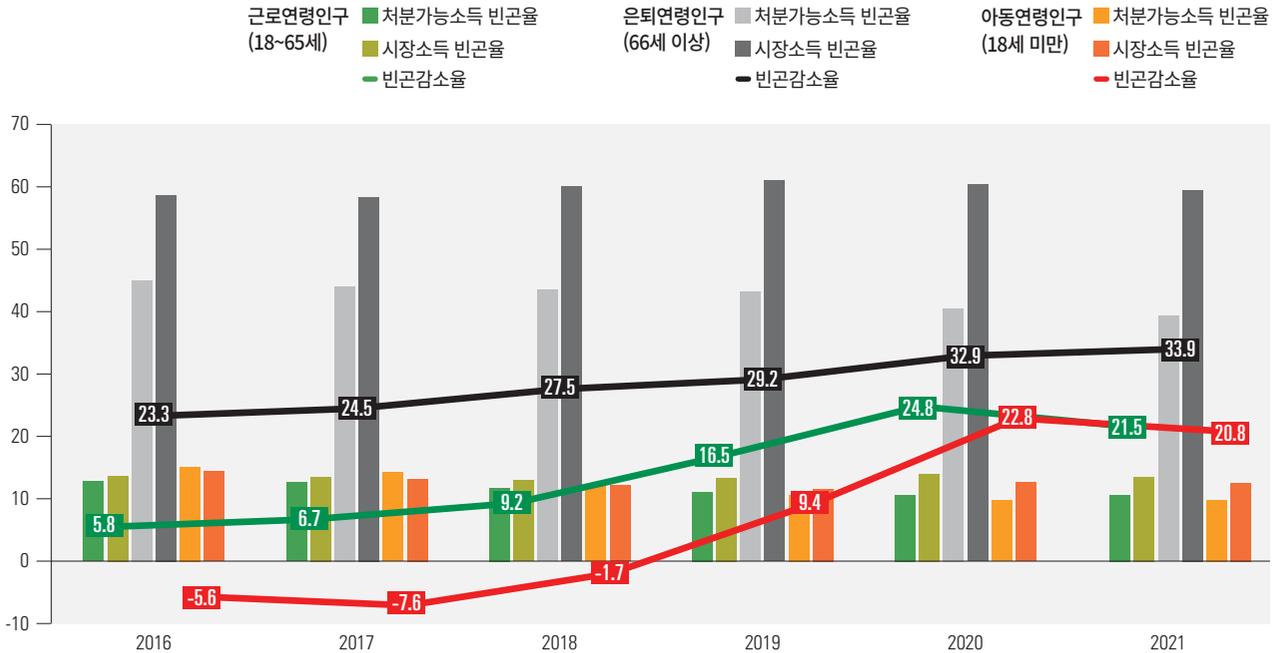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2.12.01. 인출)

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이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임



### 연령집단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2016~2021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2.12.01. 인출)  
 주1: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시장소득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시장소득빈곤율로 나눈 백분율 값으로 함  
 주2: 아동연령인구 시장소득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득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2017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던 빈곤율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2%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8세 미만 빈곤율은 9.9%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고 18~65세 빈곤율은 10.6%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빈곤율은 37.6%, 66세 이상 빈곤율은 39.3%로 각각 전년 대비 1.3%p, 1.1%p 감소했다. 65세 이하 인구에서는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고령층에서는 빈곤율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18~65세 인구에서 시장소득 빈곤율이 2020년 14.1%에서 2021년 13.5%로 감소했음에도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공적이전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6세 이상 인구에서는 시장소득 빈곤율이 60.2%에서 59.5%로 감소했고 처분가능소득 빈곤율도 40.4%에서 39.3%로 감소해 공적이전소득이 일부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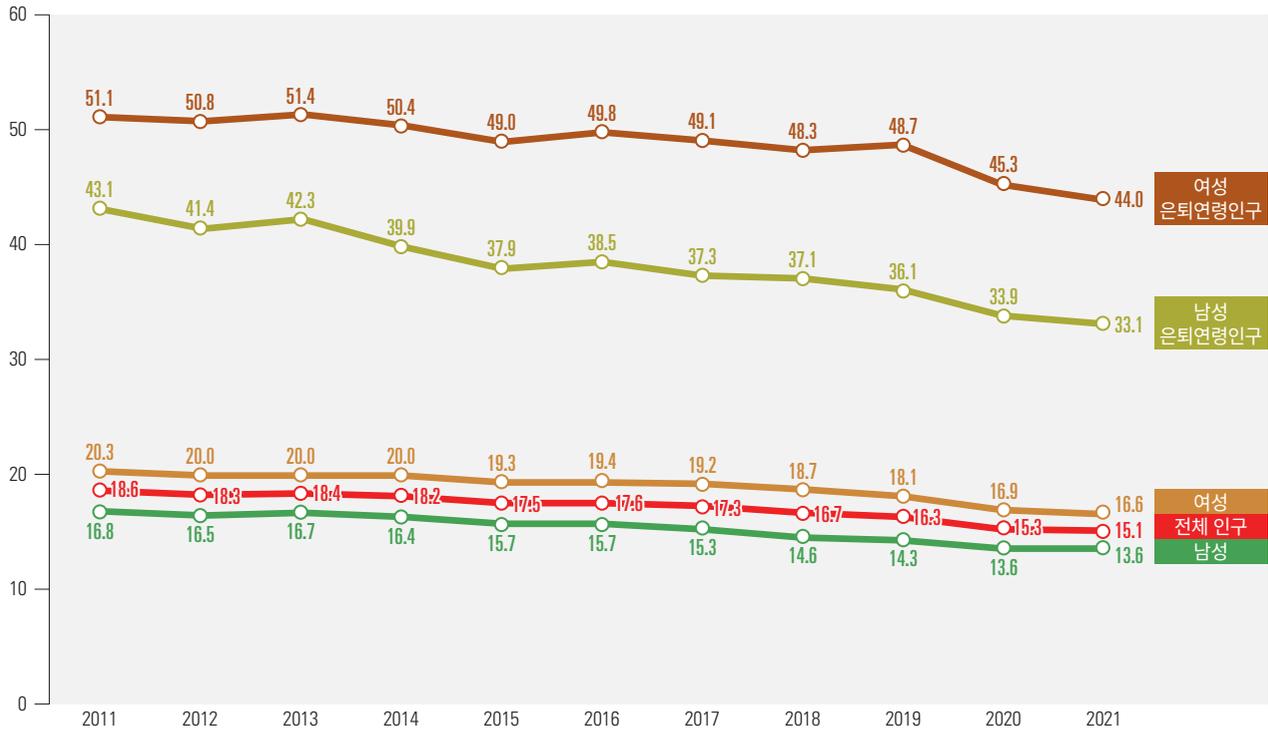
시장소득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을 비교해 측정된 빈곤감소 효과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볼 때, 18~65세 인구의 빈곤감소율은 2016년 5.8%에서 2020년에는

24.8%까지 급증했다.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감소율도 같은 기간 23.3%에서 32.9%로 증가했다. 18세 미만 인구의 경우 2016년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이 더 높아 빈곤감소율이 마이너스(-5.6%)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빈곤감소율이 22.8%로 증가했다. 18세 미만 인구가 속한 가구에서 2018년까지는 공적이전소득보다 조세 부담 및 사회보험 납부를 통한 소득 감소가 더 컸지만, 2019년 이후에는 이들 가구에도 공적이전소득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2021년에는 18~65세 인구의 빈곤감소율은 21.5%로 다시 낮아졌고,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감소율도 33.9%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18세 미만 인구에서도 20.8%로 낮아졌다. 이는 2021년 공적이전급여를 통한 빈곤감소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들거나 소폭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 빈곤율은 2016년 15.7%에서 2021년 13.6%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여성 빈곤율도 19.4%에서 16.6%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남성 빈곤율은 전년 대비 동일했고 여성 빈곤율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성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2.12.01. 인출)

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이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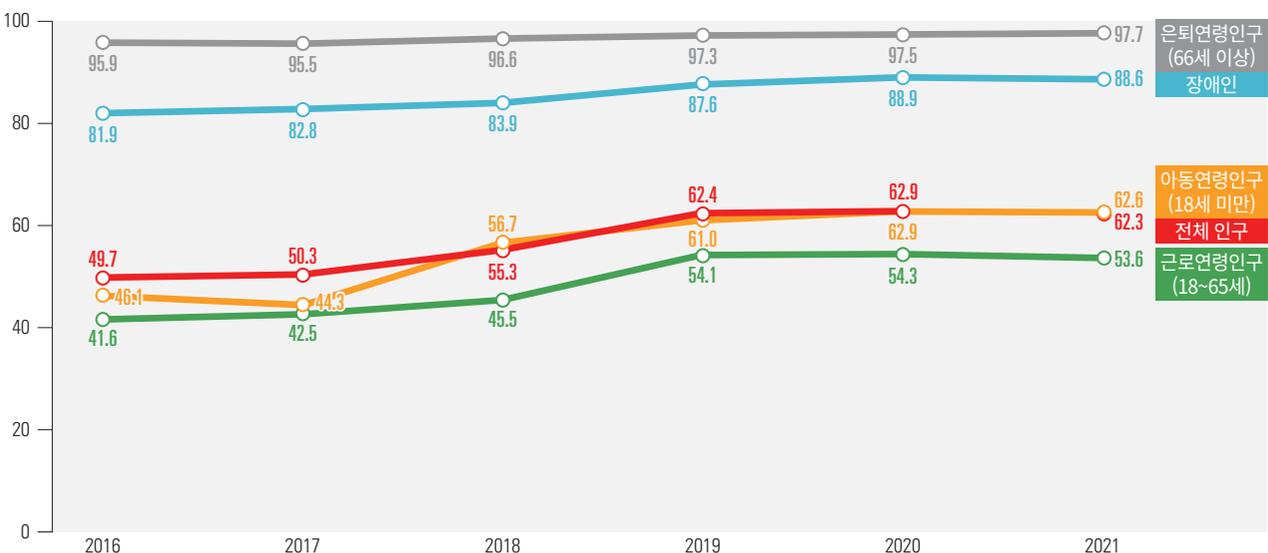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은 점차 증가해 2021년에는 62.3%의 가구원이 수급** (관련 지표 1.3.1)

공적이전급여는 아동수당과 같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형 급여에서부터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자녀장려세제 등과 같이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

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까지 다양하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의 가구원 중 공적이전급여를 수급한 가구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구원 개인이 급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아동·장애 가구원의 공적이전급여 수급률, 2016~2021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원자료로 저자가 계산함

주: 해당 연도에 공적이전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비율을 제시함



도 가구 또는 가구 내 타 가구원이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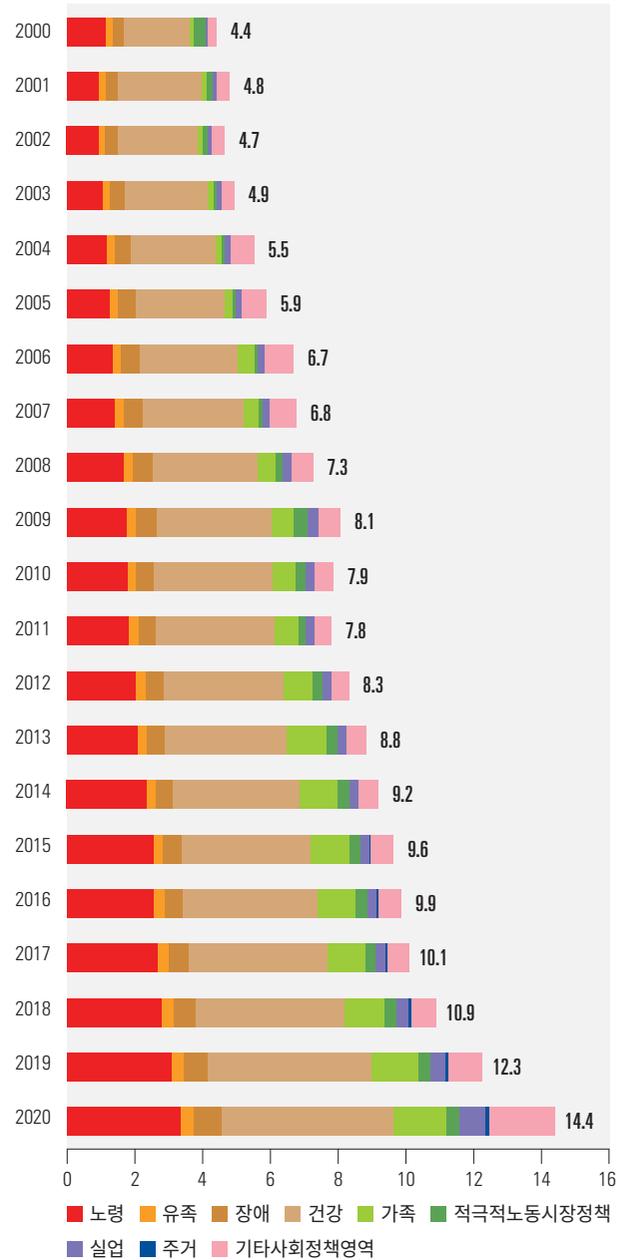
전체 인구의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은 2016년 49.7%에서 2021년 62.3%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대부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여기서는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의 증가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2017년 이후 증가하던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은 2020년 정점에 이른 후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근로연령 인구의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은 2016년 41.6%에서 2021년 53.6%로, 같은 기간 아동연령 인구의 경우는 46.1%에서 62.6%로 증가해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은퇴연령 인구의 수급률은 2016년 95.9%에서 2021년 97.7%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81.9%에서 88.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지급대상을 크게 늘리지 않은 반면, 최근 들어 근로연령과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점차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공공사회지출 증가는 가족, 노령 관련 지출에서 크게 상승 (☉ 관련 지표 1.b.1)

OECD 사회지출데이터(social expenditure data)는 각국의 사회지출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즉, 노령 보장 영역(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지출 포함), 유족 보장 영역(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 포함), 장애 보장 영역(국민연금의 장애급여와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및 재활급여 등 포함), 건강 보장 영역(건강보험급여 등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14.4%인데, 이 중에서 건강 관련 급여가 GDP 대비 5.1%로 가장 많고, 노령 관련 급여가 3.4%, 기타 사회정책 영역 관련 급여가 1.9%, 가족 관련 급여가 1.5%, 장애 관련 급여가 0.8%, 실업 관련 급여가 0.8%, 유족 관련 급여가 0.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급여가 0.4%, 주거관련 급여가 0.1%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컸던 기타 사회정책 영역, 실업 관련 급여는 2020년에 이전 연도 대비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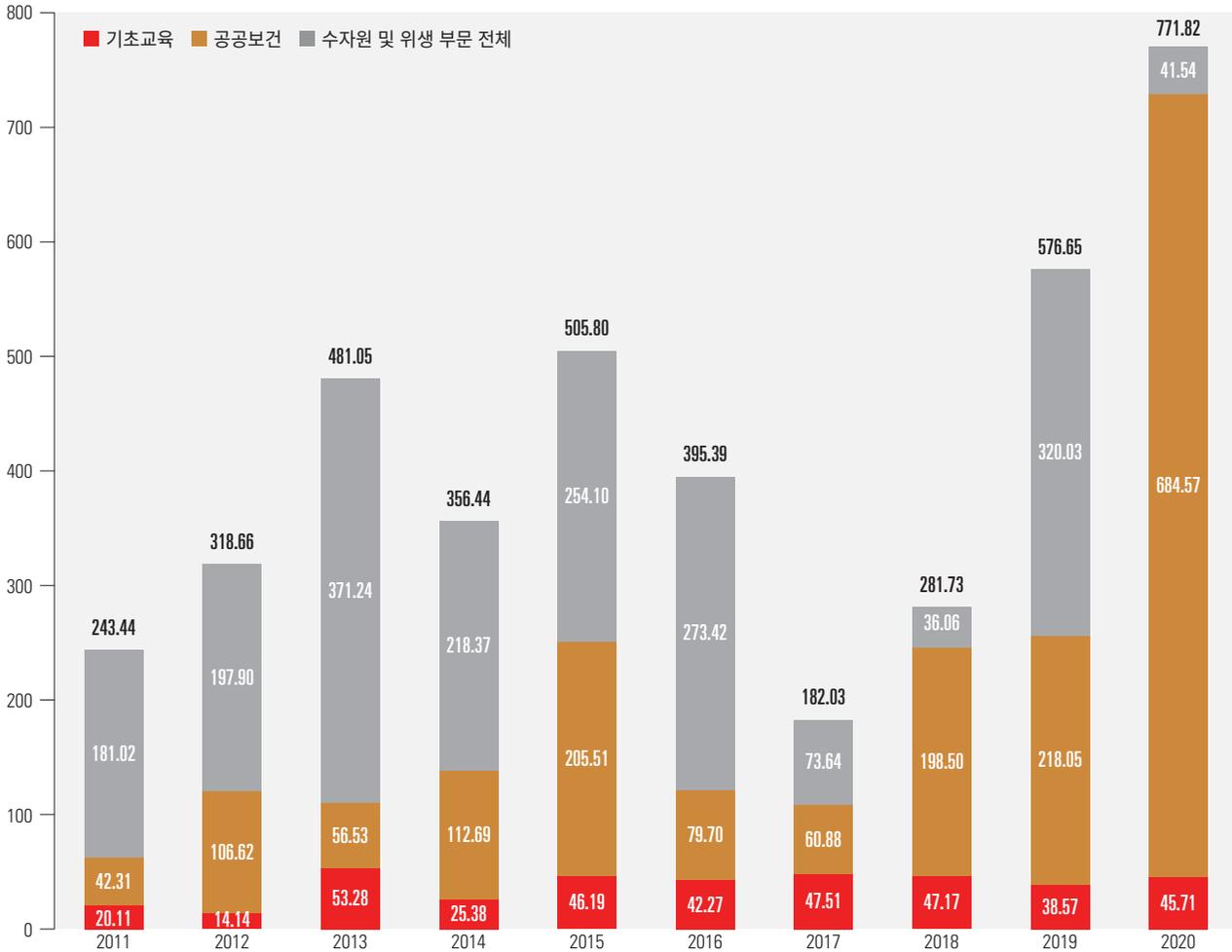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공사회지출 변화 추이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한

정책 영역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2000~2020 (단위: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2023.01.26. 인출)

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7.9%에서 12.3%로 1.56배가 되었다. 이 기간 중 가족 관련 지출이 2.05배로 가장 크게 늘었고, 노령 관련 지출도 1.72배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족 관련 영역에서는 아동 보육과 관련한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이 늘었다. 이는 저출산 대응 방안의 일환이면서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기초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편, 노령 관련 지출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기초연금 지출이 2010년 대비 2019년 각각 2.5배, 2.0배, 3.8배가 되었다.



출처: OECD, Dataset: Aid (ODA) by sector and donor[DAC5](2022.09.18. 인출)

### 빈곤감소를 위한 ODA 공여액은

#### 2020년 7억 7182만 달러 (☞ 관련 지표 1.a.1)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다. 원조는 공여국과 수혜국 양자 간에 이루어지거나, 유엔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개발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ODA의 지출은 섹터, 부문, 항목으로 구분된다. 수원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지출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섹터의 교육 부문 중 기초교육(basic education), 보건 부문 중

공공보건(basic health), 수자원 및 위생 부문 전체를 포함해 산출했다.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기초사회서비스 항목과 다부문 섹터의 식량제공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수원국 빈곤감소를 위한 ODA 공여액은 2011년 2억 4344만 달러에서 2020년 7억 7182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2017년에는 1억 8203만 달러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2020년에 공여액이 늘어난 것은 공공보건 분야 지원이 크게 증가해 나타난 결과다.

-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이후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로 계산함
- **사회지출데이터**: OECD가 회원국 사회보장 현황과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사회지출을 9대 정책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현물과 현금 지출의 규모를 구분해 제시



# 2 ZERO HUNGER



제주의 한 목장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식량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SDG 2번 목표는 기아를 종식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의 식량이 공급·소비되도록 해 양질의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확립해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전쟁과 분쟁, 기후변화 등은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에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28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4600만 명 그리고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억 50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기아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기아를 종식하려는 SDG 2번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식량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이는 식량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절대적인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난 국가이지만 양적·질적 측면에서 식량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최근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영양섭취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량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식량 가격과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양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들이 적절한 수준의 건강과 영양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식량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고 식량생산 기반이 취약해 식량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체 농가에서 소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들의 농업소득은 낮은 편이다. 적정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뒷받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동식물자원의 다양성을 지키는 데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15년 이후 증가 추세

### ☉ 관련 지표 2.1.1)

경제 발전과 소득 증가, 식품산업 성장, 국가 간 식품 교역 확대로 먹을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영양 과잉 섭취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양섭취가 부족한 계층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영양섭취부족자를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

이 모두 평균 필요량 미만인 경우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만 1세 이상)은 2020년 기준 14.4%로 나타난다. 2001년에 18.4%에 달하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2014년에 절반 이하인 8.0%까지 떨어져 13년 만에 10.4%p나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0년(14.4%)에는 최저치였던 2014년보다 6.4%p나 증가했다.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

소득수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1~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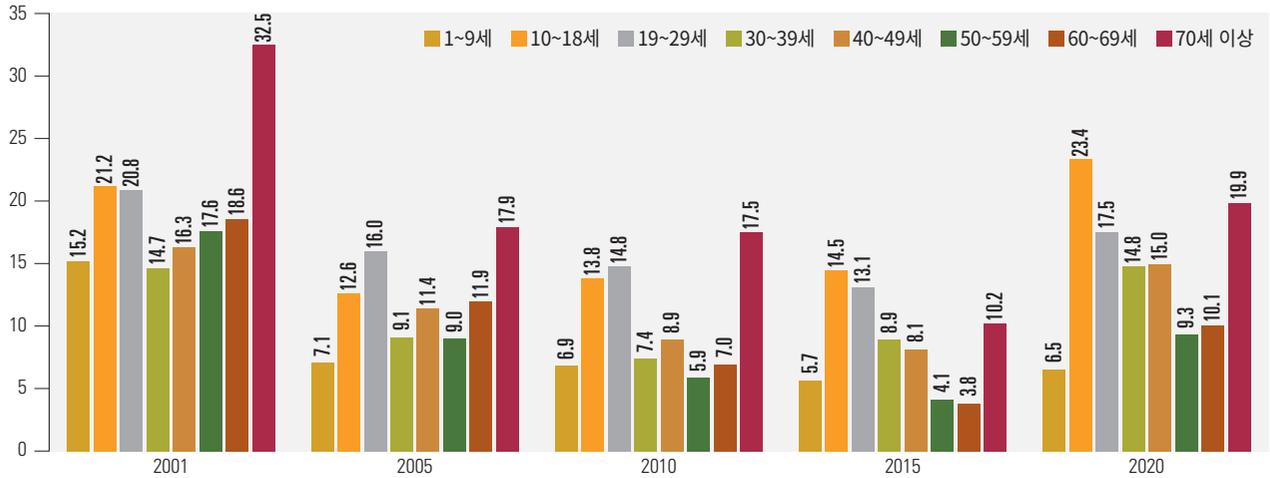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nhanes.kdca.go.kr>, 2022.08.20. 인출)

주 : 소득수준은 월가구동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 (상/중상/중/중하/하)로 분류함



### 연령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1~2020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nhanes.kdca.go.kr>, 2022.08.20. 인출)

### 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1~2020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nhanes.kdca.go.kr>, 2022.08.20. 인출)

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높다. 2020년만 보더라도 고소득층에서는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13.4%인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18.9%에 이른다. 한편 소득계층 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의 격차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의 영양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생활이 변화하고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미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높은 편이던 저소득계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 고소득층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전년 대비 4.8%p나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의 격차가 2019년 10.1%p에서 2020년 5.5%p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10~18세에서 23.4%로 가장 높고 이어 70세 이상(19.9%)과 19~29세(17.5%)에서 높다. 2001년에는 70세 이상 고령층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32.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2020년에는 70세 이상과 다른 연령집단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남녀는 식생활이나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영양섭취수준에도 차이를 보인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남성보다 꾸준히 높다. 2018년 이후 여성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16~1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2018년 8.3%에서 2020년 11.1%로 다소 증가했다. 남녀 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의 차이는 2007년 11.7%p에서 2017년 5.3%p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 9.1%p로 잠시 벌어진 뒤 2019년과 2020년에 다시 6.6%p로 감소했다. 남녀 간의 격차는 2017년 이후 대체로 5~6%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농가 규모에 따른 농업소득 격차 다소 감소

#### ☉ 관련 지표 2.3.2)

농업소득은 농가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경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한국 농가의 농업소득은 연도별로 다소 변동이 있으나 2010년대 이래 평균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0.6%나 떨어진 1026만 원으로 급감하기도 했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에는 1296만 원으로 늘어났다.

농업소득이 2021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경지면적별 농업소득 격차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은 2018년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와 농업소득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해 같은 기간 소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은 증가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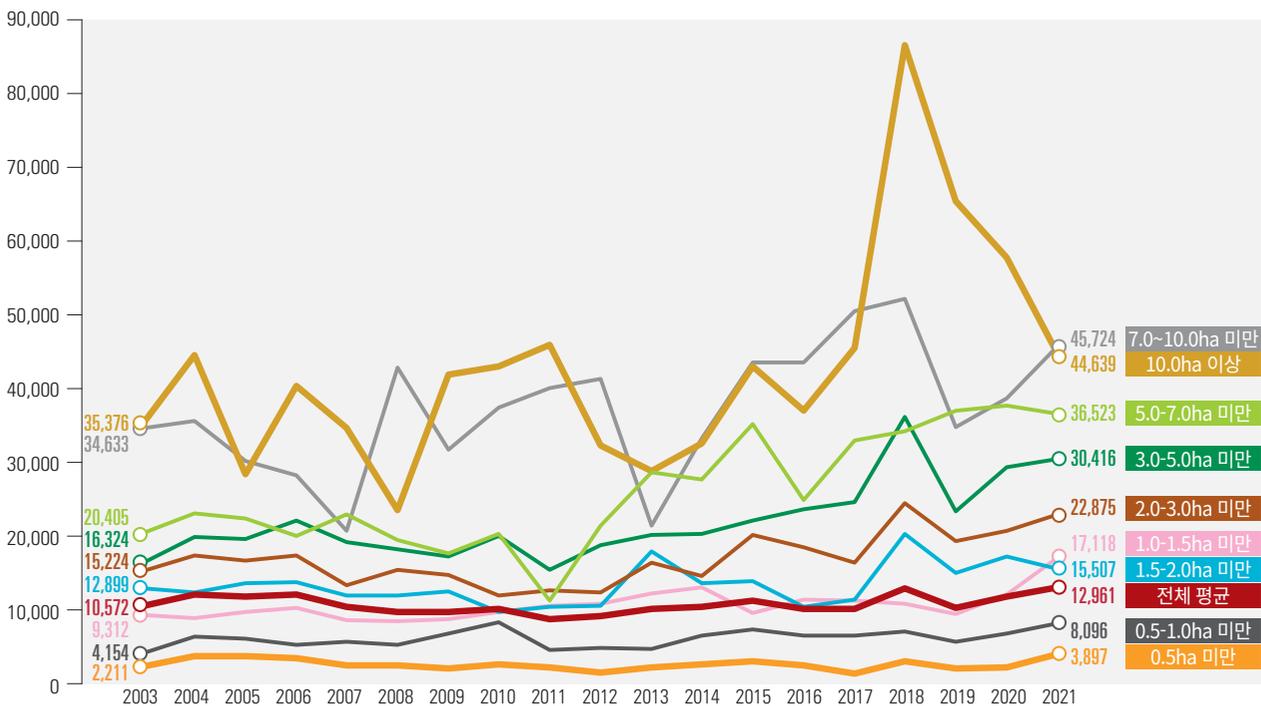
서,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농업소득 격차가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 줄어들었다.

2003년에는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이 10ha 이상인 대규모 농가의 약 6.3% 수준이었다. 이후 대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이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소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은 다소 증가하면서, 소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이 대규모 농가의 8.7%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평균 농업소득은 연평균 1.1%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 오히려 농외소득이 연평균 3.6% 증가하고, 이전소득은 연평균 11.7%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의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 비중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8년간 12.2%p가 감소했으나,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2.5%p, 23.5%p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21년에 농가소득 중에서 농외소득 비중이 37.4%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이전소득(31.0%), 농업소득(27.1%), 비경상소득(4.4%) 순으로 비중이 크다.

경지면적별 농업소득, 2003~2021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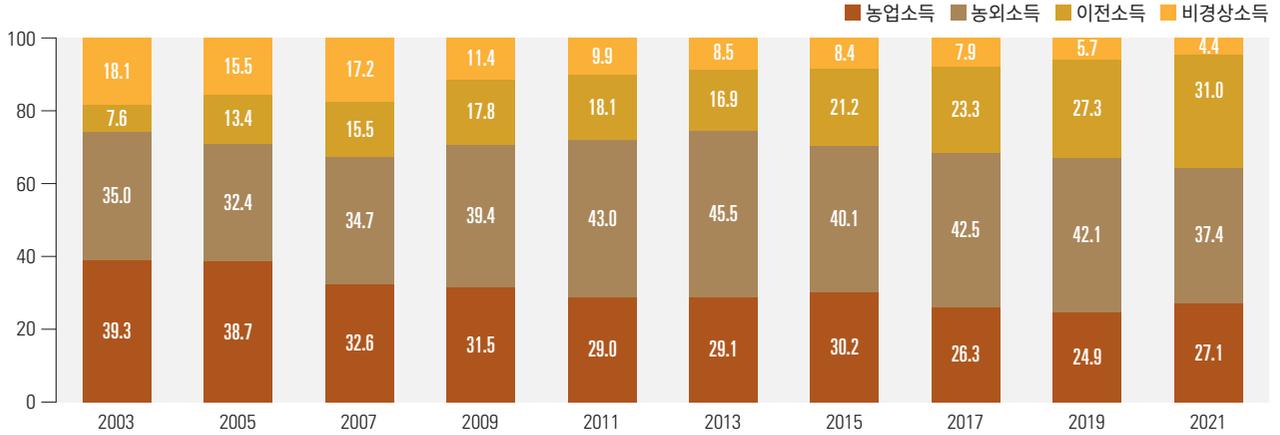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https://kosis.kr, 2022.08.20. 인출)

주 : 농가경제조사는 농가소득을 조사함.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이 중 농업소득(=농업 총수입-농업경영비, 명목 기준)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농가소득의 구성, 2003~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https://kosis.go.kr>, 2023.01.10. 인출)

주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됨. 이 중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농외소득은 농가가 농업 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합산한 금액, 이전소득은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비경상소득은 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함

###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 높아, 가축 자원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 관련 지표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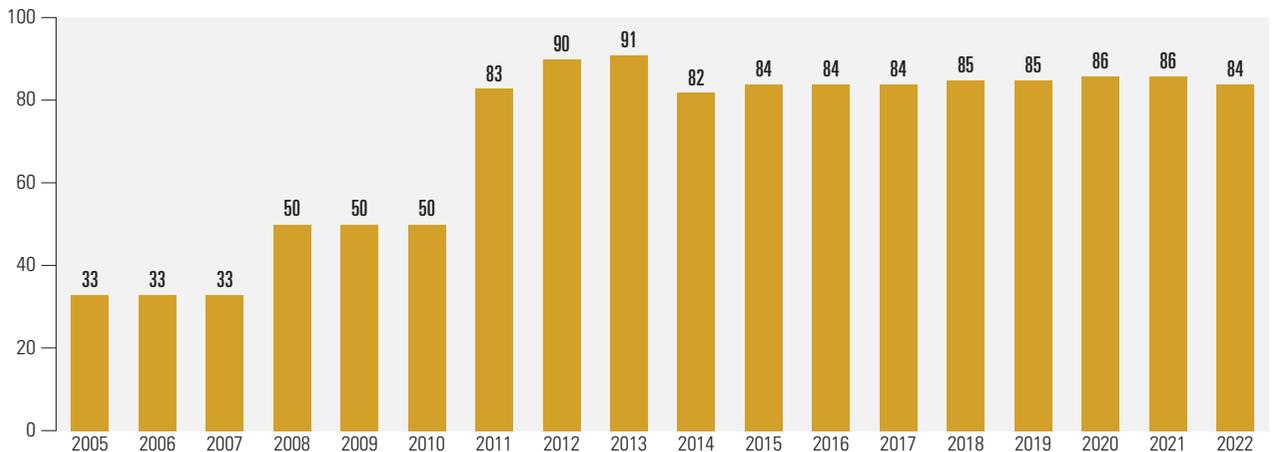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 지구적인 동식물자원의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동식물자원의 다양성 수준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진 지역(local) 가축품종 중 위험상태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을 통해 전 세계 가축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FAO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가축을 멸종위험(at risk),

멸종위험 없음(not at risk), 알려져 있지 않음(unknown)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황우(hanwoo), 흑우(heugu), 칩소(chikso) 등이 국내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황우를 제외한 흑우, 칩소가 멸종위험에 처해 있다.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8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90%와 91%까지 높아졌다가 2013년 이후 80%대로 떨어진 것이다. 최근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p 감소한 84%로 집계되어 개선의 기미도 엿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가축자원 다양성이 2010년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 2005~2022

(단위: %)



출처: FAO, DAD-IS(<https://kostat.go.kr/sdg>, 2022.12.30. 인출)

주 :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진 지역 가축품종 중 위험상태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

##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심한 편

### (☉ 관련 지표 2.c.1)

물가 상승은 국가 경제는 물론 개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급격한 물가 상승이 국가 경제의 발전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국가는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물가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에, 유엔 SDG에서는 특히 식품가격의 안정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0년에 비해 2022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70.5% 상승한 데 비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137.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기상 여건과 같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변동폭이 크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

비 증감률은 0.4~5.1% 사이를 유지해 온 데 비해,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7~10.0%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했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2006년과 2013~2014년, 2019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01~2004년과 2009~2011년, 2017년, 2020~2021년에는 전년 대비 5% 이상으로 비교적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6.7%, 8.7%로 2년 연속 급상승했고, 2022년에는 3.7%로 상승세가 다소 줄어들었다. 농축수산물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준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이들이 기본적인 건강과 영양상태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2000~2022

(기준 연도 2020=100)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https://kosis.go.kr>, 2022.12.30. 인출)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01~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https://kosis.go.kr>, 2022.12.30. 인출)

### 영 어 해 설

- **영양섭취부족자** : 에너지섭취량이 필요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평균 필요량 미만인 자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



#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SDG 3번 목표인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사회는 인류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DG 3번 목표에는 모성과 어린이 건강 보호, 감염병 및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 필수 보건요료서비스 보장 강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질병 예방, 알코올·약물·담배 등으로부터의 인류 보호 등이 세부목표로 포함된다.

만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은 건강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특히 잘 보여 주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 취약집단의 건강관리, 의료 접근성의 강화,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향상 등은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한국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3번 목표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9개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한국의 SDG 이행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른 한국의 보건 대응 핵심역량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보건요료 인력 확보는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과 흡연인구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그 수치가 개선되기보다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한국의 보건 대응 역량 OECD 국가 상위권 유지

### (📌 관련 지표 3.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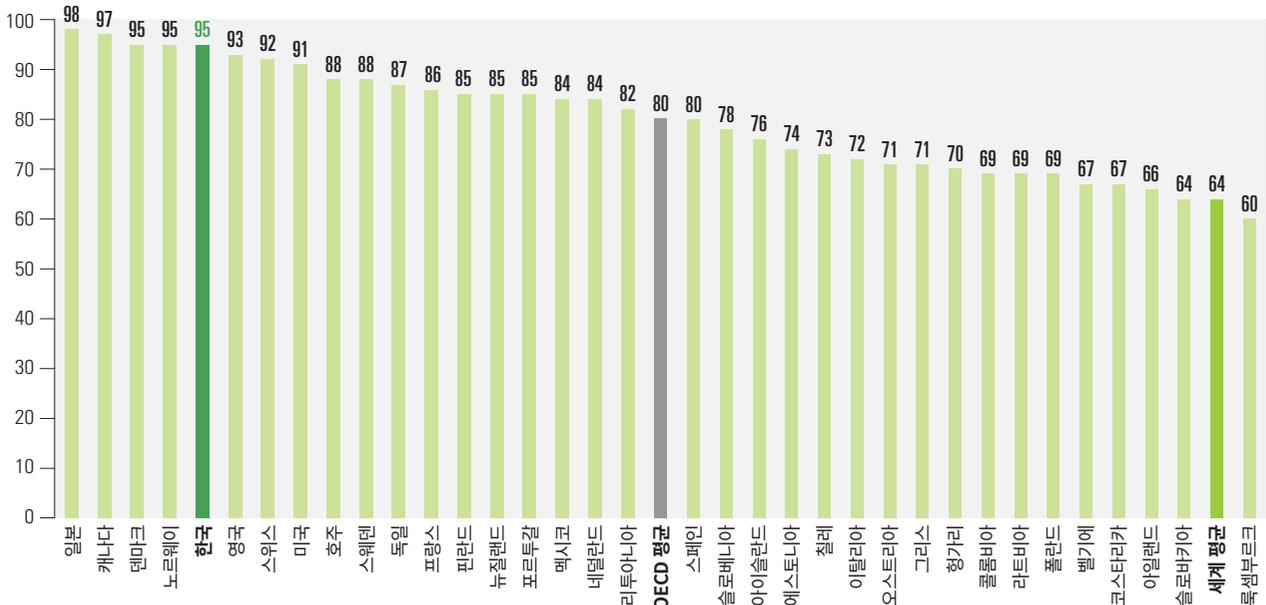
국제보건규칙(IHR)은 WHO 회원국이 공중보건위기를 예방, 감지, 대응하도록 하는 회원국 간의 법적 규제이며, 이 규제에 기반한 SDG 지표 3.d.1은 모든 국가가 조기경보, 위험저감, 국가 및 국제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IHR은 총 15개 핵심역량 항목으로 평가된다. 각각은 1. IHR 이행을 위한 정책적·법적·규범적 도구, 2. IHR 조정 및 국가 연락체계, 3. 재정, 4. 실험실 진단체계, 5. 감시, 6. 인적 자원, 7. 국가보건 비상체제, 8. 보건서비스 제공, 9. 감염 예방 및 관리, 10. 위험소통

및 지역사회 참여, 11. 검역, 12. 동물원성 및 인수공통 감염, 13. 식품 안전, 14. 화학물질 사고, 15. 방사능 비상이며, 이 중 감염 예방 및 관리는 2021년에 신설되었다.

2021년 한국의 IHR 평가 결과를 보면 95%로, 세계평균(64%)에 비해 높고,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별 평가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거의 유지되었다. 15개 항목 모두 세계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정책적·법적·규범적 도구 항목(1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을 밑도는 분야가 3곳으로 파악되었다. 보건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OECD 국가의 보건 대응 역량 평가 결과, 2021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01.04. 인출)



응급에서의 성평등(1.2 항목), 대부분 IHR 조정체계(2.2 항목), 사례 관리(8.1 항목)가 그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단되었다.

특히, 성평등의 경우 2021년 신설된 세부항목으로, IHR 역량에 관련한 젠더 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격차 해

한국의 IHR 세부 역량, 2021 (단위: %)



출처: WHO, e-SPAR: IHR score per capacity(<https://extranet.who.int/e-spar#capacity-score>, 2023.01.04. 인출)

주: 2018~2020년 평가항목(13개)과 비교하면 '감염 예방 및 관리' 항목이 신설되고, 기존 '정책 및 재정' 항목이 'IHR 이행을 위한 정책적·법적·규범적 도구'와 '재정' 2개 항목으로 분할, 기존 '위기소통' 항목은 '위기소통 및 지역사회 참여' 항목으로 변경됨

소를 위한 계획, 예산, 이행체계 등을 마련·운영하는지를 평가한다.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건강 정보와 서비스 접근의 문제로 이어지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높다. 한국도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보건 정책에서 성평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인력 증가 추세, 하지만 OECD 평균에는 못 미쳐** (☉ 관련 지표 3.c.1)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사회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임상 의사와 임상 간호사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임상 의사는 2019년에 비해 2756명 증가해 인구 1000명당 2.51명이며, 임상 간

보건의료 인력 밀도, 2010~2020 (단위: 인구 천 명당 명)



출처: OECD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2023.01.16. 인출)

사회복지 인력 밀도, 2010~2020 (단위: 인구 천 명당 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https://kosis.kr>, 2022.08.08. 인출); 통계청, 장래추계인구(<https://kosis.kr>, 2022.12.30. 인출)

호사는 1만 169명 증가해 인구 1000명당 4.35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3.67명, 임상간호사 8.06명에 달한다. 특히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은 오스트리아(5.35명), 노르웨이(5.09명), 스페인(4.58명) 등과 간호사 수가 많은 노르웨이(18.01명), 독일(12.06명), 스위스(11.81명) 등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커졌다. 한국의 사회복지사 인구는 2010년 2200명에서 2020년 4136명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사 수는 0.08명,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사 수는 0.51명에 그친다. 고령사회에서 보건의서비스가 확대되고 건강권이 강화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 인력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 HIV 신규 감염자 수는 OECD 중 매우 낮은 수준 유지

(☉ 관련 지표 3.3.1)

SDG 세부목표 3.3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소외열대질환 등 감염성 질병의 대규모 확산 근절을 목표로 한다. 이 중 지표 3.3.1인 HIV 신규 감염자 수는 한국에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지 않고 있다. 신규 감염자의 90% 이상은 남성인데, 남성 감염자 수 역시 2016년부터 증가세를 멈췄다. 2020년 이후 신

규 감염자 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21년 기준 0.0149명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의 국제 통계와 비교하자면 노르웨이(0.01명), 슬로베니아(0.01명), 그리고 일본(0.00명)의 3개국만이 한국보다 신규 감염자 수가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연간 1000명 이내로 매우 적긴 하지만, 세계 평균이 2000년 1000명당 0.48명에서 2020년 0.19명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환자 수는 2010년대 중반 이래 한동안 정체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실질적인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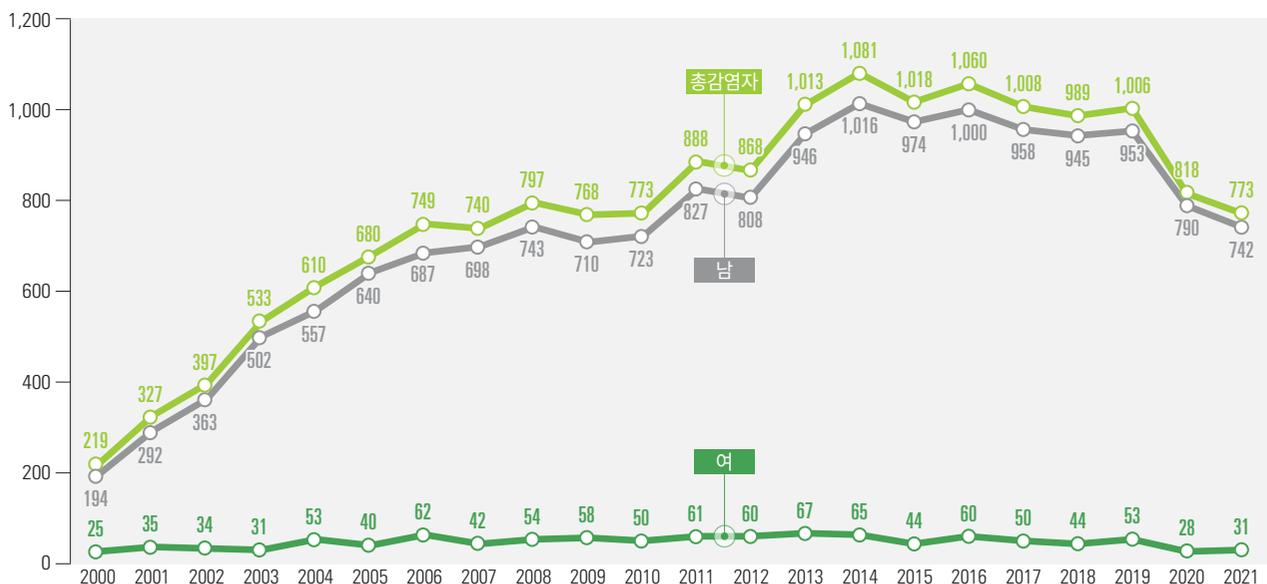
### 흡연을 감소 추세, 남성 흡연율 OECD 중 상위

(☉ 관련 지표 3.a.1)

WHO는 담배를 전염병(epidemic)으로 규정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도입했다. 이 협약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 사용과 담배 연기 노출이 사망과 질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태아와 어

성별 HIV 신규 감염자 수, 2000~202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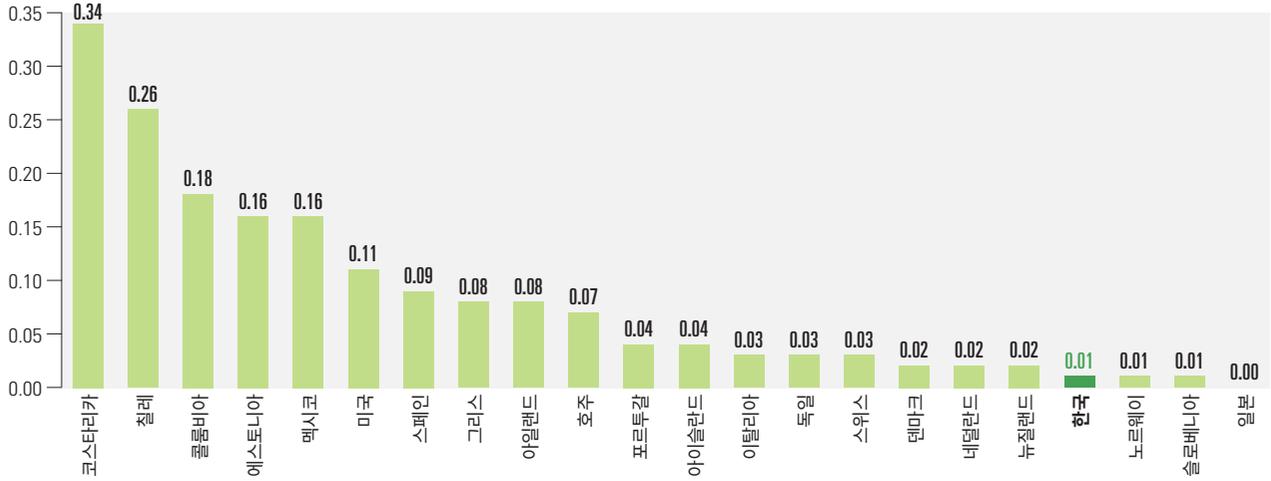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HIV/AIDS 신고현황(https://kosis.kr, 2023.01.04 인출)



### OECD 국가별 HIV 신규 감염자 수, 2020

(단위: 비감염 인구 천 명당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10.25. 인출); 질병관리청, 2021년 감염병 감시연보  
 주1 :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UNAIDS 모델링 소프트웨어(Spectrum)를 활용해 추정된 발생률임  
 주2 : 미국은 2019년, 스위스는 2018년 데이터임

린이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행히, 한국 성인(19세이상)의 흡연율은 200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의 흡연율은 2001년 60.9%에서 2020년 34.0%로 약 20년 만에 25%p 이상 감소했다. 이에 비해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남성보다 크게 낮지만 2001년 5.2%에서 2020년 6.6%로 거의 변화가 없다.

청소년(고등학생)의 흡연 역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2005년 22.4%에서 2021년 10.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여학생도 13.5%에서 4.2%로 감소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여학생의 흡연율은 2016년부터 뚜렷

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성인 여성의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정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29세 여성의 흡연율이 성인 여성 전체에 비해 높은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체 중인 여성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20대 성인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상황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체 흡연율은 OECD 중앙값보다 낮다. 성별로 흡연율을 나누어 보면 추가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이지만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다. 이는 한국 여성의 흡연율이 OECD 중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가장 낮다는 점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남성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 성별 성인 흡연율, 2001~2020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2.09.08. 인출)  
 주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비율을 측정함

성별 고등학생 흡연율, 200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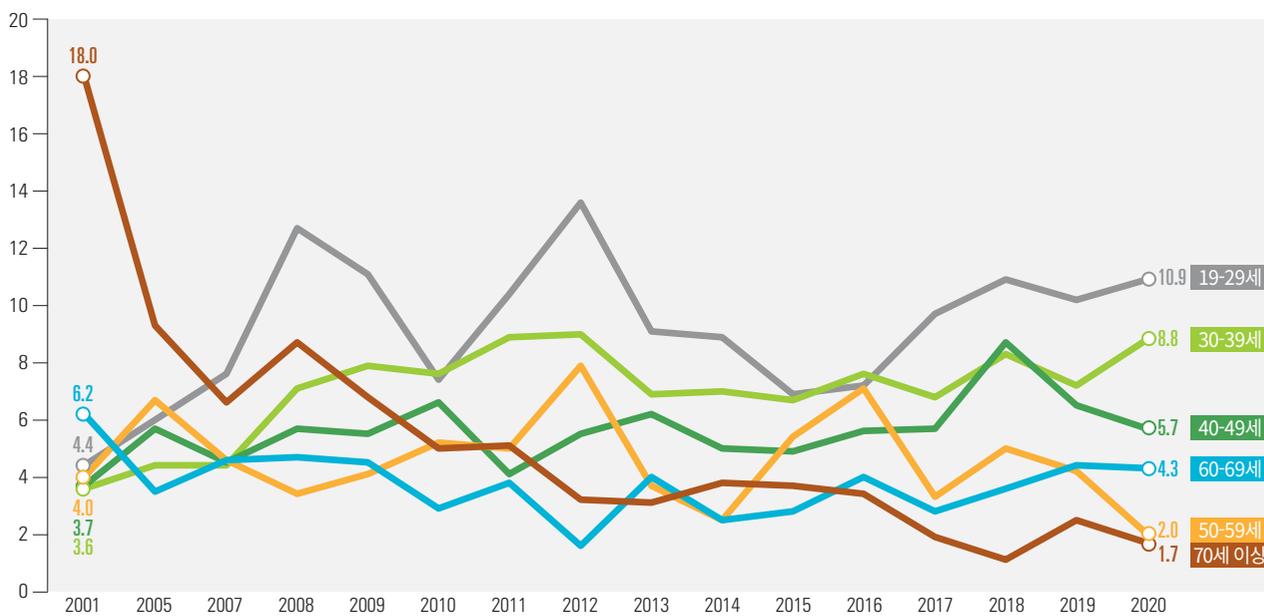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https://kosis.kr>, 2022.09.08. 인출)

성인 여성 연령대별 흡연율, 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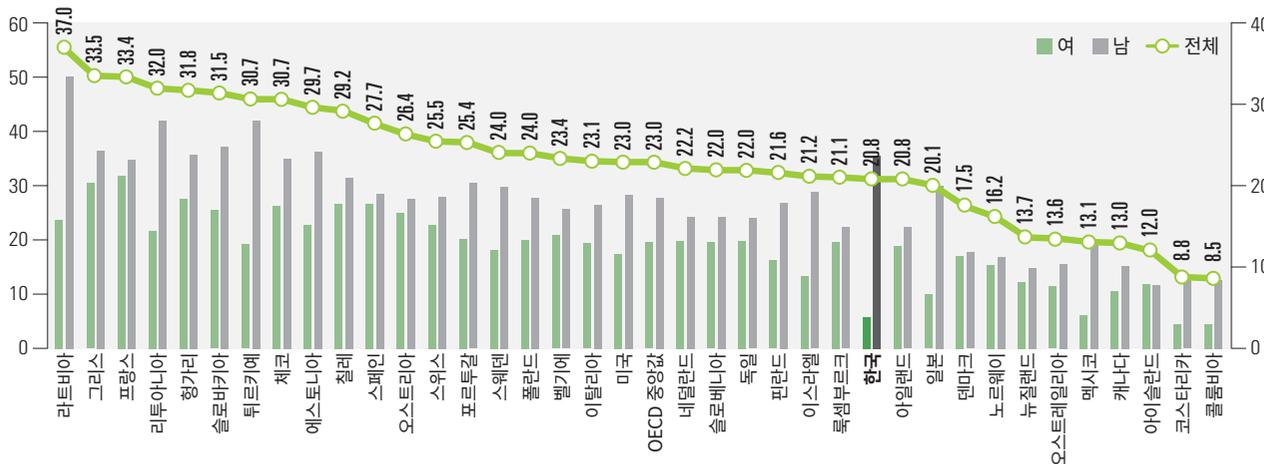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2.09.08. 인출)

OECD 국가별 15세 이상 흡연율, 2020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09.10. 인출)



# 4 QUALITY EDUCATION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SDG 4번 목표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은 SDG 프레임워크에서 핵심 기제(key enabler)로 여겨지는 중요한 목표다(United Nations, 2022). 이번 이행보고서에서는 목표4가 다루는 생애 전 주기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유아 교육부터 평생 교육까지의 관련 지표를 분석했다.

한국의 만 5세 아동 취원율은 2010년대 초반 크게 상승해 현재까지 9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날로 강조하는 전 세계적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한국 교육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초·중등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 이래 국제적으로 최상위권 수준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읽기 및 수학 영역에서 최소숙달수준의 학생 비율이 최근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된다(통계개발원, 2021). 또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통 학력 이상’으로 분류되는 학생의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최근 ‘세계시민교육(GCED)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주류화된 정도’ 지표가 처음으로 보고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었다. 한국은 관련법에서 GCED와 ESD의 실현을 강조하거나 의무화하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 관련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는 등 GCED와 ESD를 교육의 중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평생 교육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지식·기술 재교육 필요성 증대 등의 거시적 흐름을 배경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OECD, 2021). 한국 성인의 평생 교육 참여율은 2018년부터 40%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감소해 2021년에는 30.7%에 그쳤다. 평생 교육 참여율은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성인 평생 교육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 높은 국제 학업성취도 수준 유지, 코로나19 이후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 감소 추세 지속

### (◎ 관련 지표 4.1.1)

한 국가의 학업성취 수준은 해당 국가의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늠자 중 하나다. 특히 ‘최소숙달수준(minimum proficiency level)’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국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의 포용성과 형평성까지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는 국어·수학·영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총 4단계(4수준: 우수, 3수준: 보통, 2수준: 기초, 1수준: 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하며, ‘3수준(보통 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과 ‘1수준(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공표하고 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매년 발표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화 추이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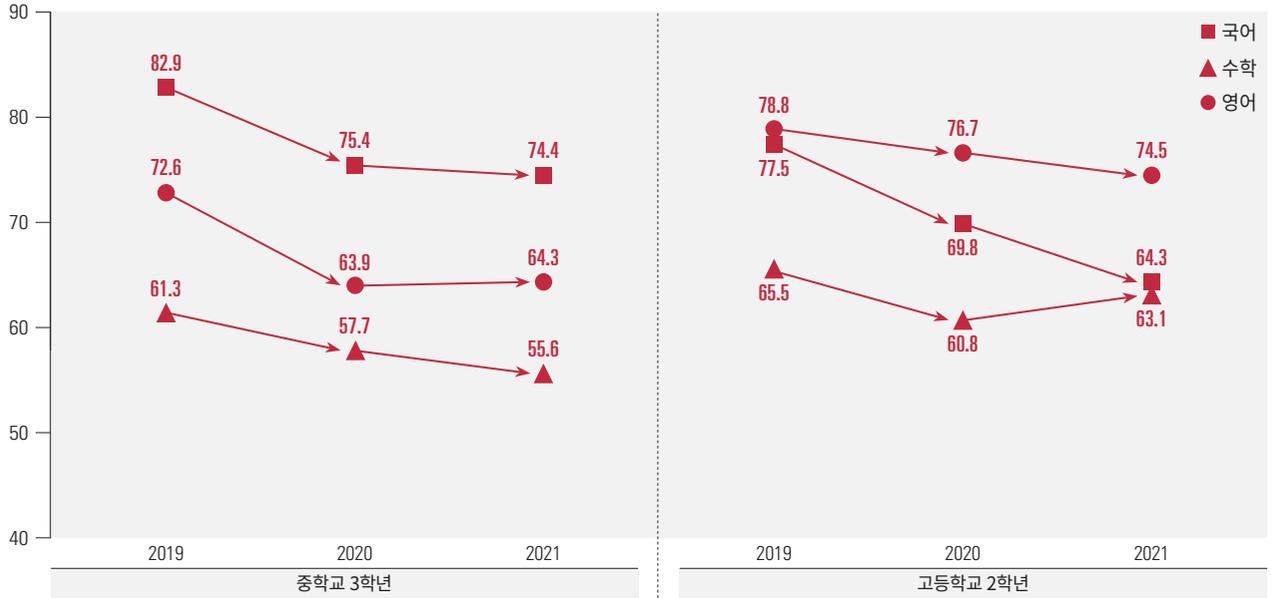
펴볼 수 있다. 특히 이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후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2021년 기간에 ‘3수준(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모든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019~2020년 사이에는 중3과 고2의 모든 과목에서 그 비율이 하락했다. 이에 2021년부터는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결과 2021년 일부 과목에서 소폭 상승세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 과목에서 ‘3수준(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보였다. 요약하자면, 주요 과목에서 보통 수준 미만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했고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발생 2년 차인 2021년에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가 교육의 포용성과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



### 국어·수학·영어 '3수준(보통 학력) 이상' 중·고등학생 비율, 2019~2021

(단위: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각 연도  
 주 : 성취수준은 4단계(4수준: 우수, 3수준: 보통, 2수준: 기초, 1수준: 기초학력 미달)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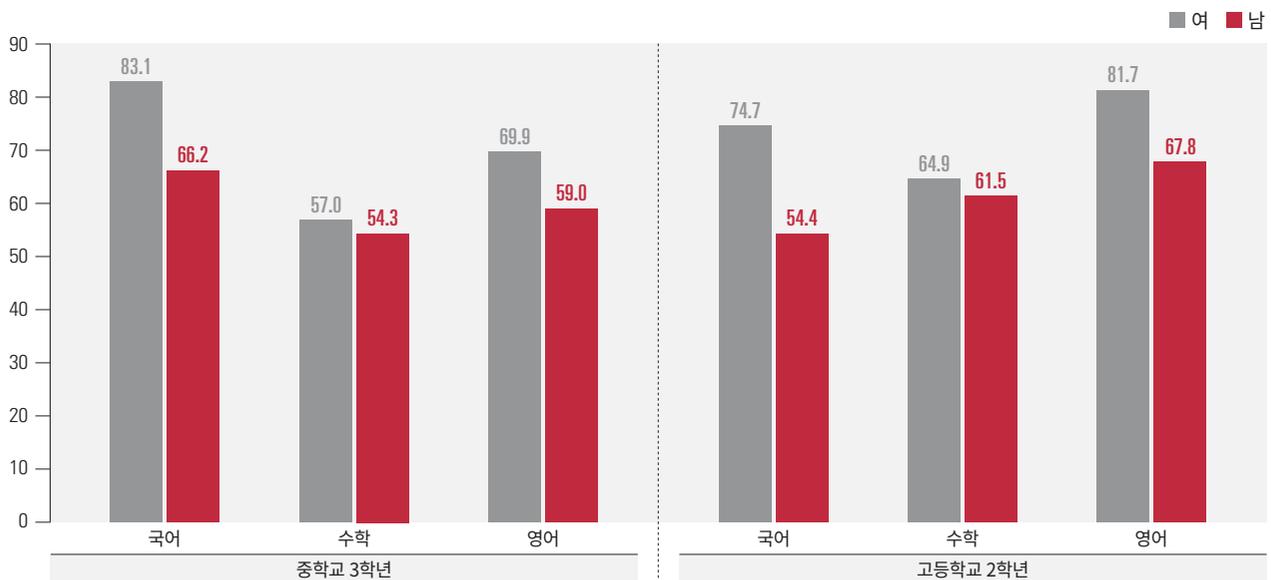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업성취도는 남녀 학생과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학업성취 수준을 성별 및 지역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읍면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에서 '3수준(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3수준(보통 학력)

이상'인 여학생의 비율은 같은 수준의 남학생 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이러한 경향은 중3과 고2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지역 규모별로는 중3의 모든 과목과 고2의 수학에서 '3수준(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읍면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별 및 지역 규모별 학업성취도 격차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

### 성별 국어·수학·영어 '3수준(보통 학력) 이상' 비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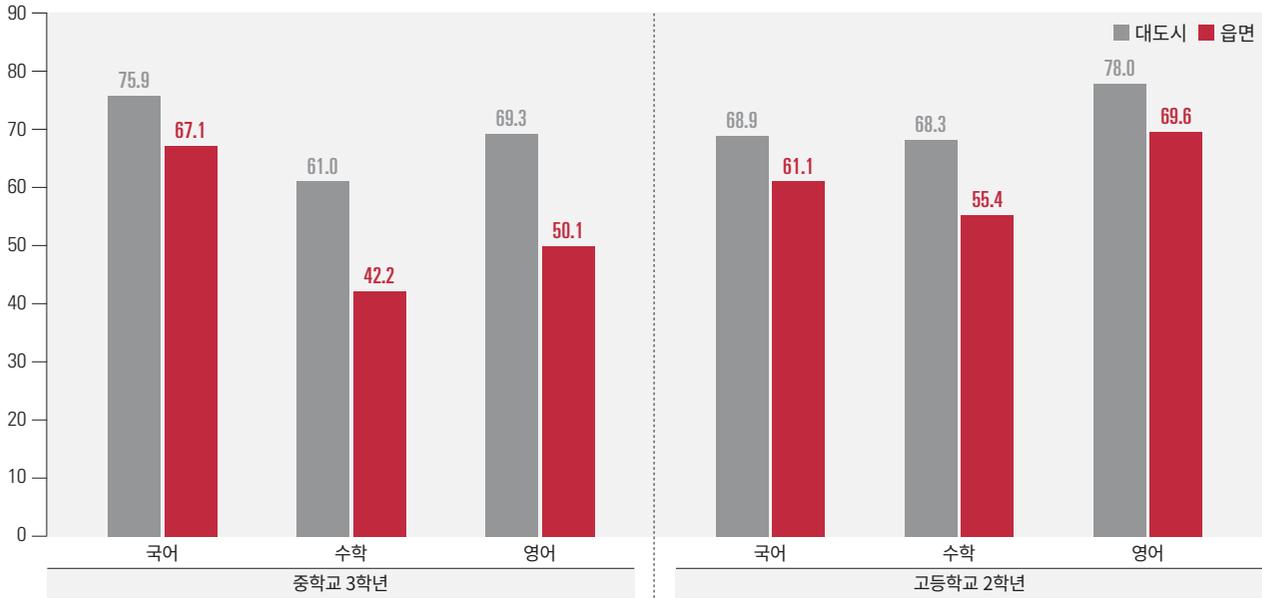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21

지역 규모별 국어·수학·영어 '3수준(보통 학력) 이상' 비율, 2021

(단위: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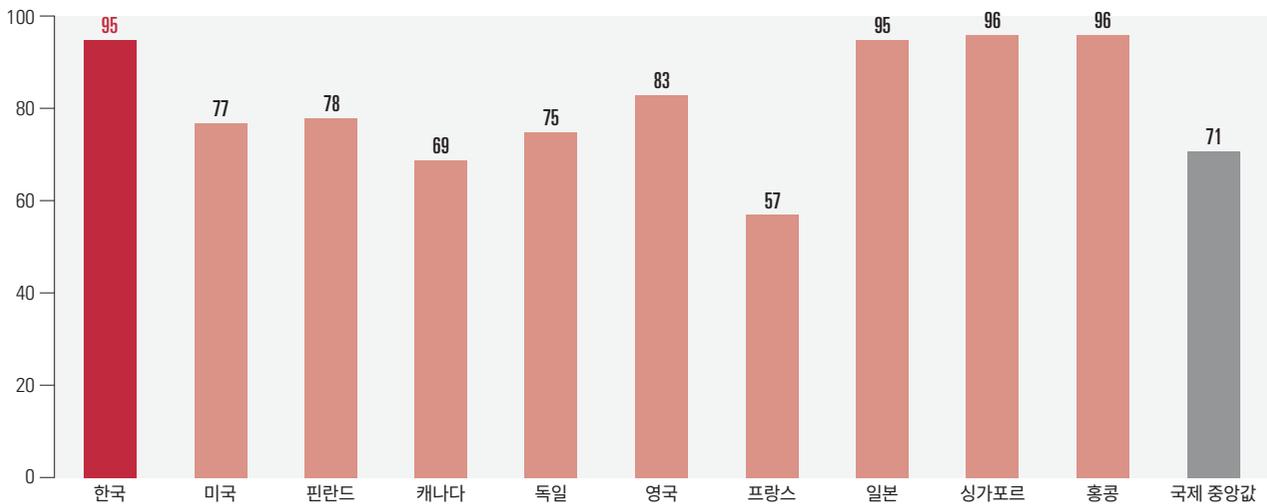
상으로, 그 추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원인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요구된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다른 나라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최상위권 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여 왔다. 최소숙달수준 도달 아동·청소년의 비율 역시 높은 편에 속한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의 수학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 2019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소숙달수준 도달 학생 비율은 95%에 달한다. 이는 국제 중앙값인 71%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북미 및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자료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주요국별 최소숙달수준 도달 학생 비율(초등학교 4학년, 수학), 2019

(단위: %)



출처: IEA, TIMSS, 2019

주1 : 최소숙달수준은 TIMSS 2019의 '보통 수준 이상(475점 이상)'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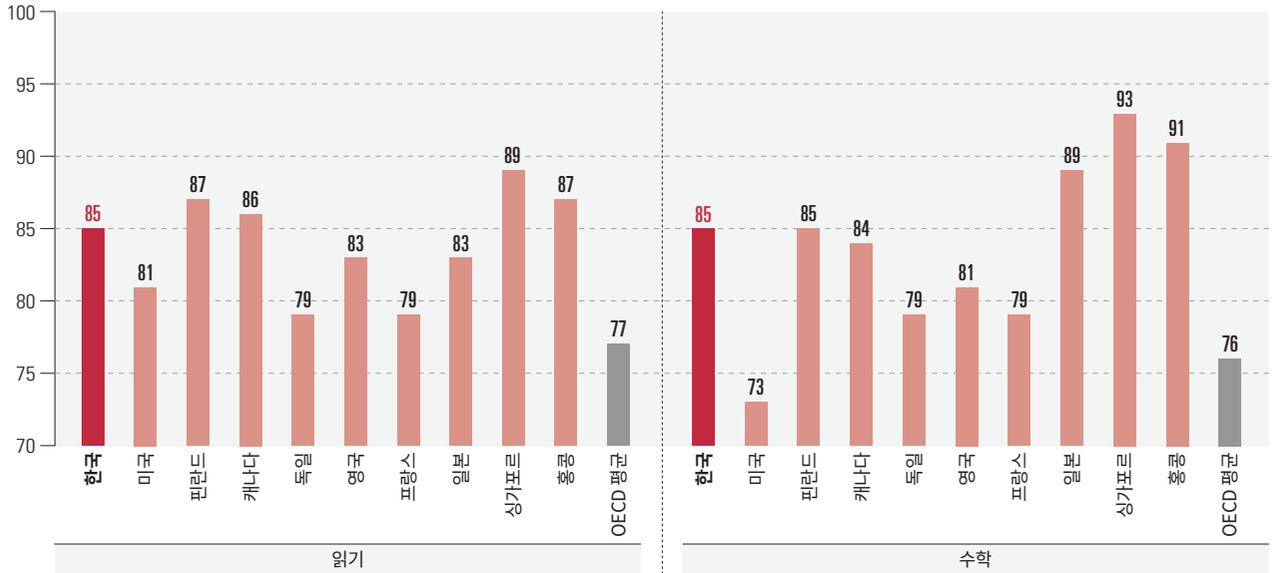
주2 : TIMSS 2019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일부 국가는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함

주3 : 주요국은 한국의 주요 교육 벤치마크 국가를 참고해 저자가 선정함



### 주요국별 최소숙달수준 도달 학생 비율(만 15세, 읽기·수학), 2018

(단위: %)



출처: OECD, PISA, 2018

주1 : 최소숙달수준은 PISA 2018의 '2수준 이상(42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함

주2 : 주요국은 한국의 주요 교육 벤치마크 국가를 참고해 저자가 선정함

2018년 PIS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학생 중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은 각각 85%로 나타난다. 이는 OECD 평균인 77%와 7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북미 및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거나 비슷하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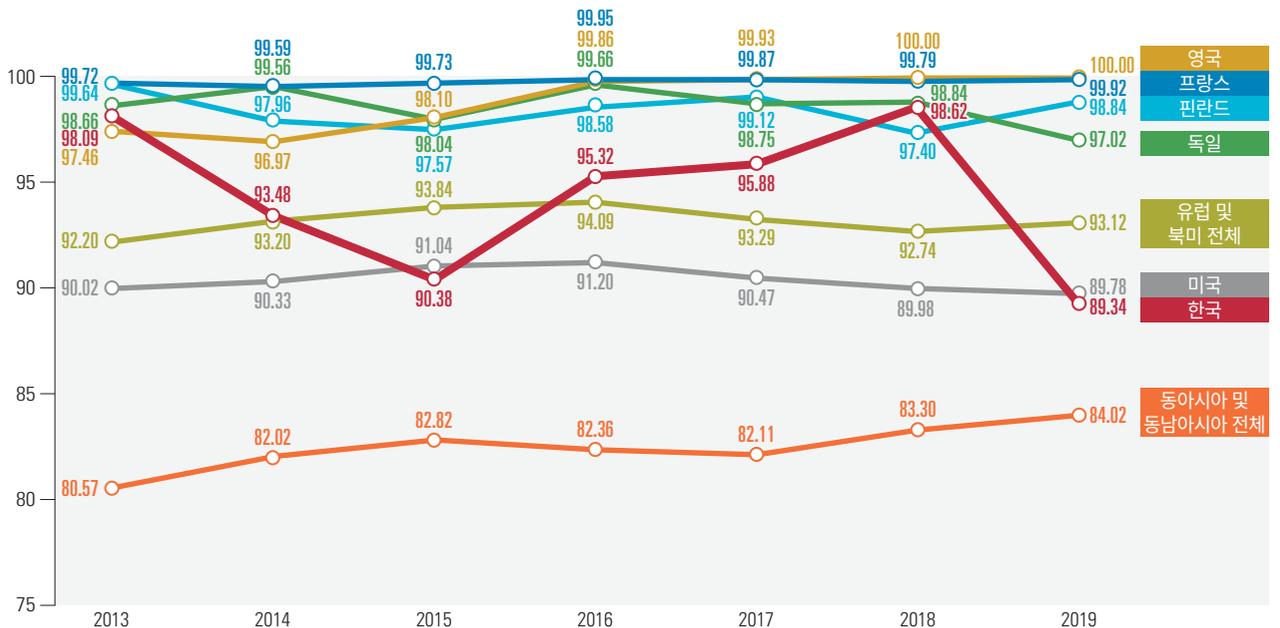
### 만 5세 아동 취원을 90% 전후 수준 유지

(☞ 관련 지표 4.2.2)

SDG 지표 4.2.2는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아동 중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국에서 유아 교육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를

### 주요국별 초등입학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 2013~2019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08.26. 인출)

주1 :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이며, 한국은 만 5세 아동의 데이터임

주2 : 주요국은 가용 자료가 있는 국가 중 한국의 주요 교육 벤치마크 국가를 참고해 저자가 선정함

주3 : 한국의 수치가 2019년에 감소한 이유는 인구추계(유엔) 과정에서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반영되지 못해 만 5세 인구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보여 준다. 비교적 최근부터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영유아기의 교육 경험이 유아기의 단기적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중·장기적 차이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며(이정원 외,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영유아기 교육은 한 국가의 교육 포용성과 형평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만 5세 아동 취원율은 2013~2019년 기간 동안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90% 초·중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취원율은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책이 2012년부터 도입된 것과 관련이 깊다. 누리과정 정책의 영향은 OECD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10년에는 만 3, 4, 5세 아동의 취원율이 각각 78.0%, 82.5%, 88.7%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각각 92.3%, 93.8%, 97.2%로 상승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초등교육 입학연령 1년 전 아동의

취원율은 유럽·북미 및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전체 평균을 전반적으로 상회한다. 그러나 일찍부터 유아 교육 보편화 정책을 추진한 유럽 국가들인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서문희, 2006)과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9년 기준 한국 남아와 여아의 취원율은 각각 89.1%와 89.6%로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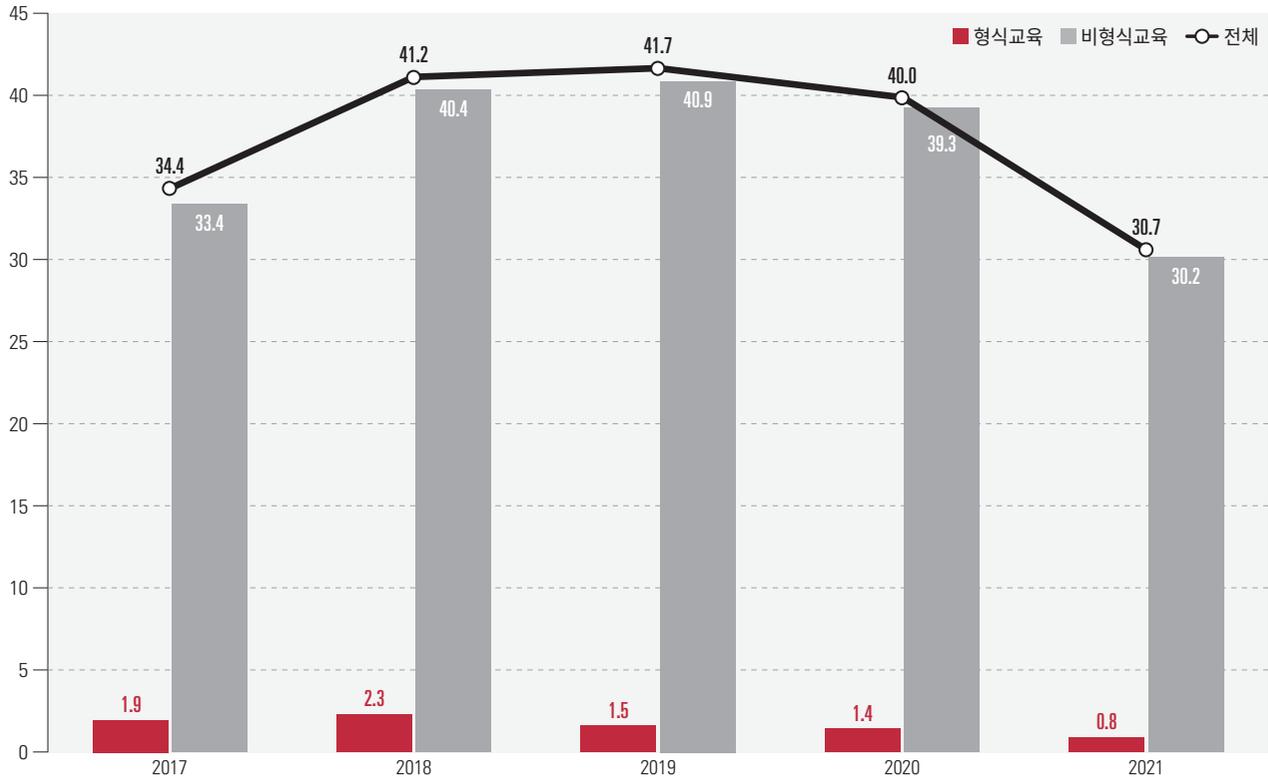
### 코로나19 시기 평생학습 참여율 큰 폭 하락,

#### 취약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 낮아 (○ 관련 지표 4.3.1)

SDG 지표 4.3.1은 학령기(또는 의무교육) 연령을 지난 청소년 및 성인의 평생 교육 참여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자료가 이 지표에 활용되고 있다. 성인(25~79세)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부터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2017년 34.4%에서 2019년 41.7%까지 높아졌다가 2020년에 40.0%로 소폭 낮아지고 2021년에는 30.7%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의 이러한 하락 추세는 대면 교육 형태로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2017~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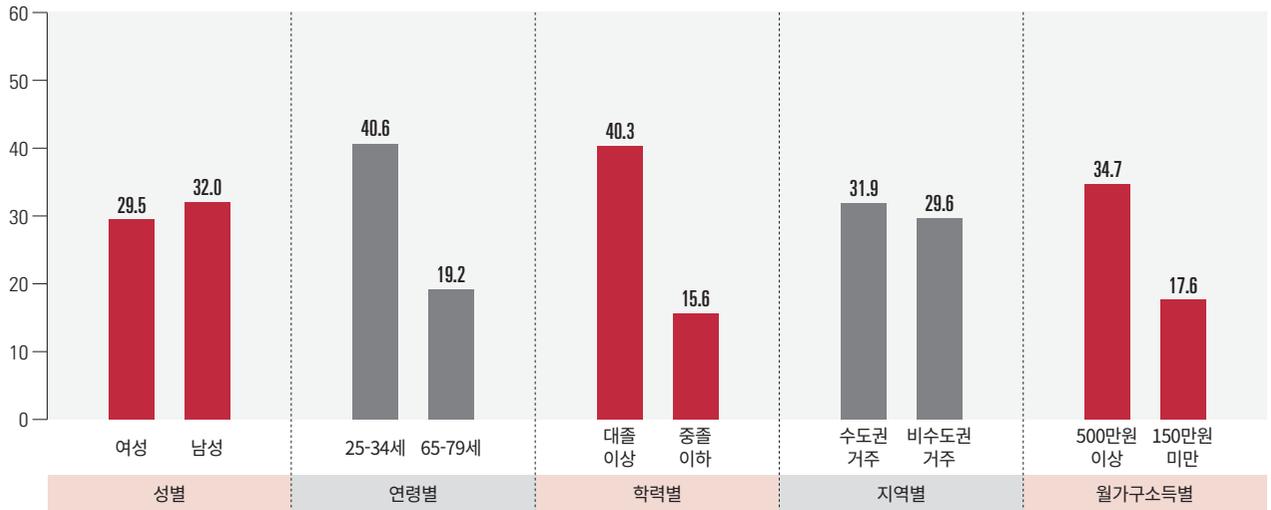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각 연도

주1: 만 25~79세 성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을 측정함. 단, 2019년까지는 만 25~64세 성인 기준

주2: 2020년까지 전년도 7월부터 조사 연도 6월까지의 1년을 조사했으며, 2021년부터는 전년도 1월부터 전년도 12월까지의 1년을 조사함

주3: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원)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며,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21  
주 : 만 25-7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운영되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열리기 어려웠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22). 평생학습 참여율은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여성, 고령자(65~79세), 중졸 이하, 비수도권 거주자, 저소득자(월 150만 원 미만)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비교대상 집단보다 낮게 나타난다. 평생 교육이 생애 직업 역량과 은퇴 후 건강, 삶의 질 등과 직접 연관되는 요소임을 고려하면, 평생 교육 참여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노력 드러나 (☉ 관련 지표 4.7.1)**

SDG 지표 4.7.1은 2021년부터 보고되기 시작한 지표로,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각국 교육체제의 세부 영역(국가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에서 주류화된 정도를 보여 준다. 이 지표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각국의 교육 당국이 제출한 응답에 기반해 산출된다. 지표 수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GCED와 ESD가 더 주류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가교육정책 영역에서 1.000의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 교육 당국이 ‘한국의 교육법과 정책에서 GCED와 ESD가 얼마나 주류화되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높은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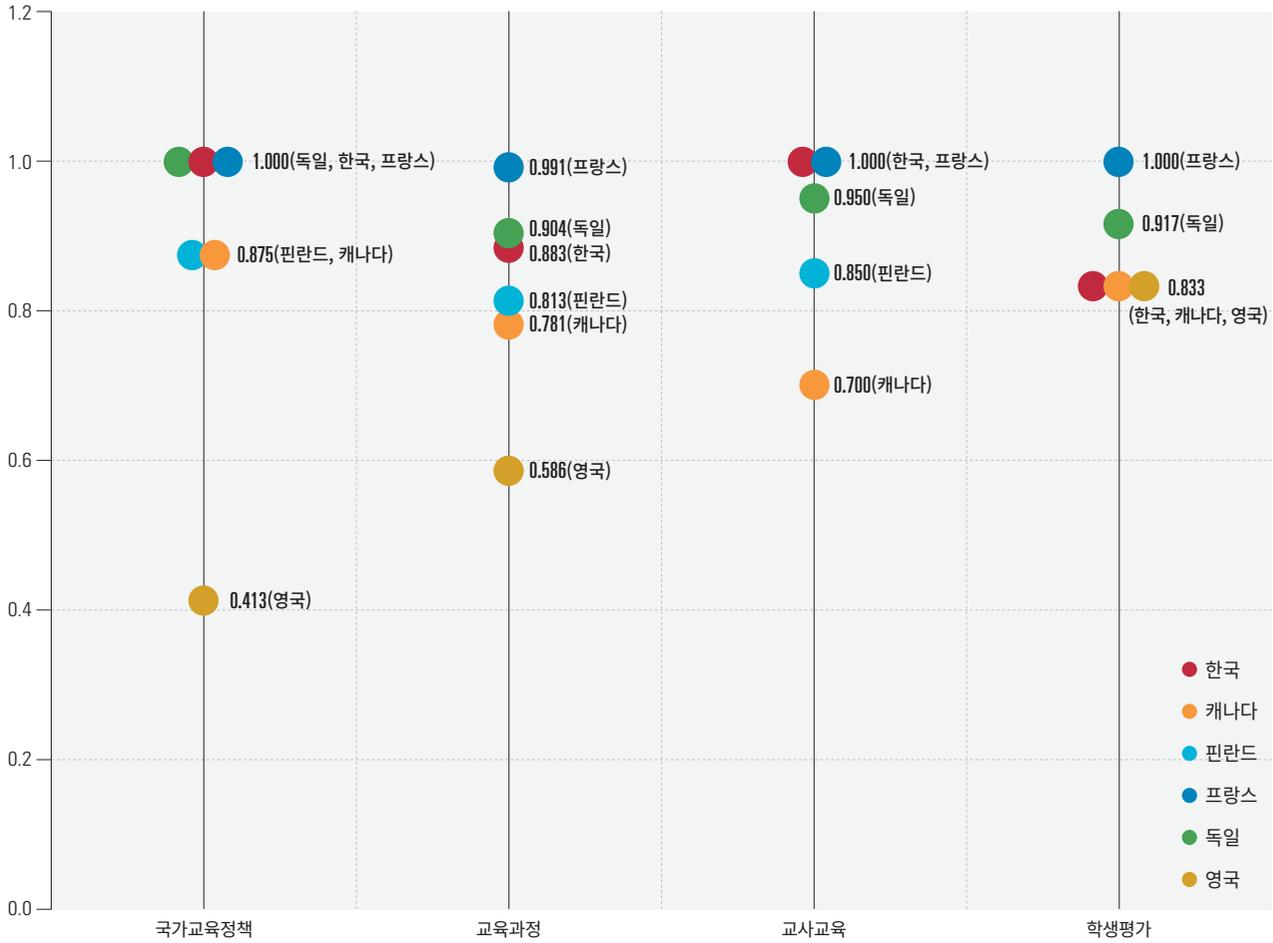
응답을 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주류화 정도는 국가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영역에서 각각 1.000, 0.883, 1.000, 0.833으로 측정된다. 이 수치는 정성적 응답에 기반해 산출되었고 비교 가능한 종단적 수치도 없기 때문에 수치의 절대적 크기만으로 주류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 교육에서 GCED와 ESD를 위한 여러 정책적 접근 및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제 교육기본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법령과 정책·계획 등에서 GCED와 ESD의 실현을 강조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범교과 학습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 국가 교육과정에서 GCED와 ESD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5; 이공연, 2017).

국가 교육과정에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교사교육, 학생평가 등 교육체제 전반에서도 GCED와 ESD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도 다양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정책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유혜영 외, 2017).

주요국별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육체제에서 주류화된 정도, 2020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08.26.인출)

주 : UNESCO, Implementation of the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설문 결과로 0~1의 값으로 나타냄

주요  
실적  
요약

- **최소숙달수준** : 특정 과목(예: 수학, 읽기)에서의 기초지식(basic knowledge) 벤치마크 수준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측정됨
- **세계시민교육(GCED)** : 학습자가 모두에 대한 존중을 함양하고,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하며, 책임감 있고 선제적인 세계시민이 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



# 5 GENDER EQUALITY



#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북경행동강령이 선포된 이후 성평등 달성은 국제적으로 주요 정책목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각종 폭력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SDG 체계에서도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 선포 이후 한국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1995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년) 등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도입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성불평등 문제가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정치, 행정, 민간 부문 등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와 관리자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한국 사회가 현재보다 더 나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 리더의 양적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낮은 수준

### (📌 관련 지표 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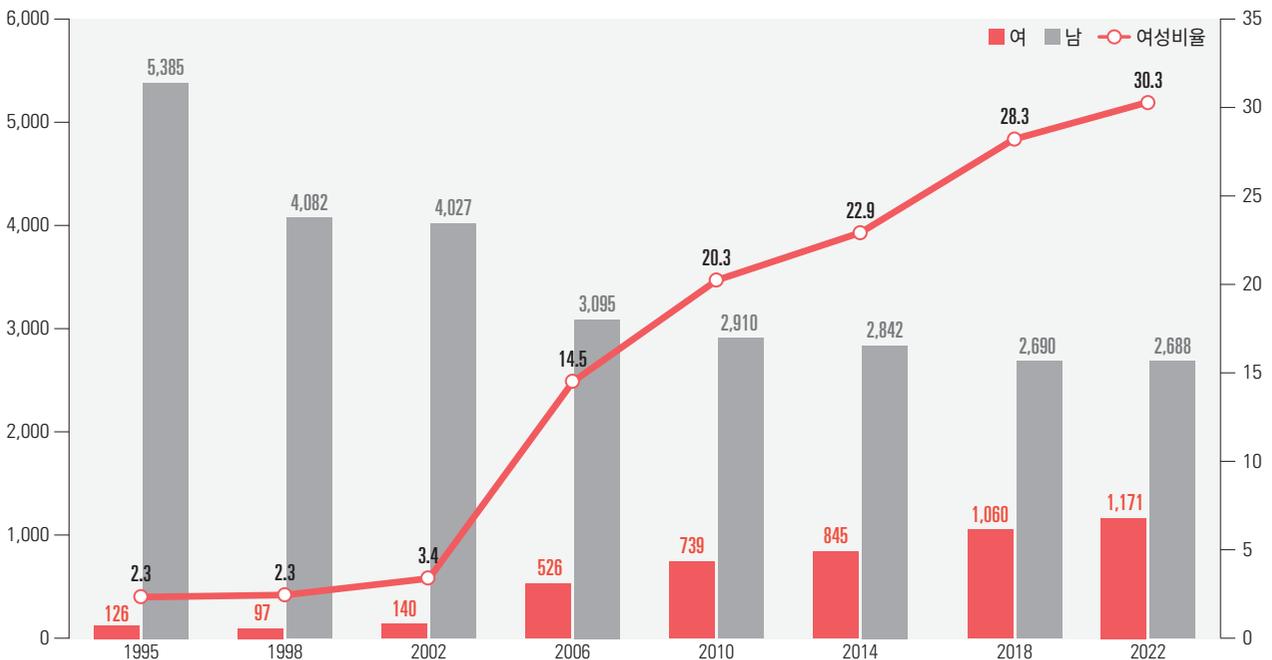
지난 25년 동안 지방의원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06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실시된 선거에서는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30.3%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승을 이끈 주요한 요인은 2005년에 비례대표 의원의 5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개정 때문이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47.0%)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며, 가장 낮은 국가인 일본(14.3%), 튀르키예(10.1%)와는 약 33~37%p의 격차를 보인다. 한국은 OECD 33개국 중 19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는데,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30.5%), 폴란드(30.0%)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 의원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은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치러

여성 지방의원 수 및 비율, 1995~202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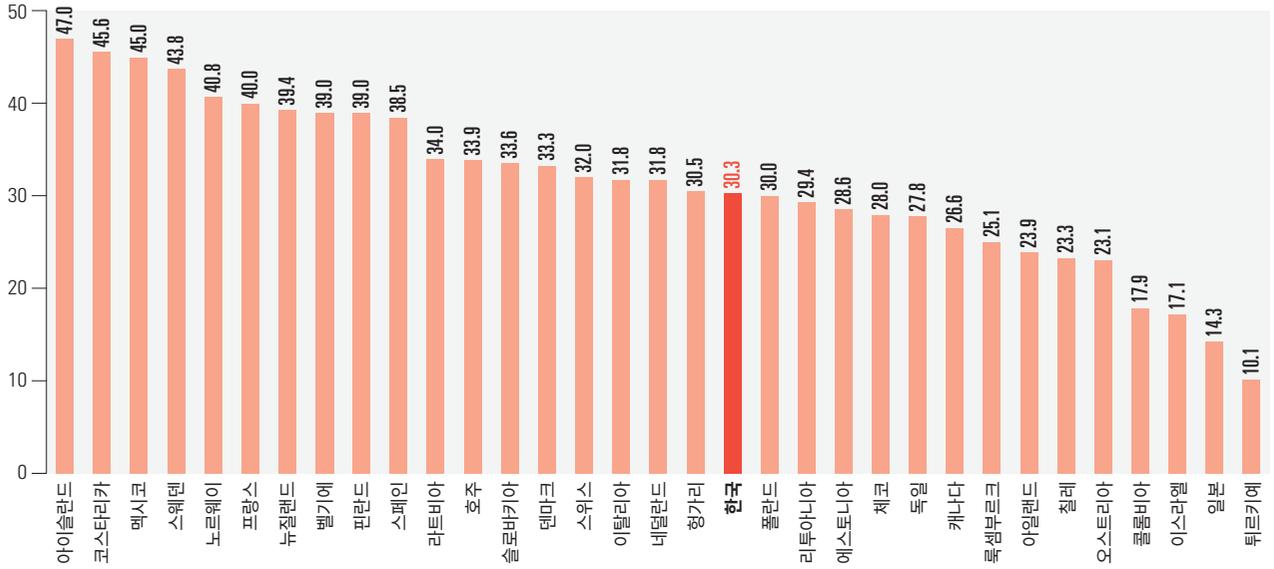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022.08.30. 인출)  
 주 : 광역 및 기초의원 수를 의미하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포함



### OECD 국가별 지방의원 여성 비율, 2020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unstats.un.org/SDG/dataportal>, 2022.09.01. 인출)

주 : 한국은 2022년, 멕시코, 벨기에, 호주, 슬로바키아, 폴란드, 오스트리아는 2019년, 핀란드, 라트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캐나다, 칠레는 2018년, 코스타리카는 2017년임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성별 현황, 1995~2022

(단위: 명)

구분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2022
광역자치단체	15	16	16	16	16	17	17	17
- 남성	15	16	16	16	16	17	17	17
- 여성	0	0	0	0	0	0	0	0
기초자치단체	230	232	232	230	228	226	226	226
- 남성	229	232	230	227	222	217	218	219
- 여성	1	0	2	3	6	9	8	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022.8.30. 인출)

진 1995년부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2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1명도 없었다. 여성 기초자치단체장도 전체 226명 중 단 7명으로 3.1%에 불과했다. 종합해 보면, 지난 27년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여성 비율은 개선됐지만, 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방정치가 돌봄, 보건, 교육, 문화, 여가 등 생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보다 여성의 대표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 낮은 편 (☞ 관련 지표 5.5.2)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자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21년 기준 관리자급(4급 이상) 국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9.7%에 불과하다. 이들과 같은 직군인 국가 공무원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전체 중 여성 비율이 2021년 40.6%에 이르는 것과 대조된다. 즉 같은 직군 내에서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직군 전체 여성 비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여성 비율은 계속 상승해왔다.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전체의 여성 비율은 2010년 28.6%에서 2021년 40.6%로 12.0%p 상승했고, 같은 시기 관리자급 여성 비율도 2010년 6.3%에서 2021년 19.7%로 13.4%p 상승했다. 한편 2021년 기준 국가 공무원(행정부) 전체에서의 여성 비율은 48.2%로 전체 대비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7~2019년에는 50%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2020년 4월 지방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그 비율이 47.9%로 감소했다. 이는 소방직군에서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반영한다. 2021년 기준 소방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다. 이처럼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으로는 소방직 외에도 경찰직, 교육직 등이 있다. 경찰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3.6%인 반면에 교육직의 경우에는 72.6%가 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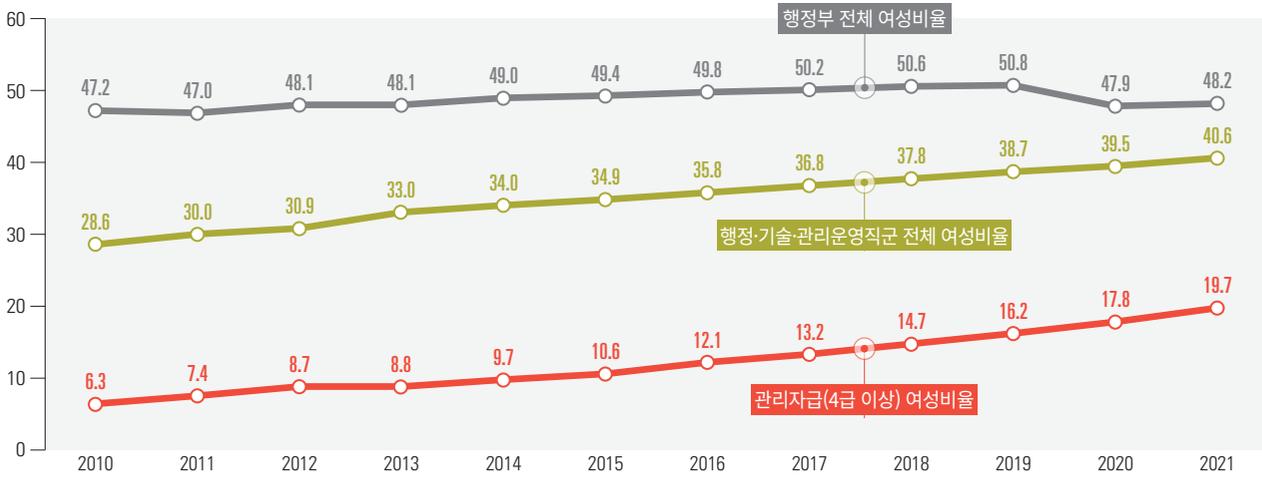
지방공무원에서도 여성 관리자(5급 이상)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2021년 지방 공무

원 전체 중 여성 비율(48.1%)에 비해 관리자급 여성 비율(24.3%)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최고관리직(1, 2급) 여성 비율을 보면, 라트비아(56.2%), 스웨덴(55.0%), 그리스(52.9%) 뉴질랜드(52.8%), 슬로바키아(50.3%)는 50%대로 최고 수준에 위치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8.5%로, 4.2%인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바로 앞 순위인 벨기에(21.1%)와도 12.6%p의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 공무원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비율, 2010~2021

(단위: %)



출처: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id.re.kr/gsis/>, 2023.01.0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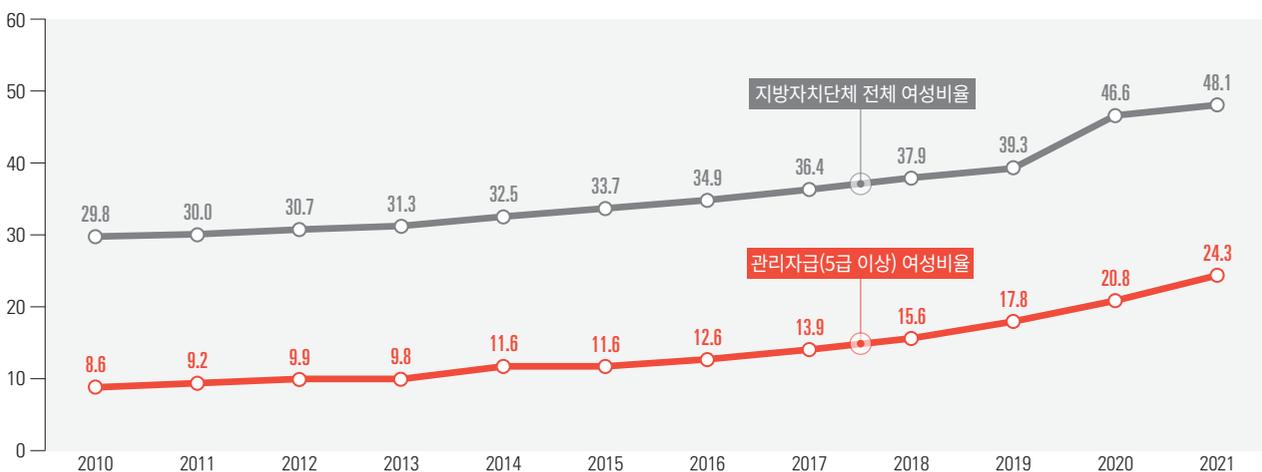
주1: 국가 공무원 중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된 행정부 공무원 기준임

주2: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직급별 여성 비율 수치가 가용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기준임

주3: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은 행정부 공무원 중 특정직(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정무직, 별정직이 제외되며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연구·지도·우정직과 전문경력관, 시간선택제, 일반·전문·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됨

지방 공무원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 비율, 2010~2021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21.12.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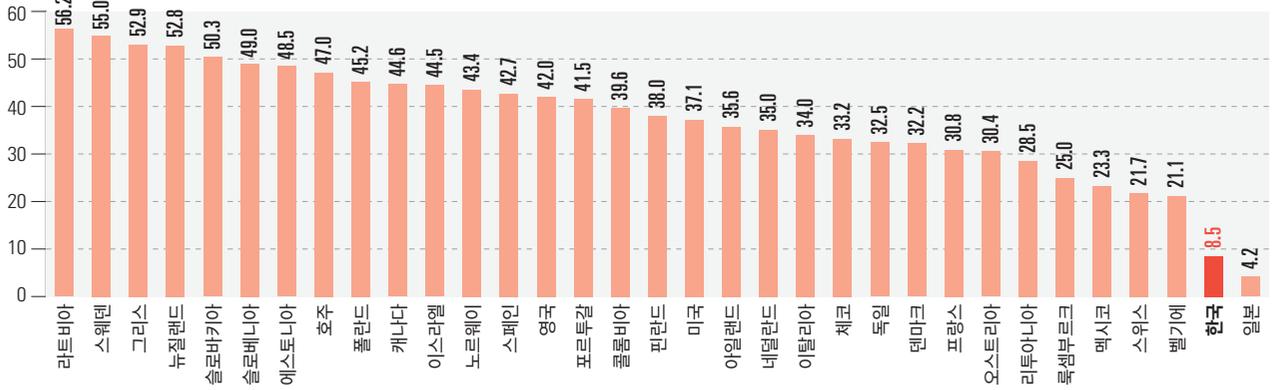
주1: 지방 공무원(=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중 교육자치단체는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기준임

주2: 지방 공무원 5급 이상은 고위 공무원, 일반직(일반임기제 포함) 1~5급, 일반임기제 5급, 연구·지도관, 별정직 1급 상당~5급 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담직위 5급 이상을 포함함



OECD 국가별 중앙정부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 2020

(단위: %)



출처: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1(https://doi.org/10.1787/888934257470, 2022.10.25. 인출)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 낮은 편 (🔍 관련 지표 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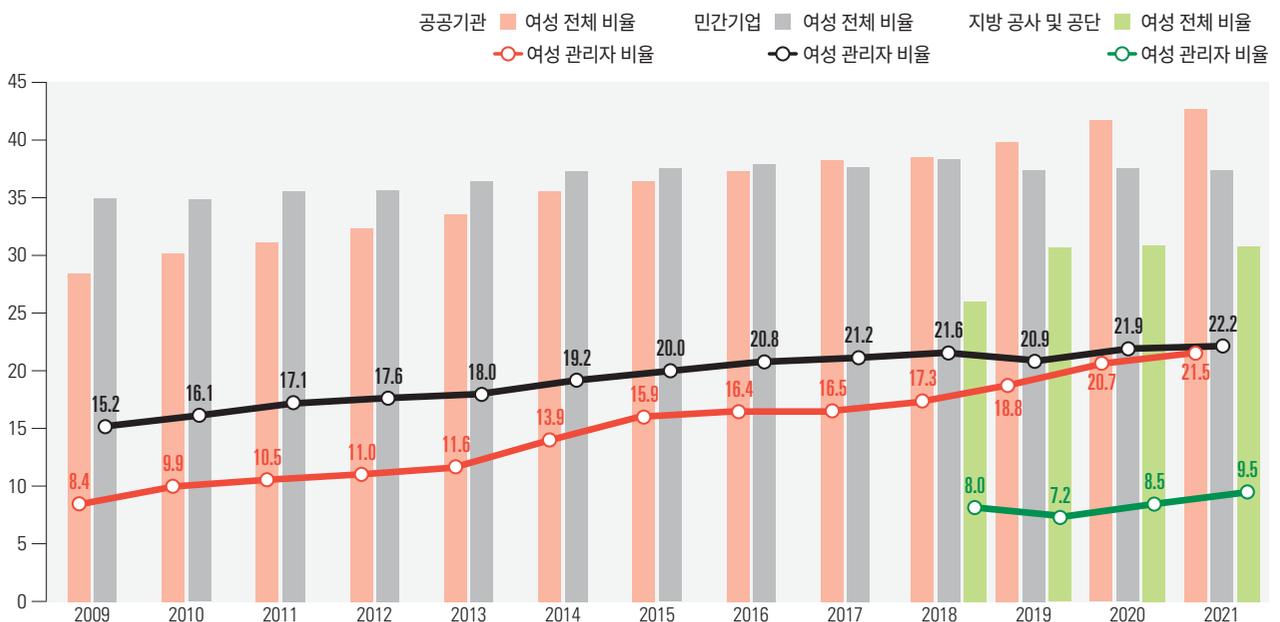
2006년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서 여성 고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09년 28.5%에 머물렀던 공공기관 여성 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42.7%로 14.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는 민간기업과 대조해서 보면,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서 여성 고용 비율이 확대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여성 고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관리자 비율도 늘었지만, 여성 고용 비율과 대비해서 보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기업(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에서 여성 고용 비율은 각각 42.7%, 37.5%, 30.8% 수준인 데 비해 이들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각각 21.5%, 22.2%, 9.5%에 머물고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비해 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방 공사 및 공단의 여성 비율, 2009~2021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

주1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대상 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이며, 2018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으로 확대됨

주2 : 관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로 정의되며, 직급과는 무관하게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평)권, 결재권의 세 가지 권한 유무로 판단함

##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 (☉ 관련 지표 5.2.1)

최근 들어 한국에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응해 국가적 차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등을 제정 및 개정해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불법 촬영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소형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특히 불법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고, 계속해서 복제되는 특징이 있다.

적발된 불법 촬영 건수는 2015년 761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은 연간 1만 건 수준, 스토킹 범죄도 연간 500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범죄로 적발된 건수이며, 실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 2013~2020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불법촬영	4,841	6,635	7,615	5,185	6,465	5,925	5,762	5,032
데이트폭력	7,237	6,675	7,692	8,367	10,303	10,245	9,858	-
스토킹	312	297	363	557	438	544	581	-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여성가족부,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재인용)

### 여성 농민의 토지 소유 비율 낮아 (☉ 관련 지표 5.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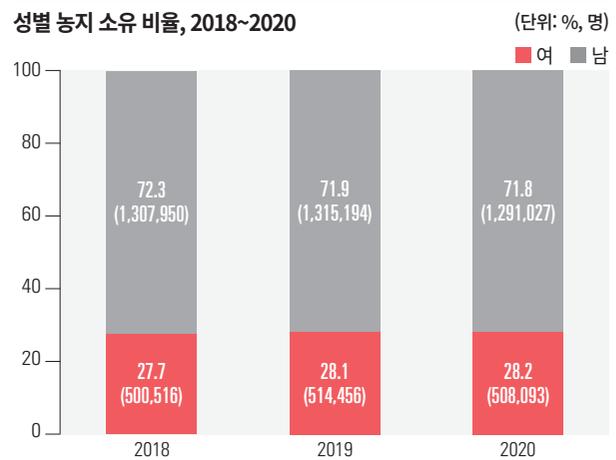
통계청(2022)에 따르면, 국내 농가 규모는 2021년 기준, 103만 1210가구로, 전체 가구의 4.4%를 차지한다. 농가 인구 중 여성은 약 112만 명이며, 남성은 110만 명으로 여성이 50.3%를 차지한다. 여성 비율은 10년 전인 2011년의 50.9%(약151만 명)에 비해 0.6%p 감소한 수치다.

그런데 실제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성별 분포를 보면 농가의 성별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2020년 기준 28.2%로 남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기준의 농가 개념과 행정자료인 농지원부(농지대장) 상의 농가 개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토지 소유에서 성별 차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또한 농촌 마을의 책임자인 이장의 여성 비율(9.4%)이 남성 비율(90.6%)보다 현저하게 낮다. 도시에서 마을 이장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장의 경우 여성 비율(74.9%)이 남성 비율(25.1%)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이 두 지표를 통해 볼 때, 한국 농촌에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농지 소유 비율, 201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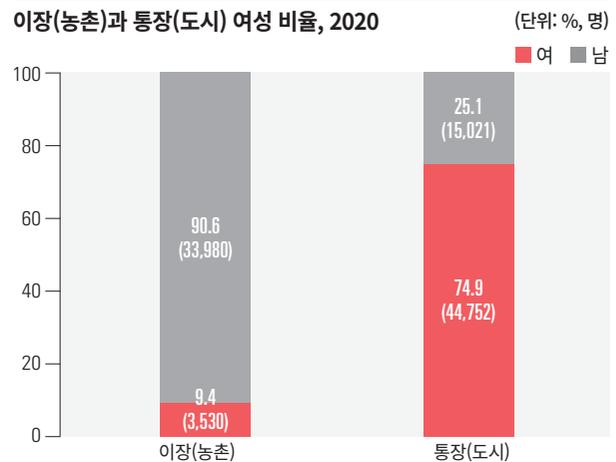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주요사업 성인지통계(2021)

주1: 각 연도 말 기준 농지원부 중 임차 농지로만 작성된 농지원부는 제외함

주2: 농가주 기준으로 작성함. 농가주 또는 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모두 해당 농가의 소유 농지로 구분함

이장(농촌)과 통장(도시) 여성 비율, 202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주요사업 성인지통계(2021)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2006년 도입)로서, 공공기관, 지방 공사·지방 공단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임



#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가뭄으로 말라 버린 경기도 파주 인근 마장저수지.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SDG 6번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서비스 보장’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와 통합물관리 구축’ 등을 지향한다. 식수를 포함한 위생적인 물 이용은 국민의 식생활과 주거생활에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물과 위생 부문의 개발은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히 진척되어 왔다. 2020년 기준 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9.3%와 94.5%에 이른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간 식수 공급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미급수 지역에 공공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한국의 미급수율은 2002년 5.9%에서 2021년 0.6%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도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제도화되었다.

최근 10년간 경제적 부가가치의 성장과 함께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은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대비 2019년 전체 물 이용 효율성은 41.5%나 상승했으며, 부문별로는 산업 부문 37.6%, 서비스 부문 50.1%로 증가폭이 큰 데 비해 농업 부문은 7.2%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농업 부문의 물 이용 효율성 변화는 2011년 이후 정체되고 있어 농업 부문 물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장의 동조화(coupling)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 물 스트레스 측면에서 가용한 수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국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물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 이래 지표수의 표면적 변화가 심한 수문 유역의 비율은 6%다. 동아시아 지역 전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 현상이 지표수 표면적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가 수자원의 물리적 가용성과 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미급수 지역 감소로 식수 서비스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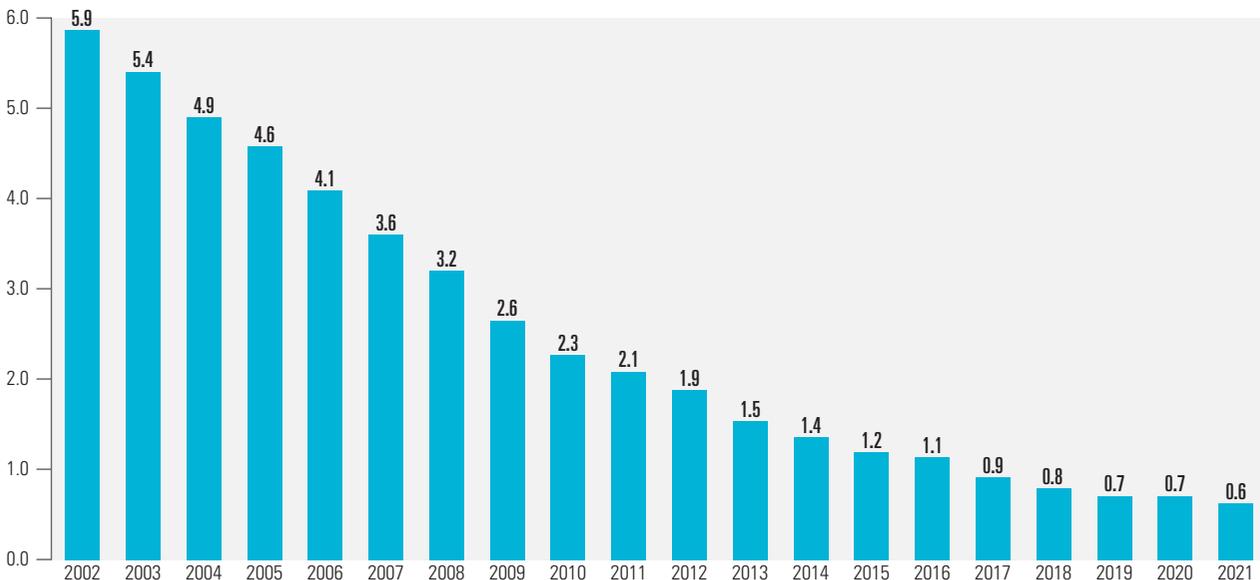
(📍 관련 지표 6.1.1)

한국의 전체 수도 급수 보급률은 2021년 기준으로 99.4%에 도달한 가운데,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수 공급이 취약했던 농어촌 지역의 식수 서비스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농어촌 미급수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시설 공공투자를 지속해 온 결과 전국의 미급수율은 꾸준히 낮아졌다. 공공 식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2002년 5.9%에서 2021년 0.6%로 약 2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수도 서비스 평가를 위한 수도법이 개정(제29조의2 수도물 먹는 실태조사)됨에 따라 2021년에 처음으로 수도물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수도물 만족도는 58.3%로 나타났다(환경부, 2021). 이는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 수도시설 교체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수도 미급수율, 2002~2021

(단위: %)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s://www.waternow.go.kr>, 2023.01.03. 인출)

주: 미급수율은 총행정인구 대비 미급수 인구(우물, 샘 및 전용상수도 시설 사용 인구) 비율로 100%에서 급수인구비율을 제외해 계산



## 물 이용 효율성,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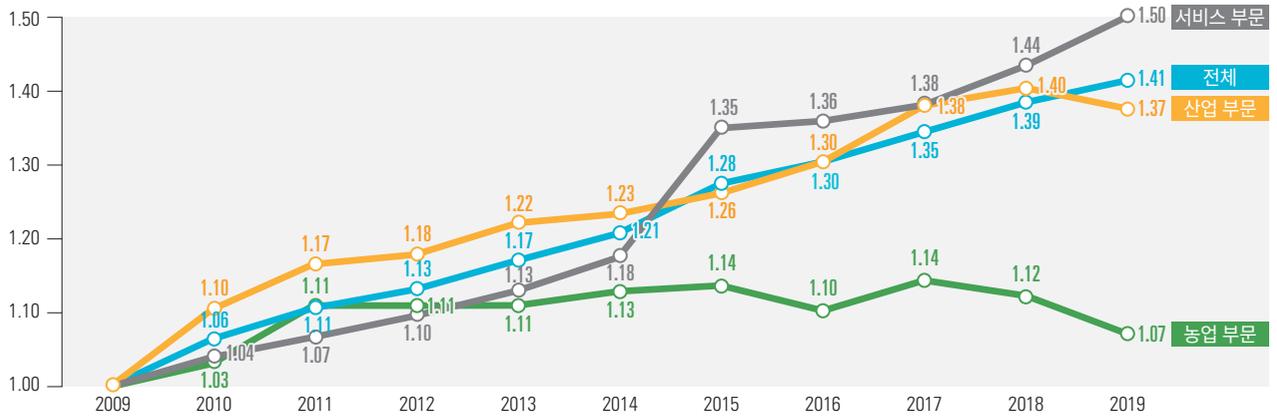
(단위: 달러/m³)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38.979	41.498	43.131	44.130	45.655	47.074	49.714	50.857	52.445	53.998	55.146
농업 부문	1.388	1.431	1.540	1.540	1.538	1.568	1.579	1.531	1.588	1.559	1.487
산업 부문	82.527	91.184	96.233	97.332	100.869	101.897	104.189	107.671	113.990	115.891	113.597
서비스 부문	96.258	100.152	102.712	105.517	108.813	113.144	129.967	130.958	133.051	138.159	144.515

출처: FAO, AQUASTAT(<https://www.fao.org/aquastat/statistics/query/index>, 2022.12.30. 인출)

## 산업별 물 이용 효율성 변화 비교, 2009~2019

(기준 년도 대비, 2009=1.00)



출처: FAO, AQUASTAT(<https://www.fao.org/aquastat/statistics/query/index>, 2022.12.30. 인출)

### 물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 관련 지표 6.4.1)

물 이용 효율성은 국가의 경제성장이 수자원 사용에 의존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경제 지표다. 지표의 성장이 경제성장보다 느리면 경제성장 자체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물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경제적 부가가치의 성장과 함께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은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물 이용 효율성은 55.1달러/m³다. 부문별로는 농업 부문 1.5달러/m³, 산업 부문 113.6달러/m³, 서비스 부문 144.5달러/m³로 집계된다. 이는 2009년 대비 전체 물 이용 효율성이 41.5%나 상승한 것으로, 부문별로는 산업 부문 37.6%, 서비스 부문 50.1%로 증가 폭이 큰 데 비해 농업 부문은 7.2%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농업 부문의 물 이용 효율성 변화는 2011년 이후 정체되고 있어 농업 부문 물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장의 동조화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물 스트레스 측면에서, 가용한 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국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 대응 담수자원 모니터링 지속 필요

#### (☞ 관련 지표 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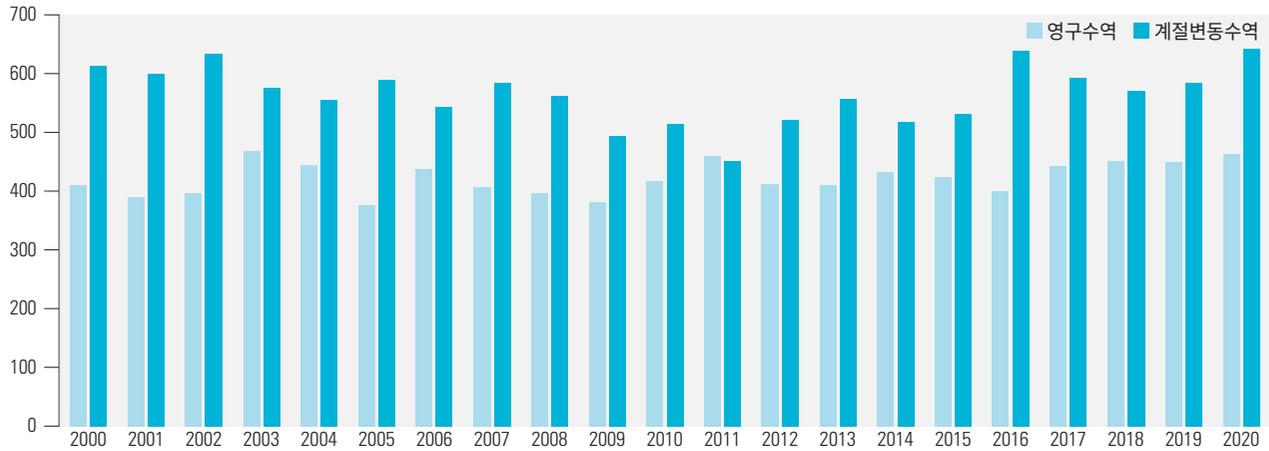
지표수 표면적의 변화는 담수자원의 물리적 가용성과 물 사용의 영향을 추적하는 환경지표로 사용된다. 2016~2020년 기준 한국 내 전체 지표수(호수, 하천, 하구 및 인공수역)의 표면적은 1,820km²로,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1.9%에 해당한다. 2000년 대비 2020년의 심한 지표수 면적 변화(97.5퍼센타일 초과 증가 또는 2.5퍼센타일 미만 감소)를 나타내는 수문 유역의 비율은 6%이다. 한국이 속하는 동·동남아시아 지역 전체가 30%로 큰 변화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은 편이다(UNEP, Freshwater Ecosystem Explorer). 2000년 이래 호소와 강 등 지표수의 표면적 변화를 보

면, 영구수역이 3.85%(17.18km<sup>2</sup>) 증가했고 계절변동수역은 9.00%(53.08km<sup>2</sup>) 증가했다(2000~2004년 대비 2016~2020년의 변화).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영구수역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계절변동수역은 2011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 현상이 지표수 표면적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 저수지 수표면적의 경우 2000

년 이래 저수지의 최소 수위에서 4.23%(13.71km<sup>2</sup>), 최대 수위에서 4.42%(21.17km<sup>2</sup>) 증가했으며(2000~2004년 대비 2016~2020년의 변화), 특히 최대 수위와 최소 수위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담수자원의 물리적 가용성과 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 호소와 강의 수표면적, 2000~2020

(단위: k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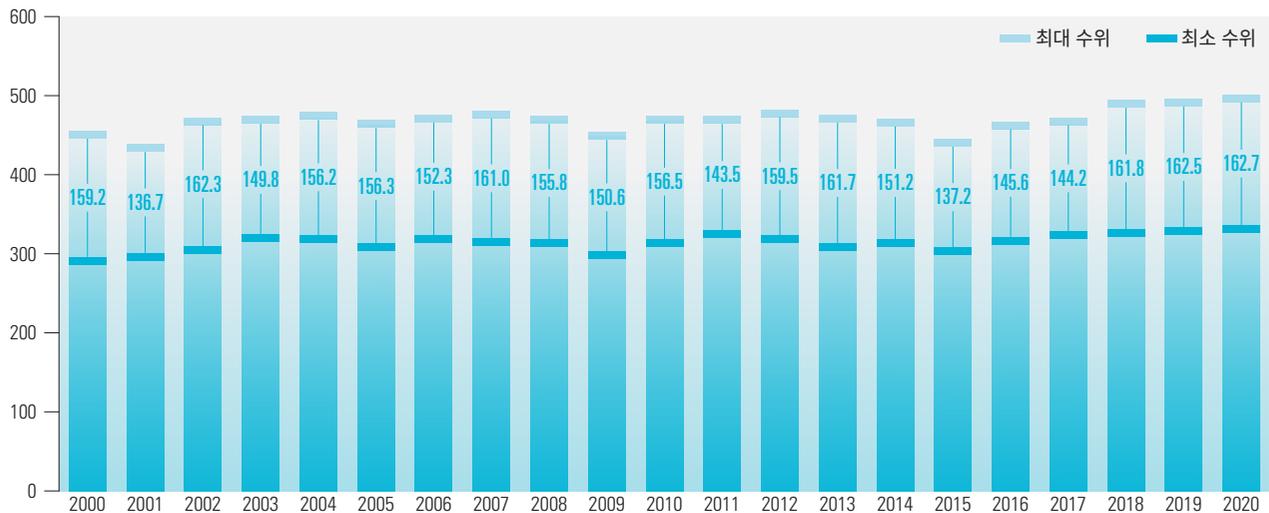


출처: UNEP, Freshwater Ecosystem Explorer(<https://map.sdg661.app>, 2022.09.09. 인출)

주 : 영구수역은 호소(내륙에 있는 호수와 늪) 및 하천에서 연중 12개월 내내 존재하는 수표면적, 계절변동수역은 호소 및 하천에서 연중 12개월 미만으로 존재하는 수표면적임

### 인공 저수지의 수표면적, 2000~2020

(단위: km<sup>2</sup>)



출처: UNEP, Freshwater Ecosystem Explorer(<https://map.sdg661.app>, 2022.09.09. 인출)

주 : 저수지의 최대/최소 수위는 저수지에서 관찰된 연중 최대/최소 수표면적을 가리킴

### 실질 목표

- **미급수 지역** : 급수 지역(수도시설로부터 배수관이 부설되어 수용가에 급수되는 지역)으로부터 제외되어 수도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 **물 이용 효율성(water-use efficiency)** : 사용된 물의 양에 대한 달러 가치의 비율(달러/m<sup>3</sup>)로 측정됨. UN 통계국에서 관리하는 경제활동의 국제표준 산업분류(ISIC)에 따라 농업,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 중점을 둔 모든 경제활동에서 물 사용을 고려함
- **영구수역(permanent water)** : 호소 및 하천에서 연중 12개월 내내 존재하는 수면적으로 정의함
- **계절변동수역(seasonal water)** : 호소 및 하천에서 연중 12개월 미만으로 존재하는 수면적으로 정의함



#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 7번 목표는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적정가격에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에너지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요구되는 필수재다. 산업혁명 이래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화석연료 소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근원적 과제는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전환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경제구조의 전환,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시장 확산 등 단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에너지 원단위(1차 에너지 공급량/GDP)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정,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에 관한 국가 에너지 정책은 중점적으로 지속 강화될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비율은 증가 추세이나 OECD 하위권

(☉ 관련 지표 7.2.1)

재생에너지가 일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0년 0.70%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3.36%로 늘어났다.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는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0년과 2011년 사이 재생에너지 비율은 0.70%에서 1.35%로 연평균 6.1% 증가했지만 2012년과 2019년 사이에는 1.61%에서 3.36%로 연평균 11.1% 증

가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은 23.4%로 한국보다 약 7배 높다. 아이슬란드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무려 81.1%에 달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그리고 신에너지로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2019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생산량은 각각 1251만toe와 149만toe로, 1차 에너지 공급의 4.66%를 차지한다. 이는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00~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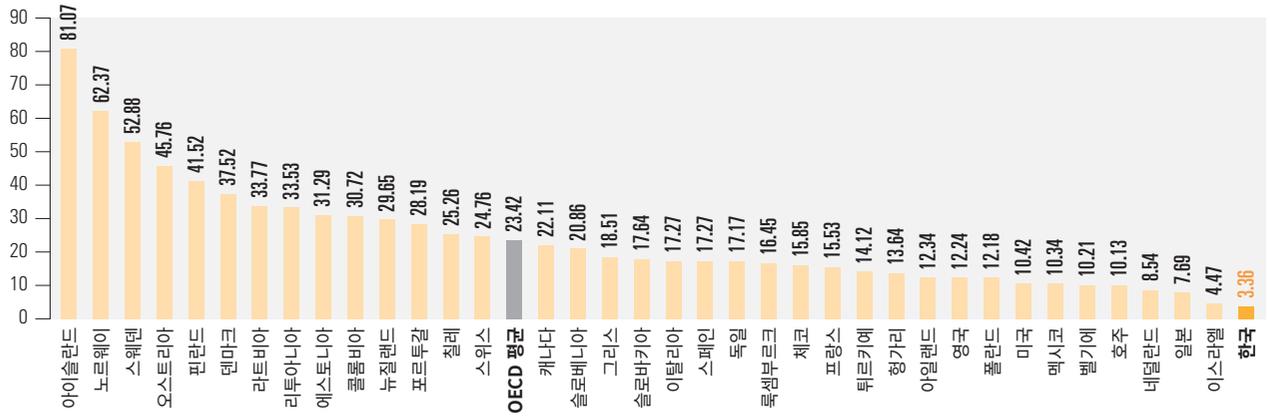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2.07.20. 인출)



### OECD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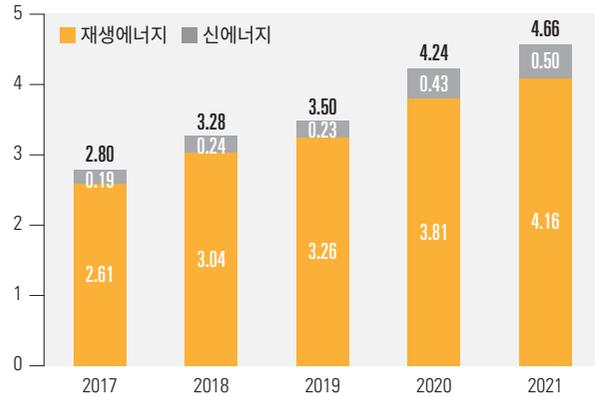
(단위: %)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2.07.20. 인출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2017~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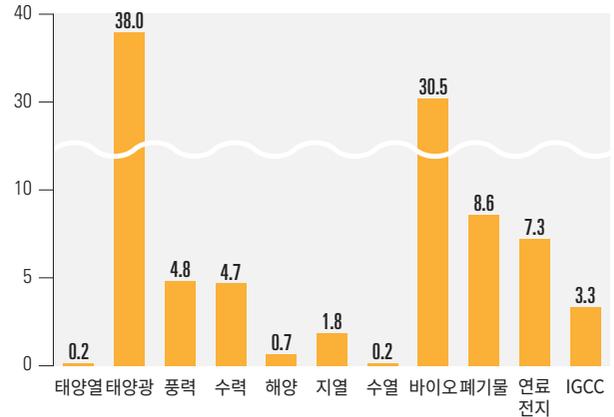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019)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석유, 인조가죽, 비닐 등)에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제외됨

###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구성비, 2021

(단위: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주: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신에너지에 해당하며, 그 외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함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중 비재생 폐기물이 제외된 수치다.

2021년 기준 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을 보면, 태양광과 바이오가 각각 38.0%와 3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재생폐기물, 수력, 연료전지, 풍력 등은 각각 10% 미만의 생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법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 수립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 2021년에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선언했다. 2017년 '3020 이행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

로 2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2021년 'NDC 상향안'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2%까지 더욱 높이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앞으로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에너지 원 보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 원단위의 지속적 개선 추세 (☉ 관련 지표 7.3.1)

에너지 원단위는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량으로서 에너지 효율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에너지 원단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국가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1990년(0.197toe/100만 원)부터 2021년(0.157toe/100만 원)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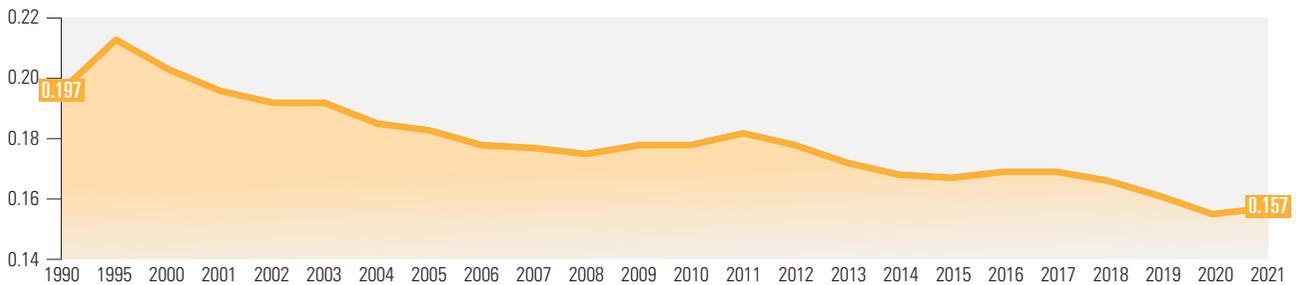
가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0.7% 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연평균 1.2%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더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너지 소비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각각 전년 대비 3.0%와 3.7%라는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2021년(잠정치)에는 2020년 기저효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에너지 원단위(GJ/1000USD)는 2020년 기준 3.77이다. OECD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독일 2.93, 일본 3.25, 미국 4.42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5.41로 OECD 평균 대비 약 30% 높고, 특히 독일에 비해서는 46%가량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에너지 원단위를 이

용해 국가 간 에너지 효율을 비교할 때에는 국가별 산업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더라도 산업구조에 따라서 에너지 투입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제조업이 국가 경제의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서 생산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반면 경공업 또는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가 총부가가치의 27.1%에 달하는데 이는 아일랜드(36.6%)를 제외하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11.2%), 독일(17.8%), 일본(19.7%) 등은 한국보다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훨씬 낮다.

에너지 원단위, 1990~2021

(단위: toe/백만 원,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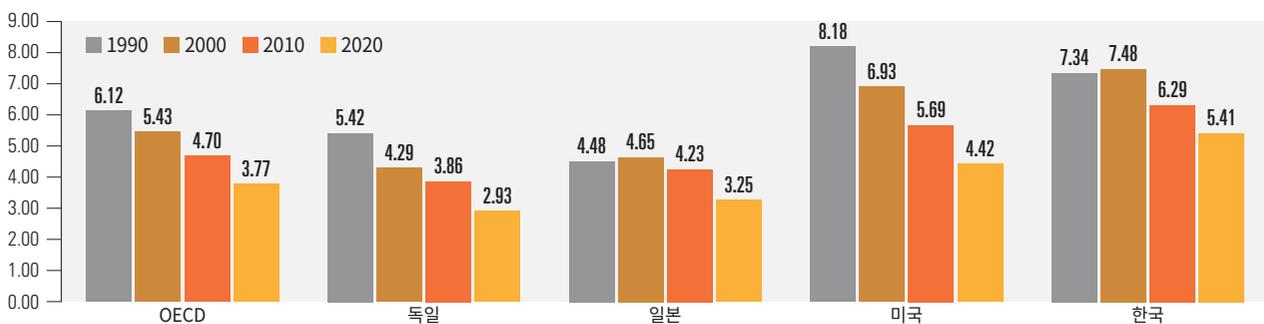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2.12.)

주1: 에너지 원단위는 총부가가치(GDP) 대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비율로 정의됨 1차 에너지는 생산, 수출입 및 재고 증감에 의해 국내 공급된 에너지이며, 타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와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용으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의 합으로 계산됨

주2: 2021년은 잠정치임

OECD 주요국별 에너지 원단위, 1990~2020

(단위: GJ/천 달러, 2015년 PPP 기준)



출처: IEA Data Services, Energy Statistics Data Browser(<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tools/energy-statistics-data-browser?country=KOREA&fuel=Energy>, 2022.07.20. 인출)

에너지  
정책

-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공급한 전력의 우선 구매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보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 8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형태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일자리, 다양한 불평등 요소의 근절을 통한 평등하고 공정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은 기술 향상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 생산적 활동, 기업가 정신, 창조와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의 장려, 생산과 소비에서 자원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성별 구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를 달성하는 것, 아동 노동 및 강제노동 근절,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으로 구체화된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통해 SDG 8번 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구체화하였는데,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정책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맞물려 추진되었다. 노동시장 악화로 상대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및 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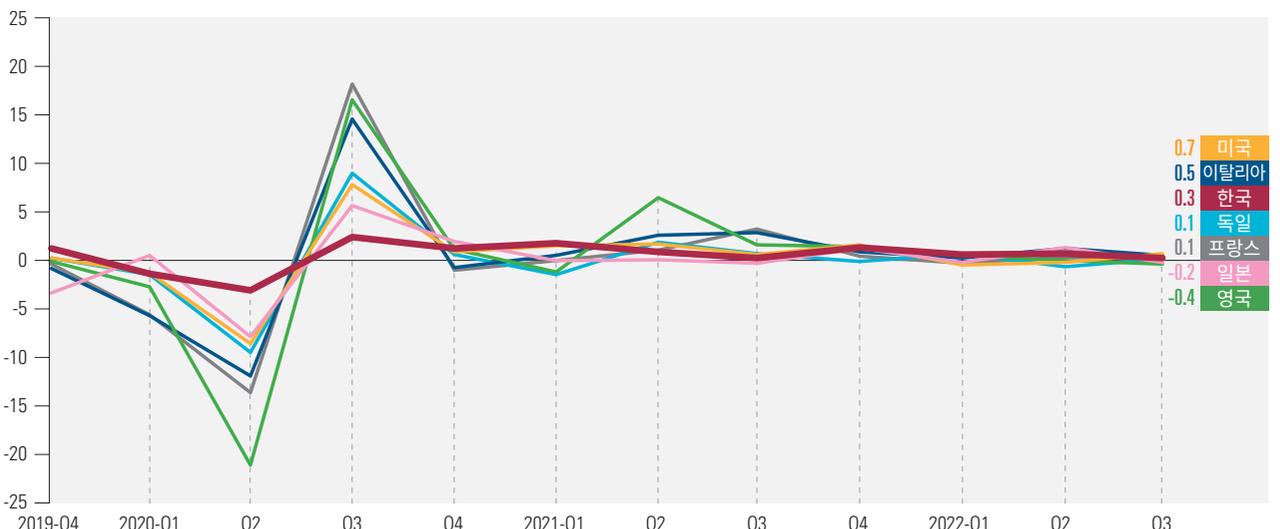
8번 목표의 여러 지표를 통한 한국의 2021~2022년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지표와 고용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의 회복 양상은 상이하다’로 요약된다. 한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후 2022년 3분기에 이르기까지 9분기 연속 양(+)의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1인당 실질GD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확인하나, 회복의 양상은 인구집단에 따라 차별화되므로, 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반면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사업장 안전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부터 회복세 확인 (☉ 관련 지표 8.1.1)

경제성장은 GDP 성장률로 확인할 수 있다. OECD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2020년 상반기 1인당 실질GDP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하락

폭이 가장 컸던 2020년 2분기 기준,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영국(-21.1%), 프랑스(-13.6%), 이탈리아(-11.9%)가 1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독일(-9.4%), 미국(-8.5%), 일본(-7.9%) 순이었으며, 한국은 7개국 중 가장 낮은 감소

OECD 주요국별 1인당 실질GDP 성장률, 2019~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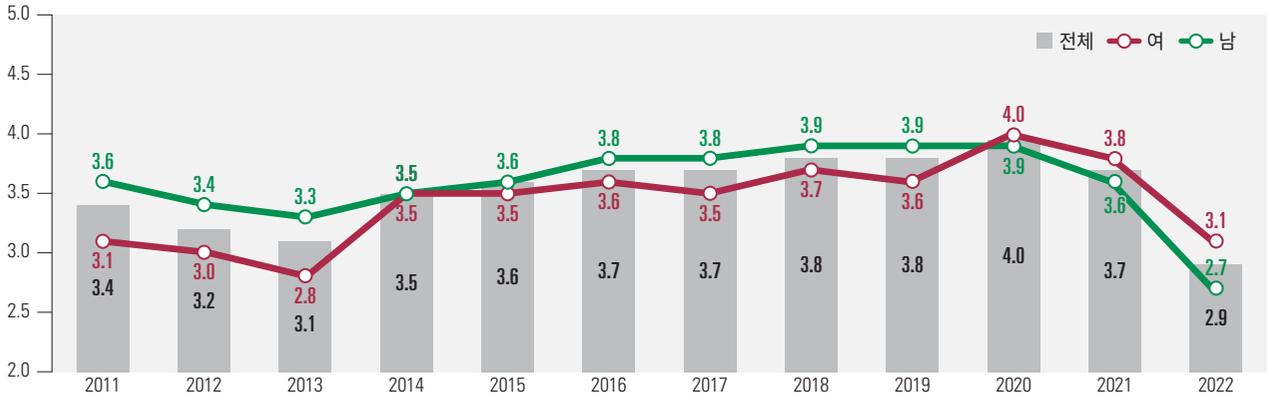


출처: OECD.Stat, Gross domestic product(GDP)([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 2023.01.12. 인출)



성별 실업률, 2011~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3.01.20. 인출)

율(-3.0%)을 보였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2020년 4분기를 시작으로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회복세는 2021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2022년 2분기에는 1인당 실질GDP 역시 대부분의 국가가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의 분기별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후 3분기 2.4%, 4분기 1.3%, 2021년 1분기 1.8%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1년 2분기 0.9%, 3분기 0.2%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3분기를 시작으로 9분기 연속 양(+)의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1인당 실질GD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성별 격차는 확대 (☉ 관련 지표 8.5.2)**

실업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2014년 이후 3.5~3.8%를 유지해 오던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직접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2020년에 4.0%로 상승했으나, 2021년 3.7%로 다시 감소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22년에는 2.9%로 하락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할 때, 실업률은 취업자 수 또는 고용률과 같은 여타 고용지표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편이나, 2022년 큰 폭의 실업률 하락은 눈에 띈다.

성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여성의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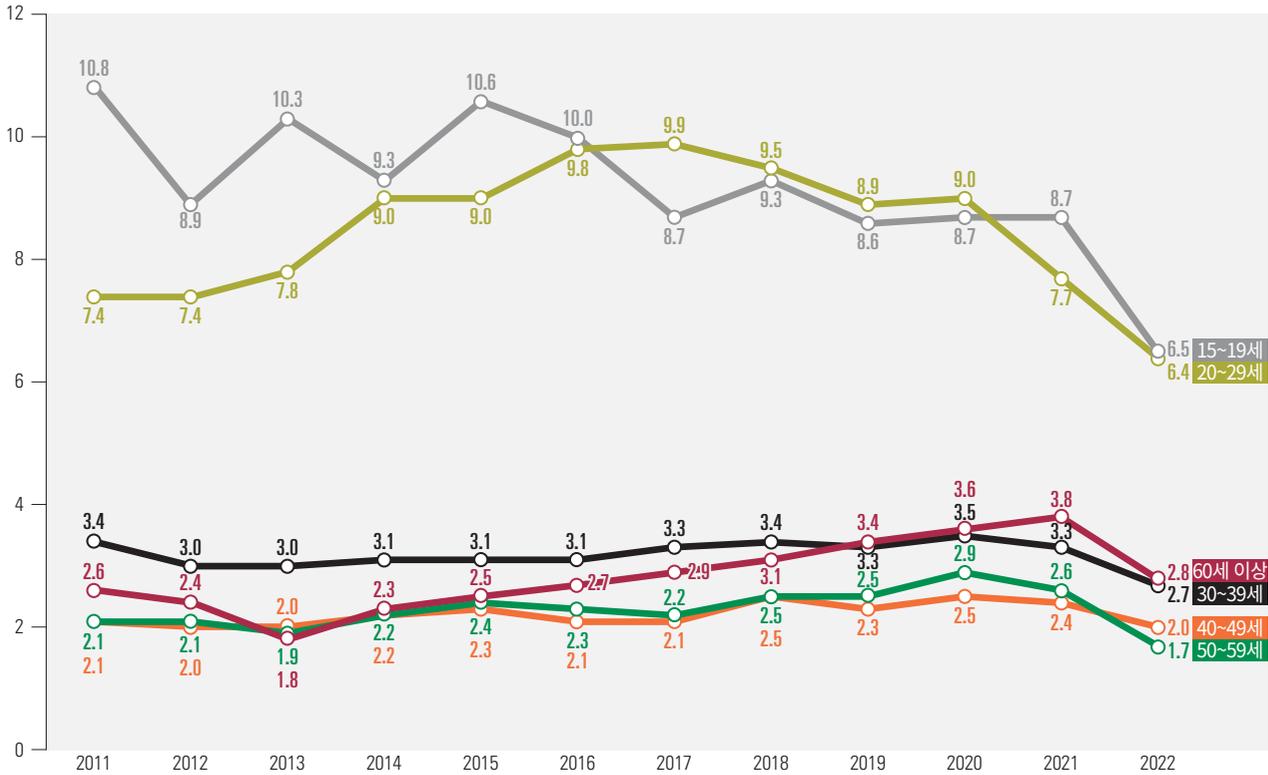
업률이 남성의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2022년에도 유지되었다. 실업률의 성별 역전 현상은 코로나19가 남성보다 여성 실업률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자녀 돌봄 등의 문제가 연관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실업률 성별 격차는 이전에 비해 확대되었다. 전년 대비 여성의 실업률 감소폭(0.7%p)이 남성(0.9%p)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1~2019년의 연령별 연평균 실업률을 살펴보면, 20대 청년층이 8.7%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와 50대는 2.2%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 평균은 2.6%인데 이는 30대(3.2%)보다도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영향권에 접어든 2020년 실업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나, 2021년 다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와 같은 감소세는 2022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20대의 경우 실업률이 2020년 9.0%에서 2021년 7.7%, 2022년 6.4%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령대별 실업률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남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022년 실업률이 낮아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40~49세의 실업률은 2.2%에서 2.5%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확인하나, 회복의 양상은 인구집단에 따라 차별화되므로, 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연령대별 실업률, 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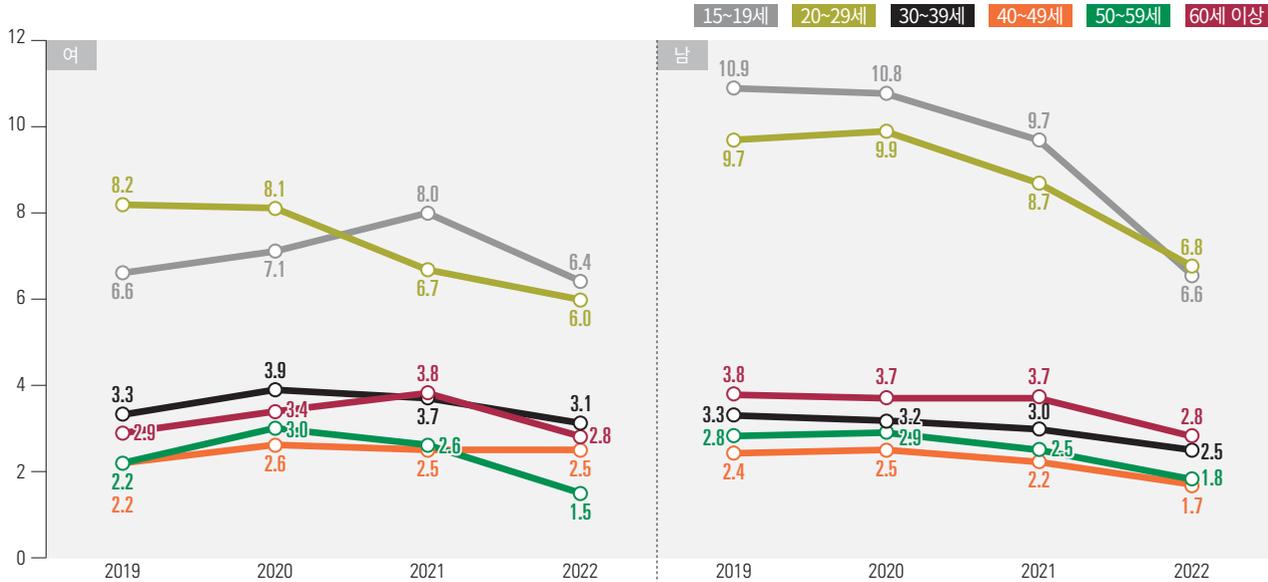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3.01.12. 인출)

### 성 및 연령대별 실업률, 2019~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3.01.12. 인출)

###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증가

(☞ 관련 지표 8.8.1)

산업재해는 일자리의 안전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다.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에서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사망자 수도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다시 증가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산업별 전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업(24.2%), 제조업(22.8%), 광업(20.4%) 순으로 많았는데, 질병 사망자의 비중은 광업에서 4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02명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로 배달노동자의 사고 사망은 증가했다. 2019년에 7명이었으나, 2020년 17명, 2021년 18명이었다(고용노동부, 2022).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전체의 61.7%(1372명)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 사망자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 높은 80.9%(707명)에 달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의미다. 2022년 1

월 27일부터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였던 1인당 화석연료 소비량이 2018년부터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8.4.2)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은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환경 훼손을 억제한다’라는 SDG 8.4 세부목표의

산업재해 발생, 2020~202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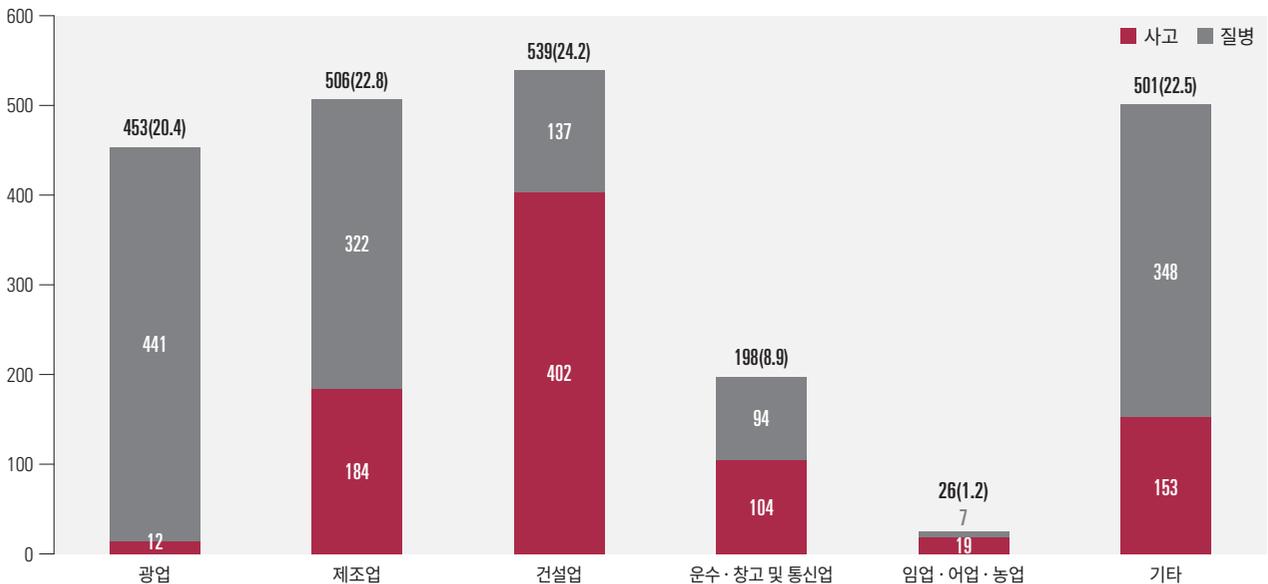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1~2020		2022~2021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재해자 수	108,379	122,713	130,348	14,334	13.2	7,635	6.2
- 사고 재해자 수	92,383	102,278	107,214	9,895	10.7	4,936	4.8
- 질병 재해자 수	15,996	20,435	23,134	4,439	27.8	2,699	13.2
사망자 수	2,062	2,080	2,223	18	0.9	143	6.9
- 사고 사망자 수	882	828	874	-54	-6.1	46	5.6
- 질병 사망자 수	1,180	1,252	1,349	72	6.1	97	7.7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주 :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 이환자를 합한 수

산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202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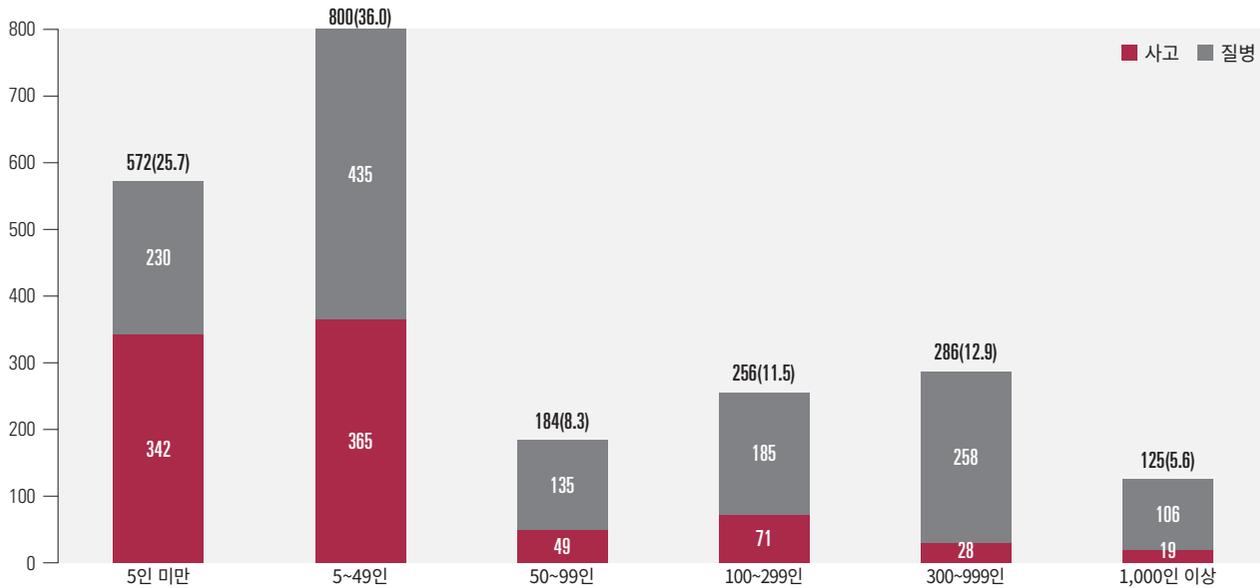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현황

주 : 기타에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됨

###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자수, 2022

(단위: 명, %)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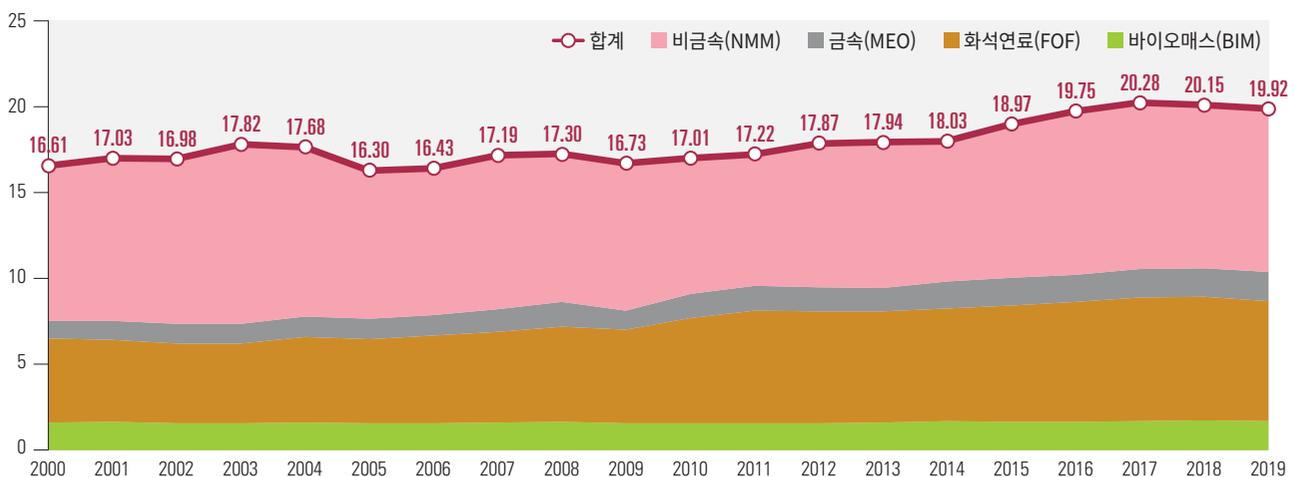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투입자원의 흐름을 추적하고 최종적인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물질소비량은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accounting)의 국가 경제 내 물질소비량을 대표하는 표준화된 지표로, 2012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중심체계를 따르고 있다. 국내물질소비량은 일차적으로 바이오매스(biomass), 화석연료(fossil fuels), 금속(metal ores), 비금속(non-metallic minerals) 4개의 범주로 구분하며 유엔환경

계획(UNEP), OECD, 유엔통계처(EUROSTAT)에서 집계한다. 한국의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2017년 20.28톤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 추세에 있다. 화석연료의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한 차례 감소했다.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를 유지해 오다 2018년 7.22톤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다시 감소해, 2019년 화석연료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6.96톤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2020년 이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향후 경향을 논하기는 이르다.

###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2000~2019

(단위: 톤/인)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unstats.un.org/SDG/dataportal>, 2022.08. 인출)



#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농장에서 일하는 스마트 로봇 농부.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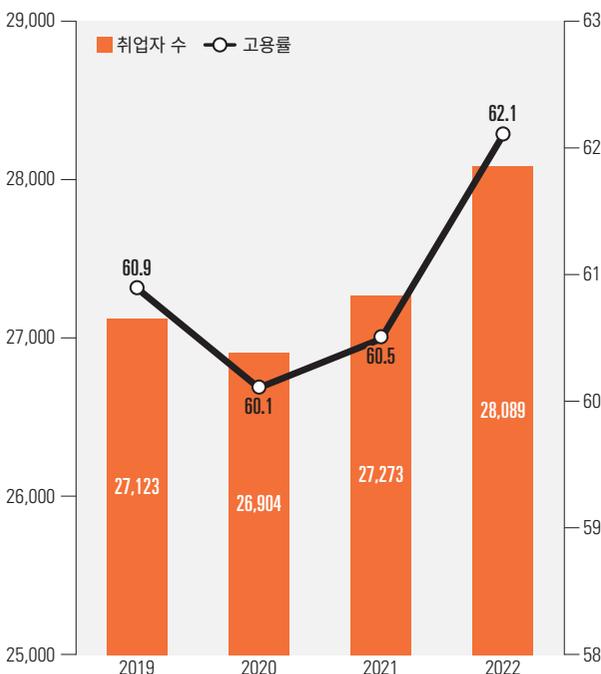
SDG 9번 목표는 산업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와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코로나19 대 유행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산업화, 기술 혁신, 회복력 있는 인프라의 중요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양화된 산업구조와 굳건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으면서 신속하게 회복하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기술에 기반한 산업은 좋은 성과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9번 목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최근 전 세계 제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이러한 회복의 추세는 국가나 산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저개발 국가의 제조업은 국제 수요의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5000달러 이상에 이르지만 저개발 국가에서는 134달러에 그친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취약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저개발 국가에서는 재원이 부족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중급 혹은 고급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달리 저개발 국가에서는 회복이 느리게 나타났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더해 통신과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취업자와 매출은 회복 추세 (☉ 관련 지표 9.2.2)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의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초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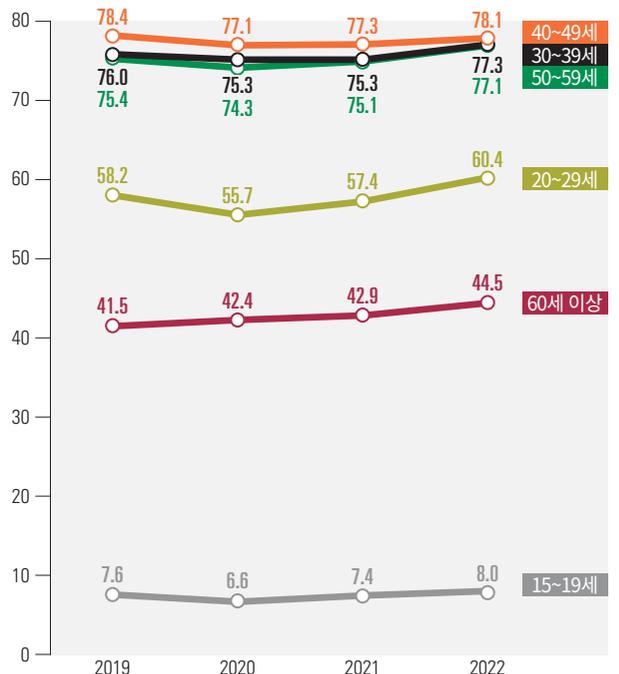
취업자 수 및 고용률 현황, 2019~2022 (단위: 천 명,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3.01.20 인출)

이에 따라 고용시장의 중요 지표인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던 2020년 고용률 60.1%는 2021년 60.5%로, 2022년에는 62.1%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20대의 고용률 상승이 전년 대비 3.0%p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30대와 50대가 2.0%p 를 차지했다. 2022년에 들어 산업 전반에

연령집단별 고용률 현황, 2019~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3.01.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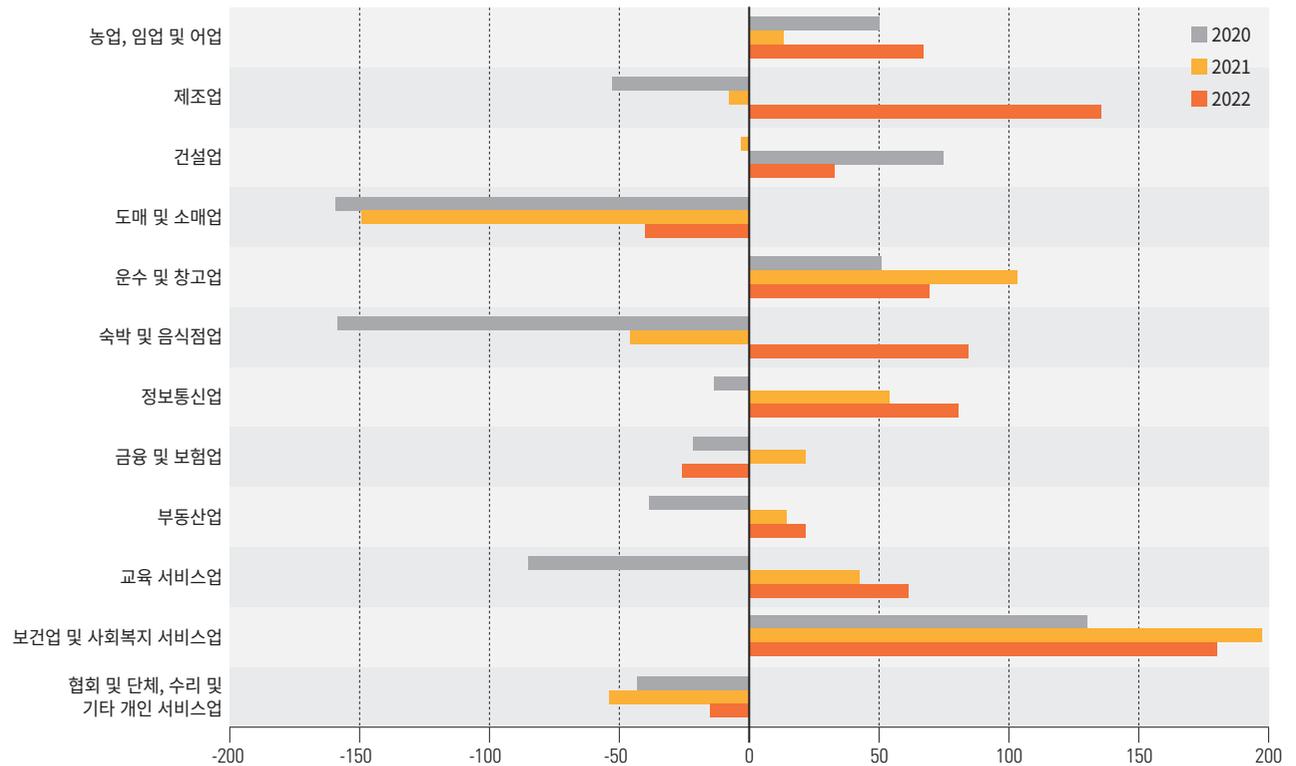
서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산업별로는 전년 대비 제조업(13만 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 4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4만 1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 6000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만 6000명)에서 감소했다.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보건업과 비대면 업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며 양호한 개선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액은 기업의 경영상태와 경제상황을 신속하게 알

산업별 취업자 수 전년 대비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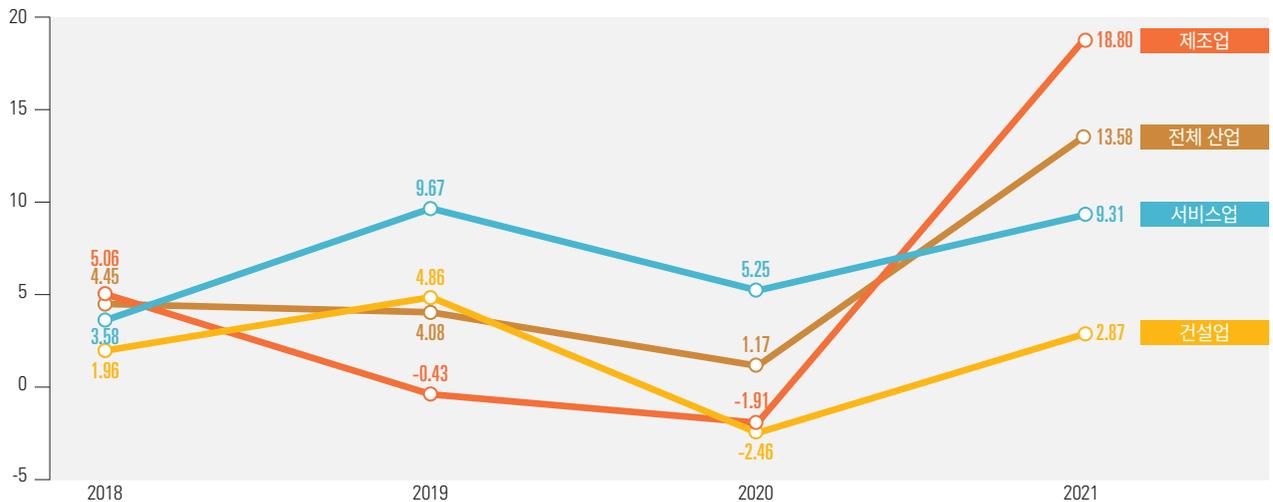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3.01.20 인출)  
주 :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2017년) 기준임

산업별 매출액 증가율, 2018~2021

(단위: %)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https://www.istans.or.kr/su/newSuTap.do?code=S171>, 2023.01.10. 인출)

려 주는 지표 중 하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보건 규제로 인해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먼저 매출 감소 타격을 입었으며,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 감소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나타났다. 2021년에 들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제조업이 견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필요

#### (◎ 관련 지표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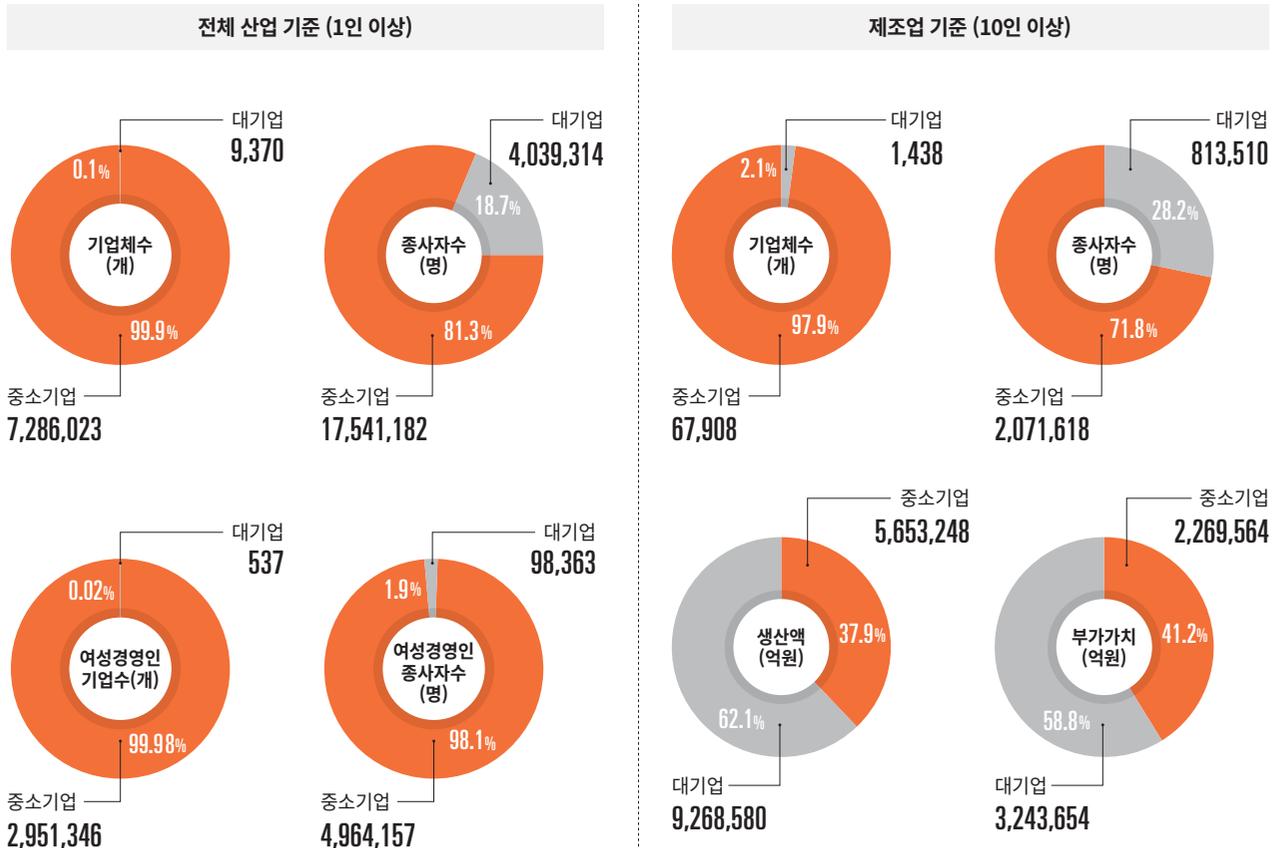
2020년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1.3%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조업 기준으로 보아도 중소기업이 기업체 수의 97.9%, 종사자 수의 71.8%를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액(37.9%)과 부가가치(41.2%)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여성 경영인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95만 1883개 기업 중 대기업은 537개, 즉 0.02%로,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0.1%보다도 작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노동생산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과 행정비용 경감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동화와 조직역량,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하다. 예컨대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더

전체 산업 및 제조업 내 중소기업 비중, 2020



출처: 중소기업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https://kosis.kr>, <https://www.mss.go.kr>, 2023.01.14.인출)



라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까지는 많은 교육과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에만 치중된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낮출 수 있다. 과도한 지원보다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유연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적 수준

(☞ 관련 지표 9.5.1 / 9.5.2)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물인 혁신활동이 중요하다. 총연구개발비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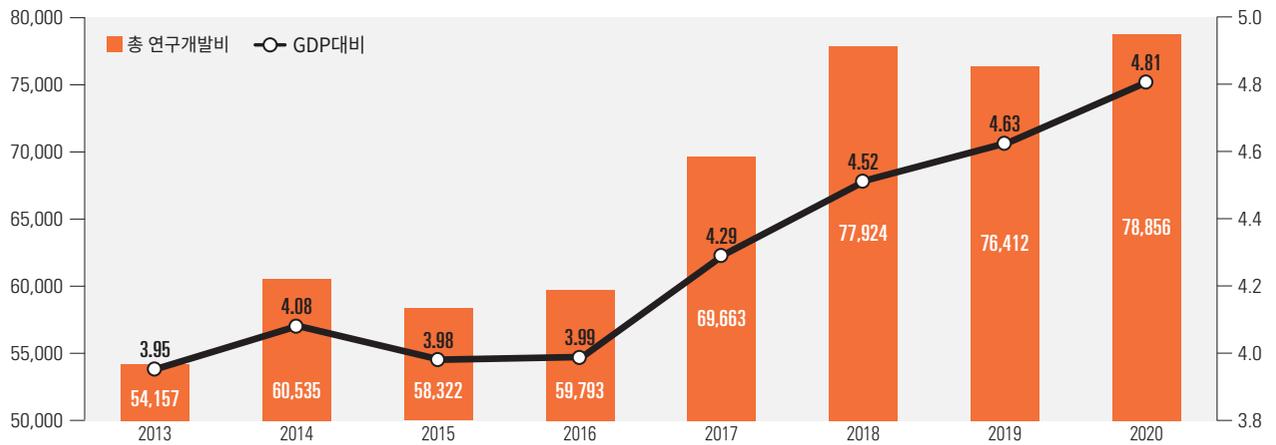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과 공공 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총합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총연구개발비는 788억 5600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81%에 달해 세계 2위 수준에 있다. 연구개발비 규모는 미국(7208억 8000만 달러)이 가장 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이스라엘(5.44%)이 가장 높다.

연구개발인력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연구 참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013~2020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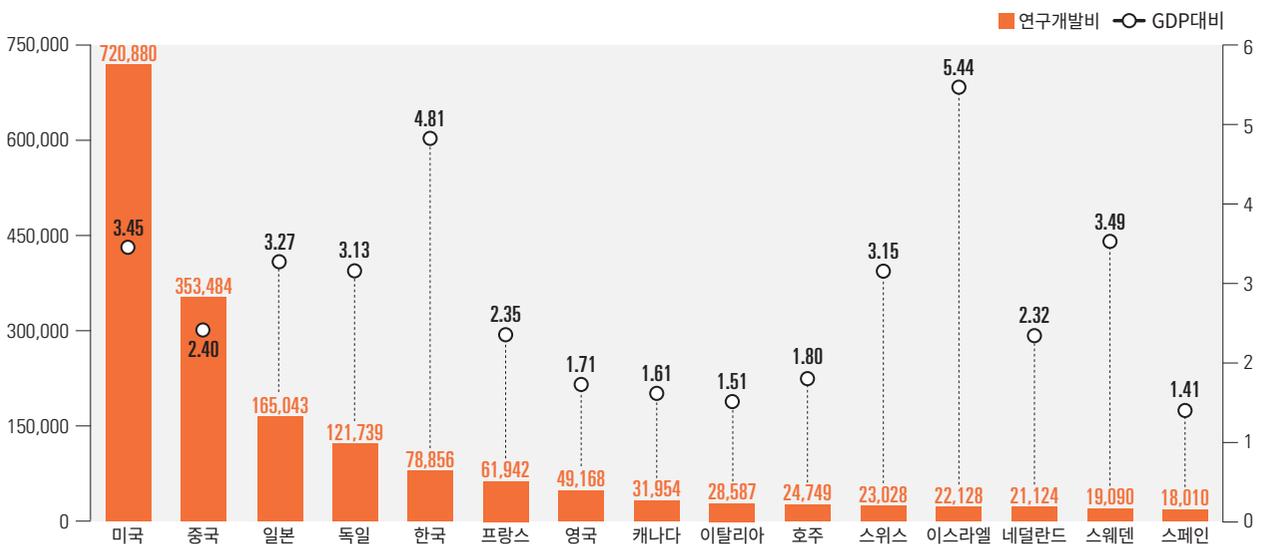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 (연구개발 지출 총액 ÷ 당해 연도 GDP) × 100. GDP는 기준 연도(2015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 이용

주요 국가의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020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TEP,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 2023.01.16. 인출)

주 : 영국, 호주, 스위스는 2019년 기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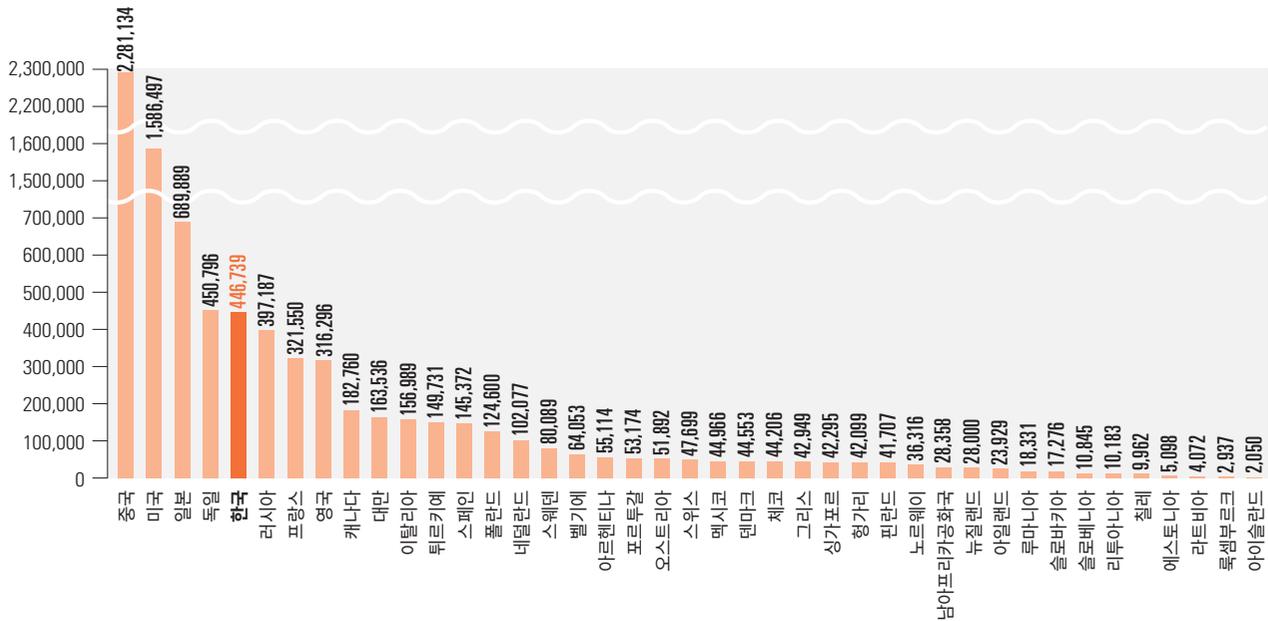
여 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4만 6739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국제 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를 계산해 보면, 한국은 2019년 15.4명에서 2020년 16.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0년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핀란드(15.1명), 스웨덴(14.5명), 덴마크(14.4명) 등이 한국 뒤를 잇는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연구개발은 재원과 인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재원 투자와 인력 투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Global Innovation Index 2022에서 한국이 스위스, 미국, 스웨

덴,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위의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WIPO, 2022).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투자의 절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연구개발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연구개발의 양적인 확대에 더해 한국은 목표지향형 연구개발과 시장성과지향형 연구개발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 부문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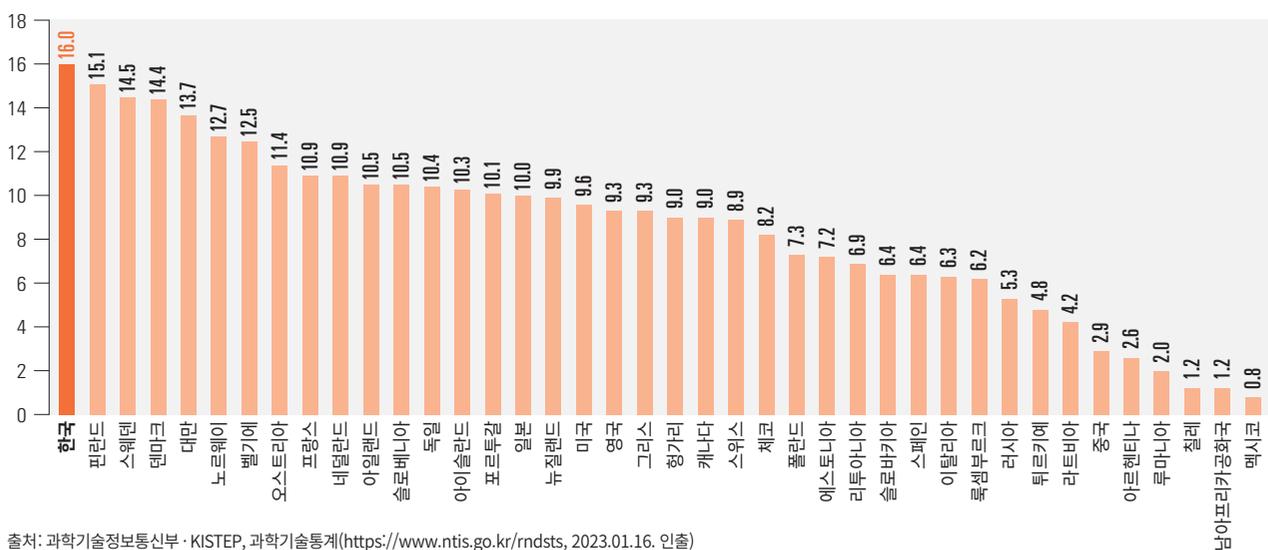
상근상당(FTE) 연구원 수 국제 비교, 2020

(단위: 명)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국제 비교, 2020

(단위: 천 명당 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 2023.01.16. 인출)  
 주: 실질연구 참여 인력(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



# 10 REDUCED INEQUALITIES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 10번 목표는 국가 내와 국가 간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지향한다. 국내적으로는 소득의 불평등 완화와 함께 기회, 과정,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법, 제도, 관습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자유로운 노동 이동성 확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순자산 지니계수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산 측면에서 불균형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 및 빈곤율도 OECD 국가 대비 높은 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득하위 1분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증가했는데, 2021년에는 거의 전 계층에서 감소했다. 부채 비율은 젊은 층에서 높았고, 남녀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아울러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변화 폭은 유의미하지 않아서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코로나19의 정점인 2020년에 크게 증가했고,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수도 해당 년도에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자영업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대출액 증가는 추후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한국의 금융건전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고, OECD 국가 중에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불평등 지수는 증가하지만, 부채 비율은 최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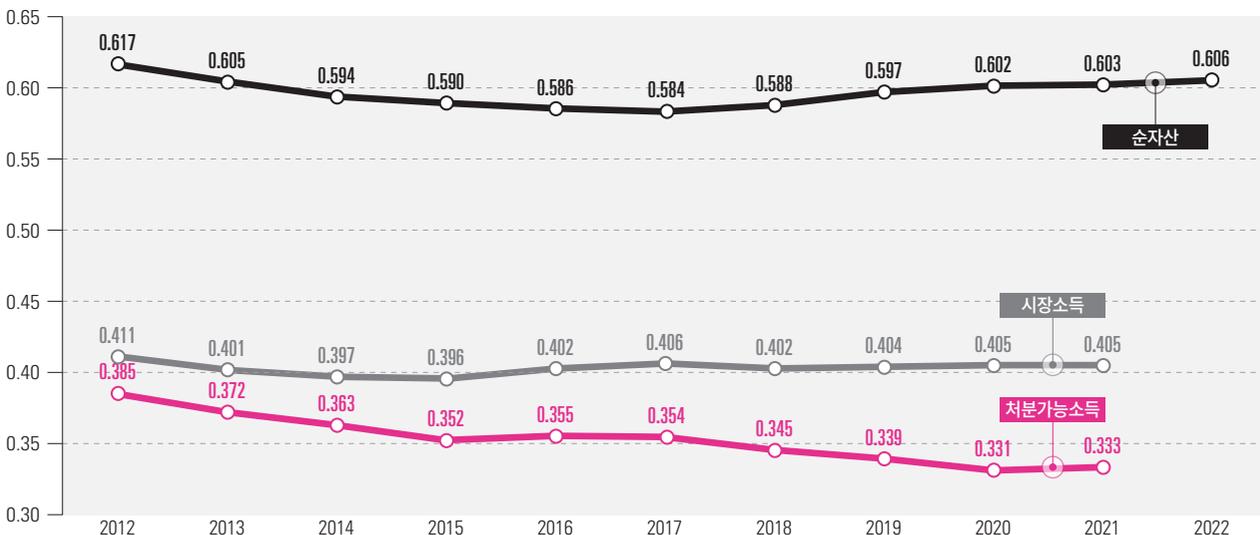
(☉ 관련 지표 10.4.2)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385에서 2021년 0.333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정부의 분배 정책을 평가하는데, 2012년 이래 전

반적으로 분배 정책 효과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전년에 비해 0.002 상승하고,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유지되어, 분배 정책 효과 또한 0.223만큼 전년 대비 감소했다.

소득과 다른 측면에서 불평등을 조명할 수 있는 지표는 자산이다. 자산은 부동산, 이자, 주식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력을 의미한다. 자산은 소득과 달리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아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의 상속으로 인한 불평등 이슈를 조명해 줄 수 있다. 소득 지니계수와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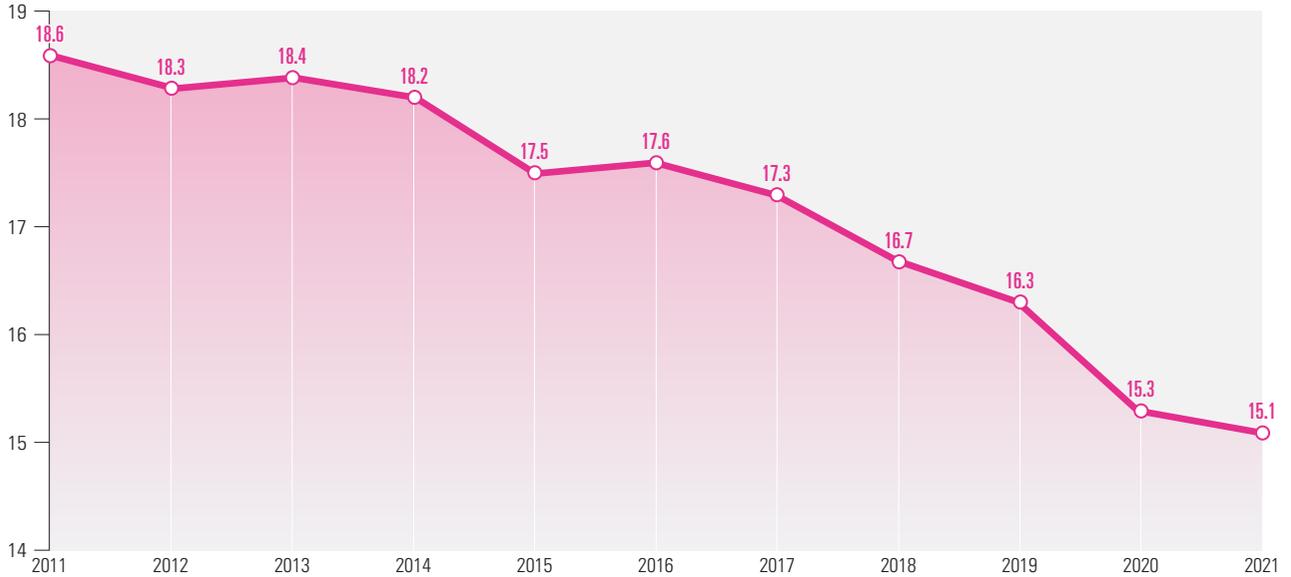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3.01.0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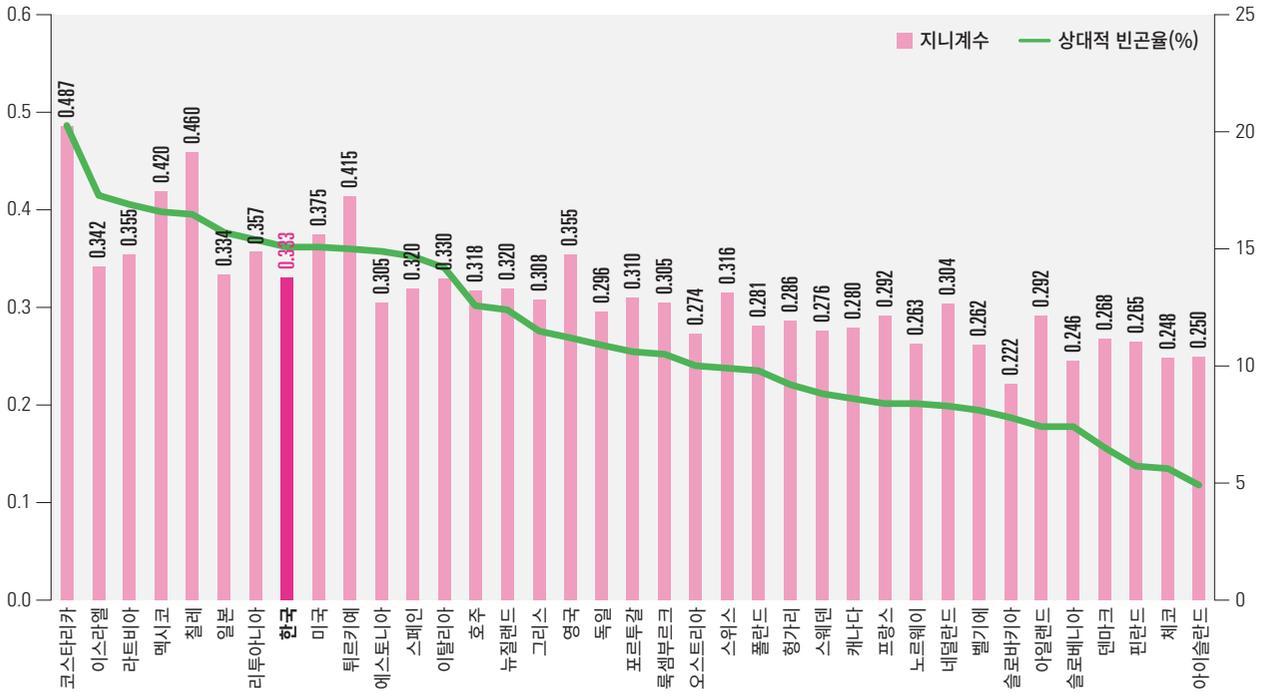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3.01.07. 인출)

### OECD 국가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출처: OECD Society Data, income inequality & poverty rate(<https://data.oecd.org/society.htm#profile-inequality>, 2023.01.02. 인출)

주 : 국가별 자료 제공된 가장 최근 연도(2017~2021년 범위)이며, OECD 38개국 중 콜롬비아는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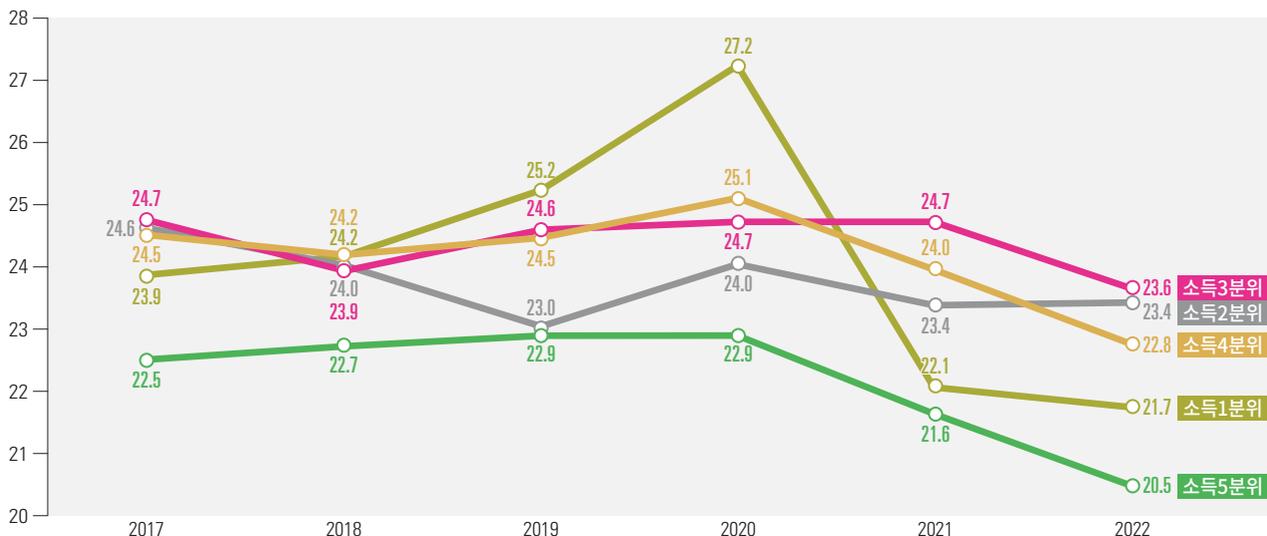
달리 순자산 지니계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까지 줄곧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0.606에 이른다. 순자산 측면에서 한국 지니계수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어 자산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들 중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자료가 제공된 OECD 37개국 중 한국(2021년 기준 0.333)은 11번째로 소득 지

소득분위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017~2022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3.01.07. 인출)  
 주 : 부채 보유 가구 중 소득분위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로 저자가 계산함

니계수가 높은 나라다. 노르웨이(0.263), 핀란드(0.265), 스웨덴(0.276), 캐나다(0.280), 네덜란드(0.304), 호주(0.318), 뉴질랜드(0.320) 등은 한국보다 소득 지니계수가 낮으며, 영국(0.355), 라트비아(0.355), 멕시코(0.420) 등은 한국보다 높다. 전체 가구에서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1년 18.6%에서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OECD 37개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과 함께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소득하위 1분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모든 소득분위 중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보여 주었다. 특히 2019년 25.2%에서 2020년 27.2%로 1년 만에 2%p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분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책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는 추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소득상위 5분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위 40%의 순자산 점유율 감소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 (☉ 관련 지표 10.4.1)**

한국은 2017년 이후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이 꾸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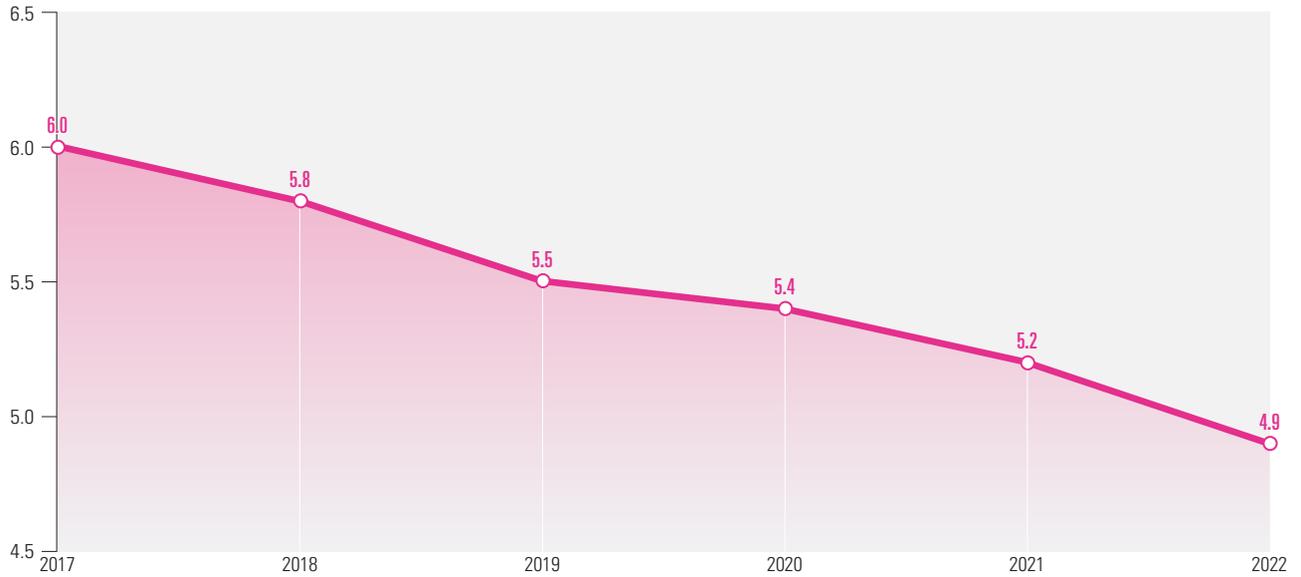
감소하고 있어 자산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 하위 40%의 순자산 점유율은 6.0%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8%와 5.5%로 감소했고 최근 2022년에는 4.9%까지 줄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는 55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2%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은행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016년 4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2020년에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수인 차주 수도 2020년에 전년 대비(4분기 기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민정·이재희, 2022). 신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2020년 이후에 안정적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코로나19 감염병과 연관된 단기적인 현상이지만, 향후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책의 분배 효과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영업 회복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하위 40% 순자산 점유율, 2017~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3.01.07. 인출)

### 자영업자 대출, 2016~2021

기준시점	대출 잔액(조)	전년 동기 대비(%)	차주 수(만 명)	평균 대출 잔액(억 원)
16년 4분기	480.2	13.66	143.0	3.36
17년 4분기	549.2	14.37	159.0	3.45
18년 4분기	624.3	13.67	177.0	3.53
19년 4분기	684.9	9.71	191.4	3.58
20년 4분기	803.5	17.32	238.4	3.37
21년 3분기	887.5	14.16	257.2	3.45

출처: 강민정 · 이재희, 소상공인 금융시장동향 리포트, Vol.2, p.6

### 금융건전성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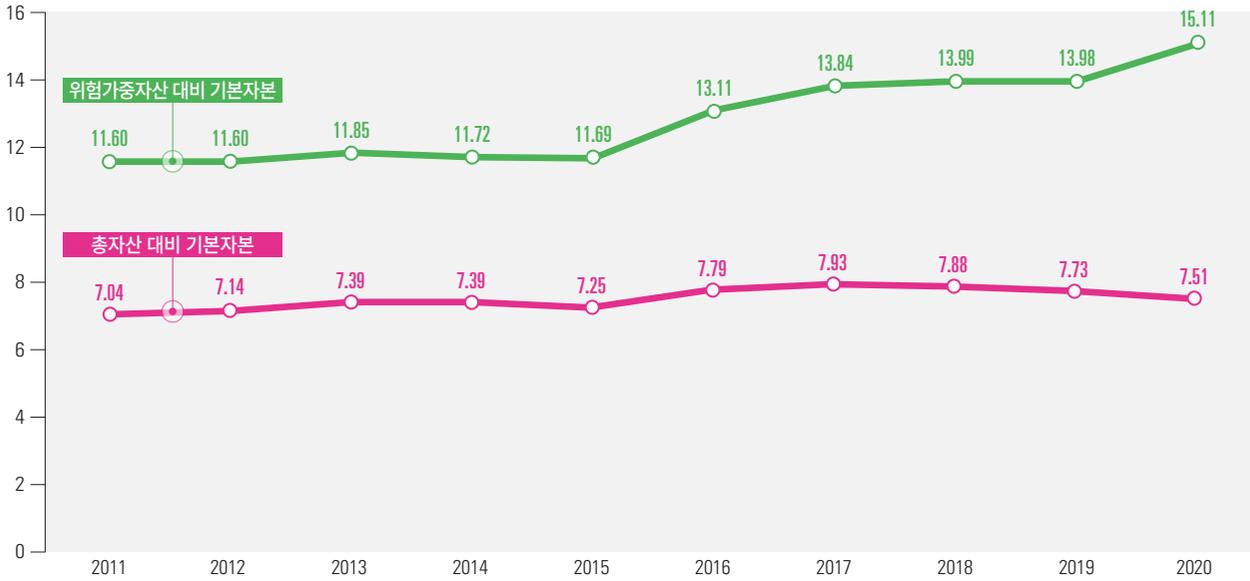
#### (☞ 관련 지표 10.5.1)

금융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이 있다. 기본자본(tier 1 capital)이란 보통주, 누적/상환이 아닌 우선주, 이익잉여금 등 안전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해당 비율은 7.04%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에 7.93%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해 2020년에는 7.51%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대에서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한국의 안전 자본의 비

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11%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3%대로 상승했고, 2019년까지 13%대가 유지되다가 2020년에는 15%대까지 이르렀다. 이 지표도 변화 폭은 크지 않지만,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기본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지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금융건전성에 극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는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은 35개국 중 20위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은 35개국 중 10위다.

금융건전성 지표,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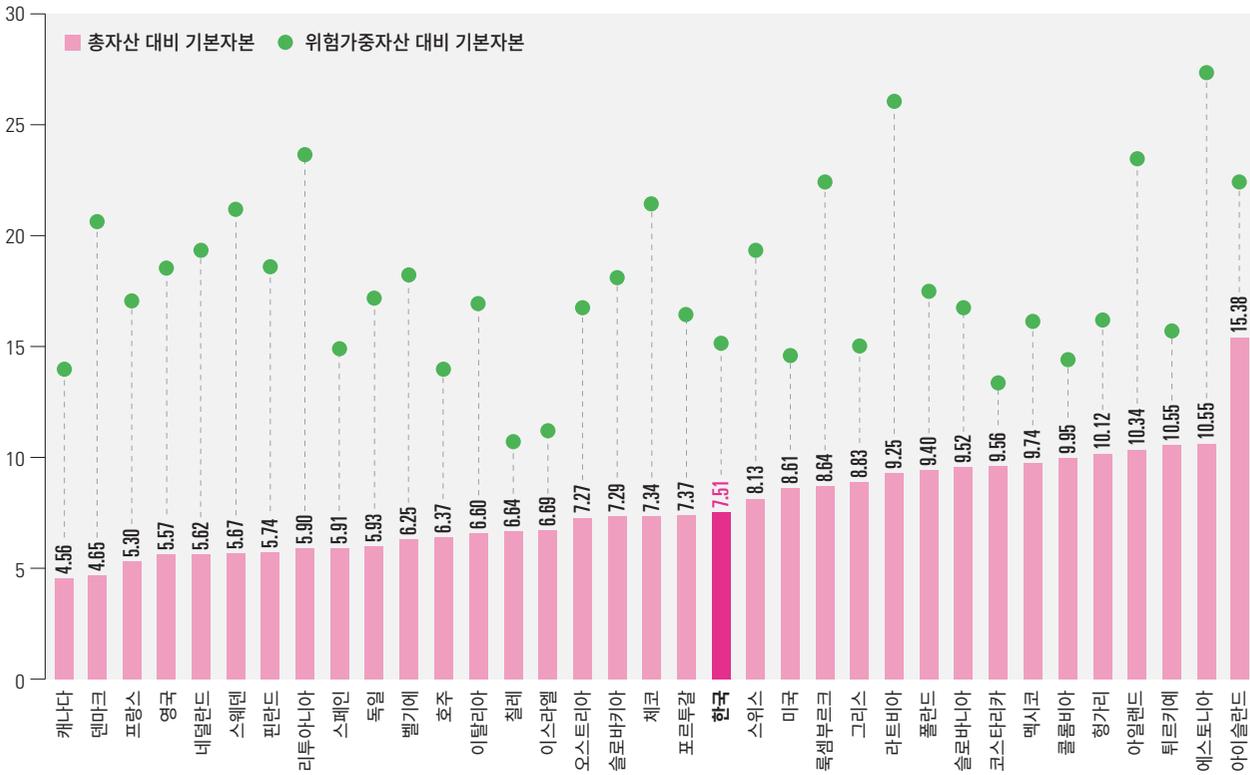
(단위: %)



출처: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FSIs)(<https://data.imf.org/?sk=51B096FA-2CD2-40C2-8D09-0699CC1764DA>, 2022.10.25. 인출)

OECD 국가별 금융건전성, 2020

(단위: %)



출처: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FSIs)(<https://data.imf.org/?sk=51B096FA-2CD2-40C2-8D09-0699CC1764DA>, 2022.10.25. 인출)

핵심 요약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지니계수는 국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냄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인구 중에서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60%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기본자본** : 보통주, 누적/상환이 아닌 우선주, 이익잉여금 등 안전한 자산



#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반지하 및 옥탑방이 밀집한 경기도의 한 주거단지 모습.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유엔 인간정주 프로그램(UN-Habitat)의 『2020 세계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인구의 56.2%가 도시에 거주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시 거주 인구가 2030년 60.4%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전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GDP의 80% 이상을 도시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엇본 도시의 취약성은 인류가 극복해야 할 위협 요인이다. 비대화된 규모와 집약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도시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와 행정시스템이 중요하며 도시 안에서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시스템이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도시 슬럼지구에 거주하는 빈민은 2030년 2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적절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1억 5600만 명의 도시민, 해마다 도시재난으로 발생하는 3140억 달러의 경제 손실 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UNESCO Cities Platform).

한국의 도시 인구는 1960년대부터 급증을 거듭해 전체 인구의 90%를 넘는 지 오래다. 그러나 도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군 단위에서 절차상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인당 도시 공원 면적 확보는 2000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대중교통까지의 평균 접근거리는 도보 8분으로 우수하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매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4.5%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청년 가구(7.9%), 소득하위 가구(7.3%) 등 취약계층과 수도권(2.3%)에 밀집되어 있고 대중교통 접근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등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 특히 취약하다. 도시 주거 여건의 미시적인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연속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취약계층에 집중 (☞ 관련 지표 11.1.1)

주거는 개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과 이웃 간의 공동체 생활까지도 포함한다. 면적 기준의 양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시설을 포함한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

한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소 주거 면적, 상하수도 설비가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추고 구조강도,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 시설을 갖추며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 요소의 법정 기준에 적합하고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전기 시설,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한다. 1인 가구 기준 최소 주거 면적은 14m<sup>2</sup>이며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06~2021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8&idxCd=8014>, 2023.01.04. 인출)



목욕 시설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비율은 2006년 16.6%에서 2014년 5.4%로 8년 만에 10%p 이상 감소했다. 그 후 2019년까지 5%대에 머무르다 2020년부터는 4%대에 진입했고 2021년에는 4.5%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59.5%가 거주하고 도지역과 광역시 지역에 각각 26.8%와 13.7%가 거주한다. 수도권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6년 12.8%에서 2021년 5.5%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광역시 지역은 17.7%에서 3.1%, 도지역은 21.6%에서 3.9%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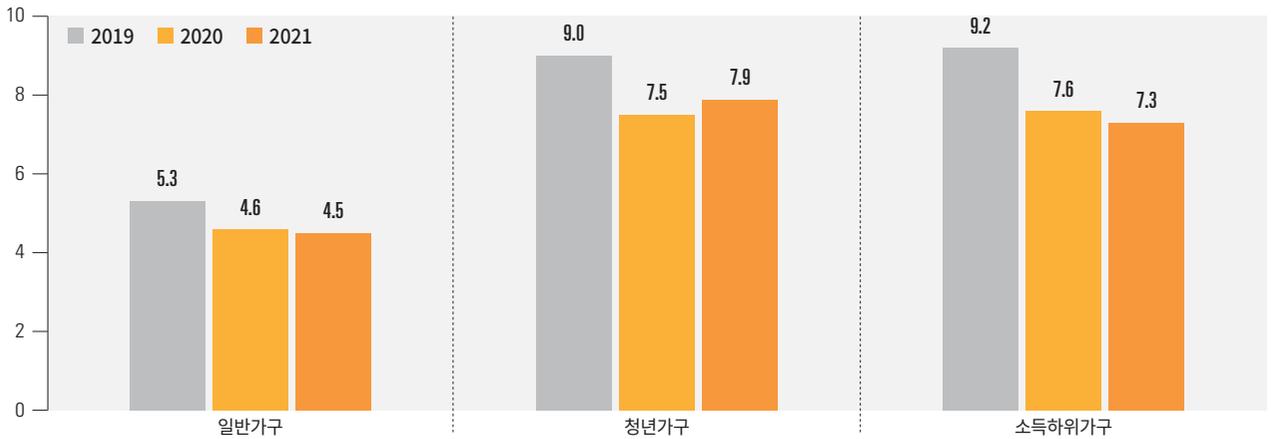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취약계층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난다. 2021년 기준 일반 가구에서는 4.5%에 그치지만 청년 가구와 소득하위 가구에서는 각각 7.9%와 7.3%로 월등히 높다. 특히,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감소 추세인데, 청년 가구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그 비율이 0.4%p 증가했다. 취약계층 주거 개선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한편, 전국 기준으로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1년 1.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와 도지역은 0.1%이고, 수도권이 2.3%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 증가했다가 2021년 다시 감소했다. 이러한 주거 형식이 도시 주거 문제 해결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성 가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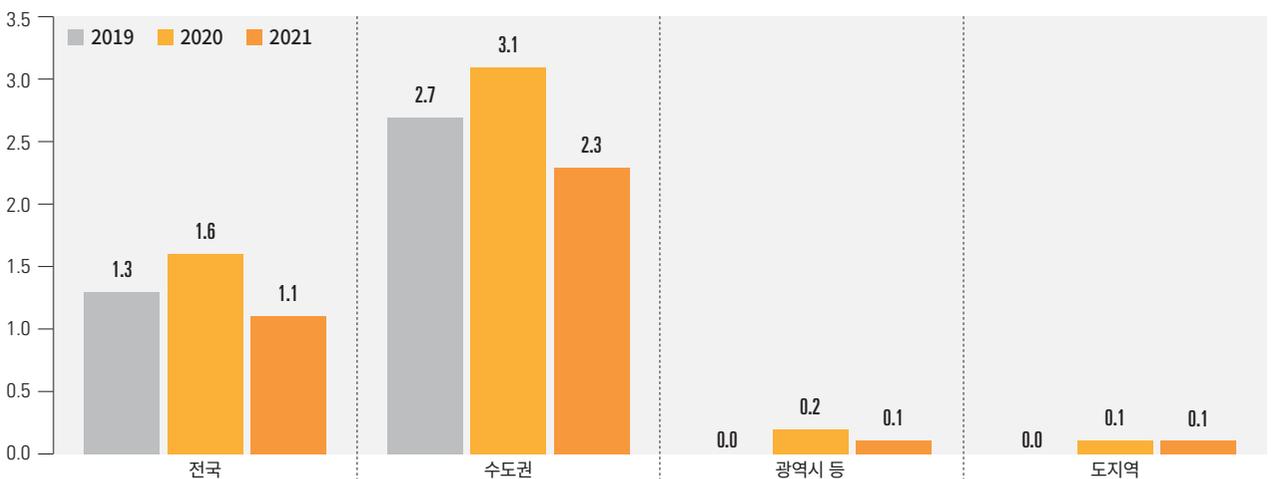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9~2021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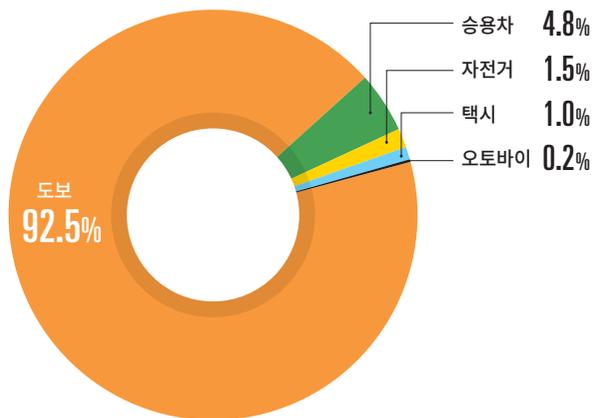
**대중교통까지 접근거리 평균 8.18분,  
미시적 취약 지역 존재 (☉ 관련 지표 11.2.1)**

2020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최초 대중교통 이용까지 접근하는 데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92.5%로 가장 높고 이어 승용차 4.8%, 자전거 1.5%, 택시 1.0% 순으로 나타났다. 각 수단의 접근시간을 보면 도보가 8.03분, 승용차가 9.87분, 자전거가 10.14분이었으며 전체 평균 8.18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을 살펴보면 1주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서울 9.86회, 부산 9.67회, 경기 9.63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최초 출발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소요되는 접근시간은 강원이 9.16분으로 가장 길고 세종이 7.73분으로 가장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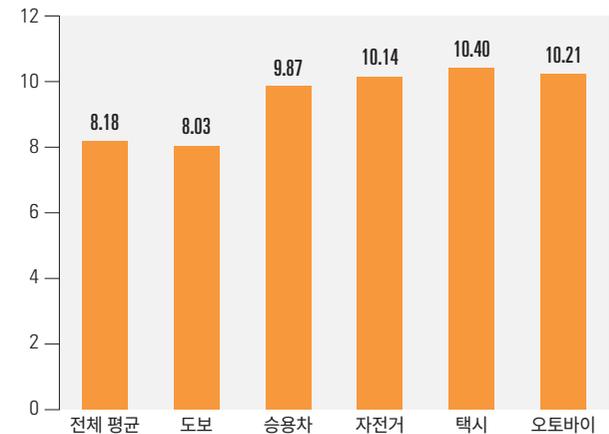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의 경우(인구밀도 1km<sup>2</sup>당 1만 5699명, 전체 인구의 18%가 거주) 10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있다. 집계구 단위의 미시적 분석에 따르면 서남권역,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 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대중교통 접근 취약 지역이 미시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에 따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인구는 2007년 전체 인구의 24.3%에서 2021년에는 30.0%로 증가했다(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이에 따른 이동편의 시설, 보행환경 개선, 저상버스 도입, 이동 연계성 등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초 대중교통 이용까지 접근수단,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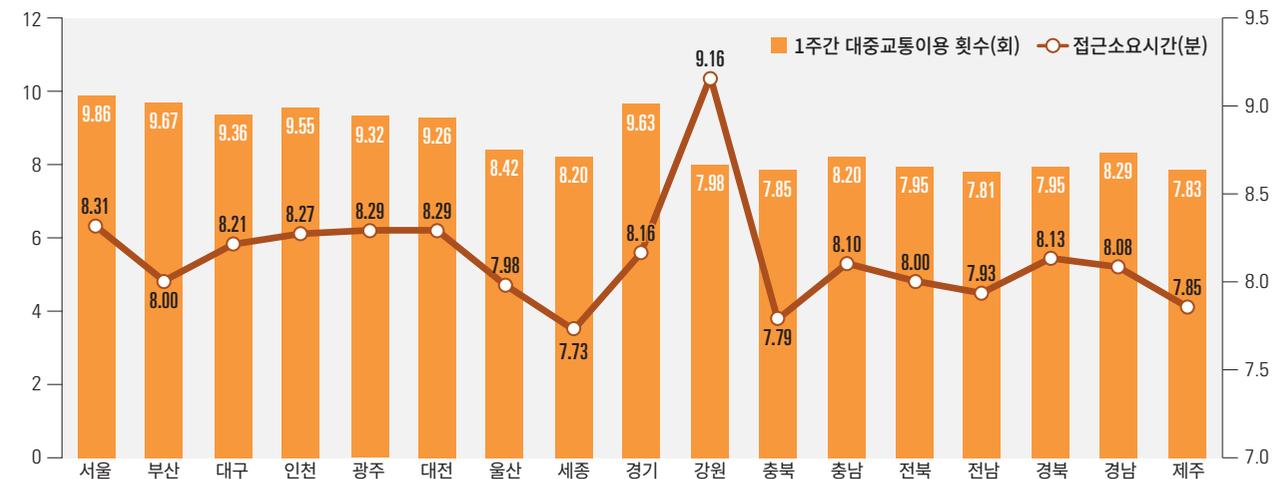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보고서

최초 대중교통 이용까지 접근시간, 2020 (단위: 분)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보고서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 특성, 2020 (단위: 회, 분)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보고서



##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은 2000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나 실효성 있는 집행 필요 (☉ 관련 지표 11.7.1)

국내에서 도시 공원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 공간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5조에서는 도시 공원을 국가 도시 공원, 생활권 공원(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을 포함),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을 포함)으로 그 기능과 주제에 따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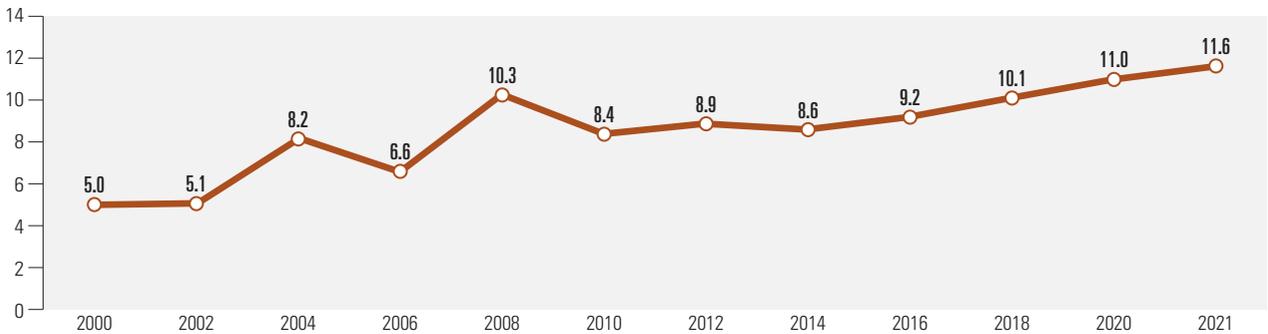
한국의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은 2021년 11.6m<sup>2</sup>로 2000년 5m<sup>2</sup>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 공원, 녹지,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로, 도시화된 정주 여건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 및 휴가 등을 위해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별 공원 결정 면적을 살펴보면 경기(167.3km<sup>2</sup>)가 가장 크고 이어 부산(59.3km<sup>2</sup>), 경남(58.3km<sup>2</sup>), 서울(50.7km<sup>2</sup>)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부산, 광주, 세종을 제외한 시도에서 2019년 대비 2021년 도시 공원 면적이 소폭 감소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이 해제된 결과로 보인다. 주거지 내 접근가능한 공공녹지의 확보는 도시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가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공공녹지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관련하여, 녹지 면적이 2000년 96km<sup>2</sup>에서 2021년 203km<sup>2</sup>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OECD 주요국의 대도시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공원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1인당 도시 공원 조성 면적, 2000~2021

(단위: m<sup>2</sup>/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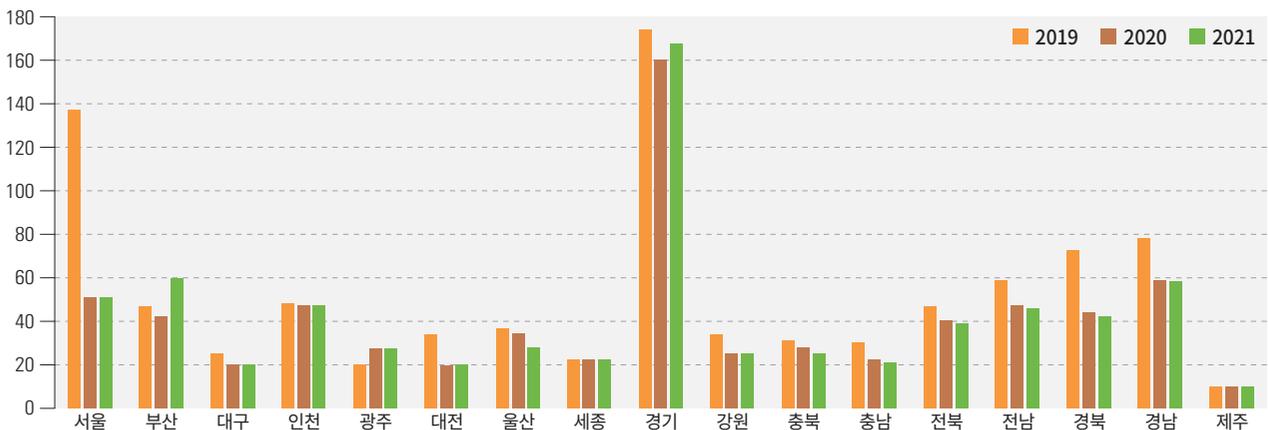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계획현황

주 :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은 도시 공원 조성 면적을 해당 도시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여기서 도시 공원 조성 면적은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조성된 도시 공원 면적을 일컫음

최근 3년간 시·도별 도시 공원 면적 현황, 2019~2021

(단위: km<sup>2</sup>)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계획현황

## 녹지 및 유원지 면적, 2000~2021

(단위: km<sup>2</sup>)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계획현황

주 : 녹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 휴양시설

##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한

### 시민 참여 운영 (☉ 관련 지표 11.3.2)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공간구조와 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한국의 모든 시와 군은 이를 구체화해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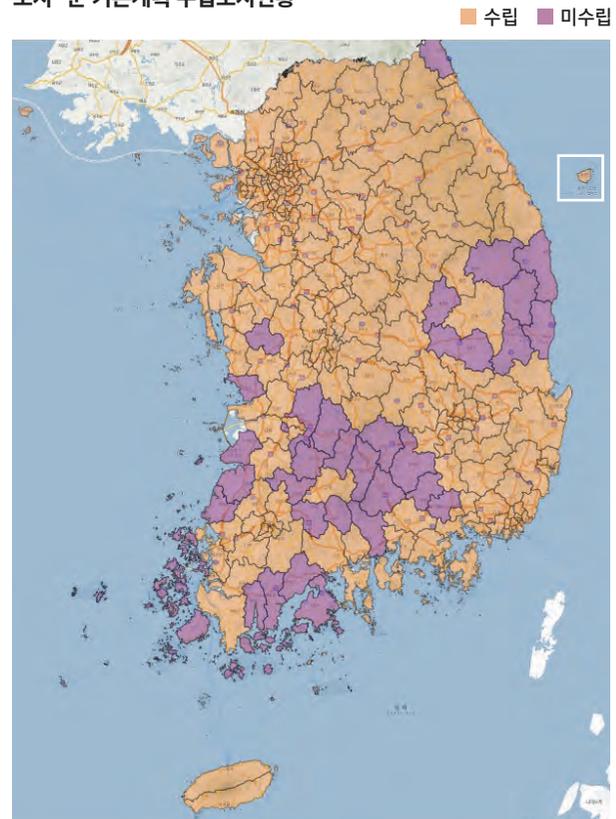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통해 주민 중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5편 2장 1절 주민참여 제고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8편 1장 3절 입안 과정에 따르면 입안권자(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이 참여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2021년 기준 161개 시군 중 34개 군에서 도

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충청남도 2개 군, 전라북도 7개 군, 전라남도 10개 군, 경상북도 7개 군, 경상남도 8개 군이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되어 있다.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도시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계획현황

-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
- **도시 공원** : 도시 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
- **녹지** :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돌고래의 모습을 담은 재활용 미술 작품.

Lee Yiu Tung/Shutterstock.com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SDG 12번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목표로 한다. 한정된 자원을 소비하여 사용하고 ‘버리는 경제(throwaway economy)’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며 폐기물 발생량 급증으로 삶의 터전인 생활환경의 오염을 가속화한다. 자원 소비에 의존한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 성장과 폐기물 발생의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21년 12월 K-순환경제(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서는 폐기물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전환·산업·수송·건물·농업·산림 등 사회 전반의 물질 순환이 완성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전 세계에 팬데믹을 안겨 준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한국의 경제 성장과 폐기물 발생의 탈동조화 추세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1인당 하루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낮은 편이며 재활용률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020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해 택배와 배달음식 포장재 발생량이 증가했다. 2020년 택배 물동량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20.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중 택배 박스 등 폐지류 기타 항목 발생량도 21.1%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배달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수지류 발생량은 27.2%, 택배나 음식배달에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기타 항목 발생량은 59.9% 증가했다. 소비행태 변화로 폐기물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을 높이는 노력에 앞서 발생 예방과 감량을 위한 노력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의 탈동조화 추세는 뒷걸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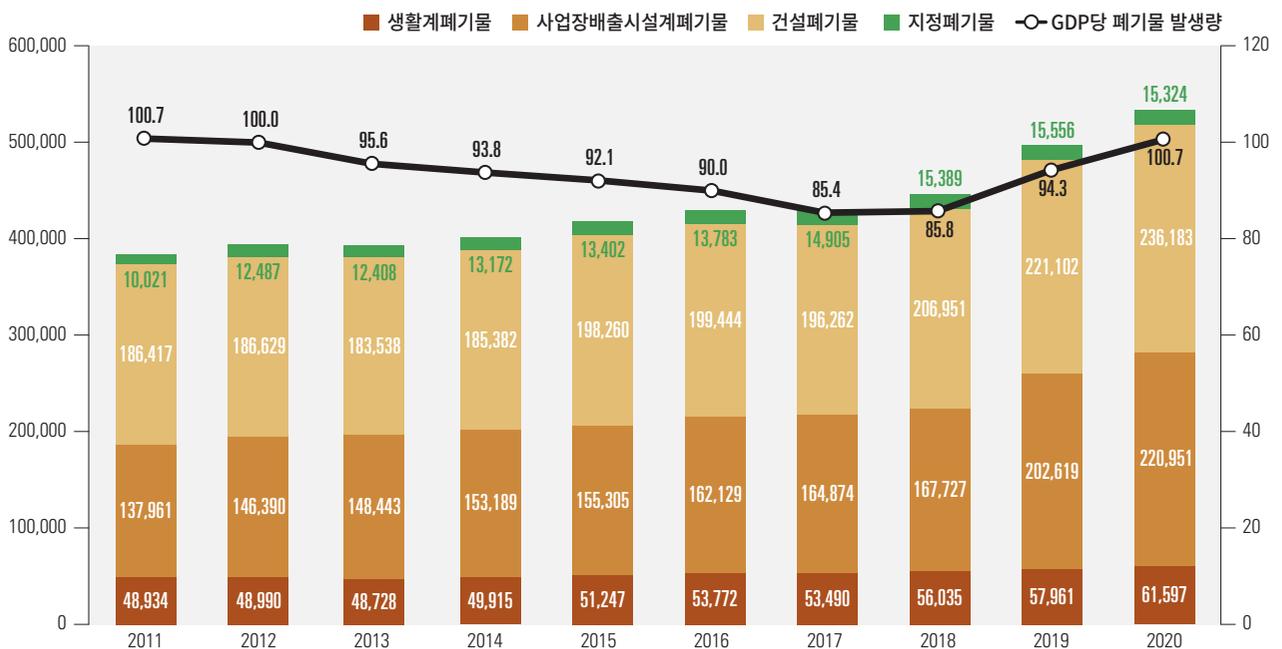
(☉ 관련 지표 12.5.1)

일반적으로 생산을 늘리면 폐기물 발생도 그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폐기물 증가의 상관관계를 끊어낼 필요가 있다. GDP당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성장과 폐기물 발생의 탈동

조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다. 2011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던 GDP당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바뀌며 2020년에는 10억 원당 100.7톤으로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기가 침체함과 동시에 배달 및 택배 관련 포장재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형별 폐기물 발생량 및 GDP당 폐기물 발생량, 2011~2020

(단위: 톤/일, 톤/10억 원)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소득  
 주1: 전체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 합임  
 주2: GDP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GDP'로 계산함  
 주3: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2018년부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통합되어 공표됨



2020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53만 4055톤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5.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같은 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6만 1597톤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최근 10년 평균인 2.3%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 성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0% 증가한 1일 22만 951톤에 이른다. 전체 폐기물 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36.0%에서 2020년 41.4%까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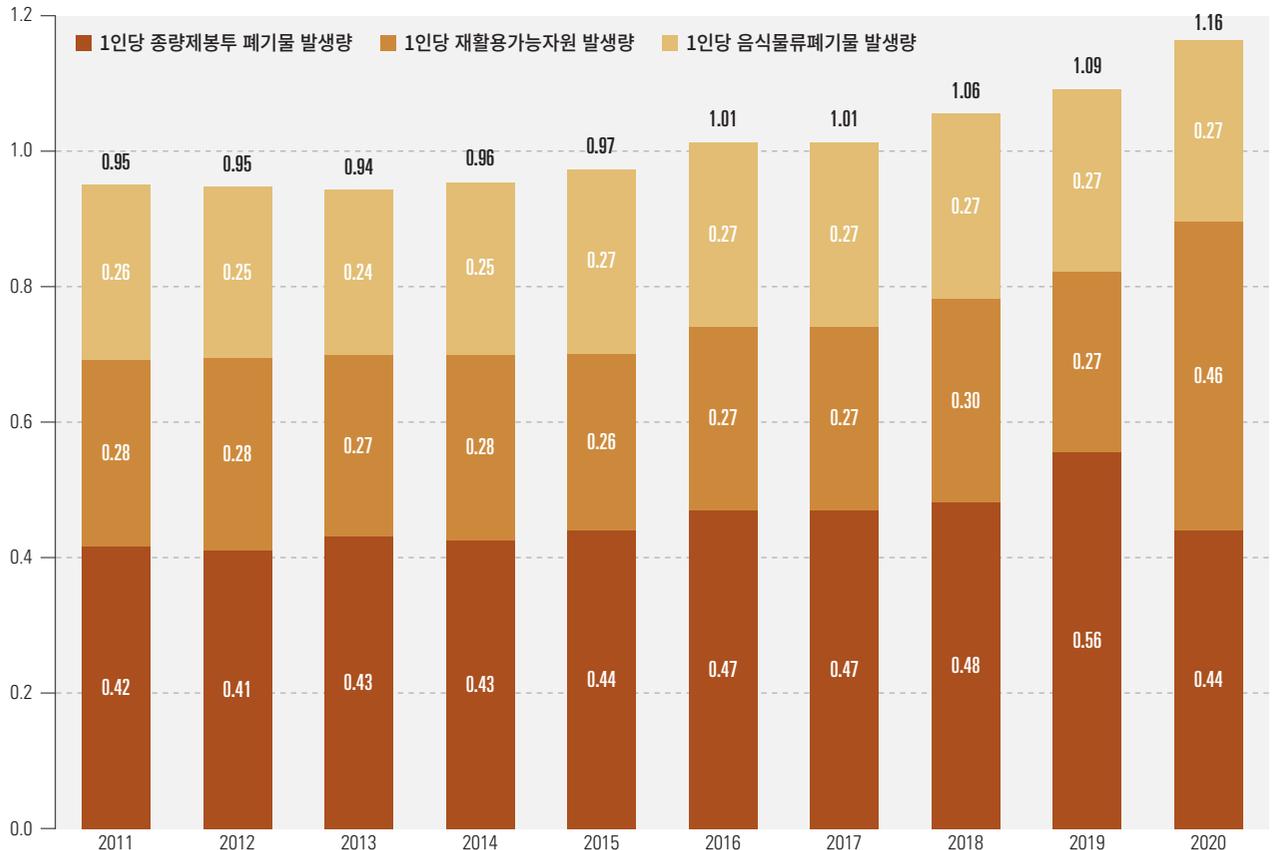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1일 1.16kg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배출유형별로 보면 종량제봉투 등의 혼합배출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분리배출량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최근 분류집계 방법이 달라진 것이 영향을 주었다. 생활계폐기물 중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에서 기존 종량제 혼합배출로 집계되던 폐지류, 폐목재류, 가연성(기타) 폐기물의 일부가 재활용 분리배출로 변경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혼합배출량의 비중이 2019년 50.9%에서 2020년 37.8%로 줄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실시로 생활양식이 변화한 것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중에서 비닐류, 발포수지류, PET병, 폐합성수지류 기타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류의 2020년 발생량은 1일 3166톤으로 전년 대비 21.6%나 증가했다. 그중 배달 및 포장 음식에 사용되는 발포수지류 발생량은 2019년 대비 27.2% 증가했고 그 외에 기타 폐합성수지류 발생량은 59.9% 증가하였다. 또한 종량제봉투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품목의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11~2020

(단위: kg/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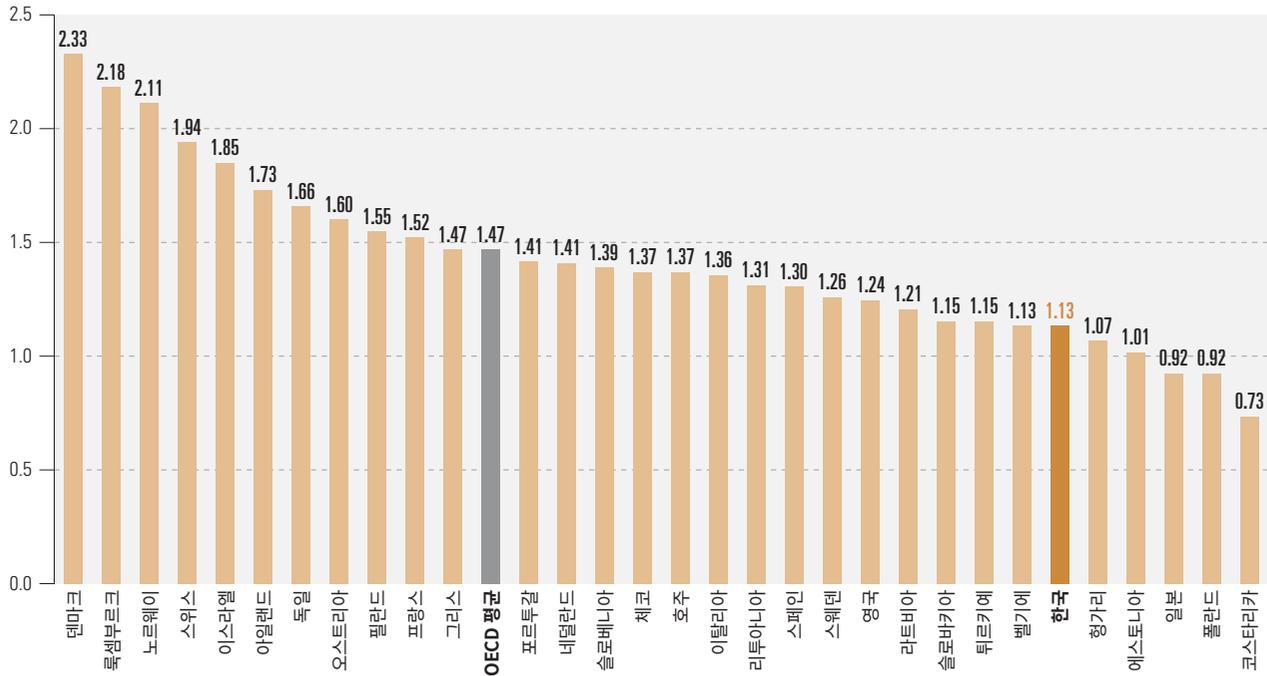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주1: 생활계폐기물은 생활(가정)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성됨. 사업장비배출시설계는 하루에 300kg 이상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다량배출시설을 말함

주2: 사업장비배출시설계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은 배출특성을 고려해 2020년부터 '혼합배출 외 분리배출'로 명칭 변경됨

OECD 국가별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19

(단위: kg/일/인)



출처: OECD.Stat, Municipal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municipal waste generated per capita"(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1347, 2022.08.10. 인출)  
 주 : OECD 38개국 중 2019년 수치가 가용하지 않은 7개국은 제외됨

로 배출되지 못한 오염된 음식 포장용기류나 비닐류 등 기타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1일 5410톤으로 2019년 대비 13.7% 증가했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고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96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도 부족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8개시는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7곳(1436톤/일) 용량의 1.6배인 2300톤 규모의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평균은 2019년 기준 1.47kg으로 나타난다. 한국(1.13kg)은 코스타리카, 폴란드, 일본, 에스토니아, 헝가리에 이어 31개국 중 6번째로 1인당 배출량이 적다.

### 전체적인 재활용률은 증가하는 한편

#### 생활계폐기물은 정체 (☉ 관련 지표 1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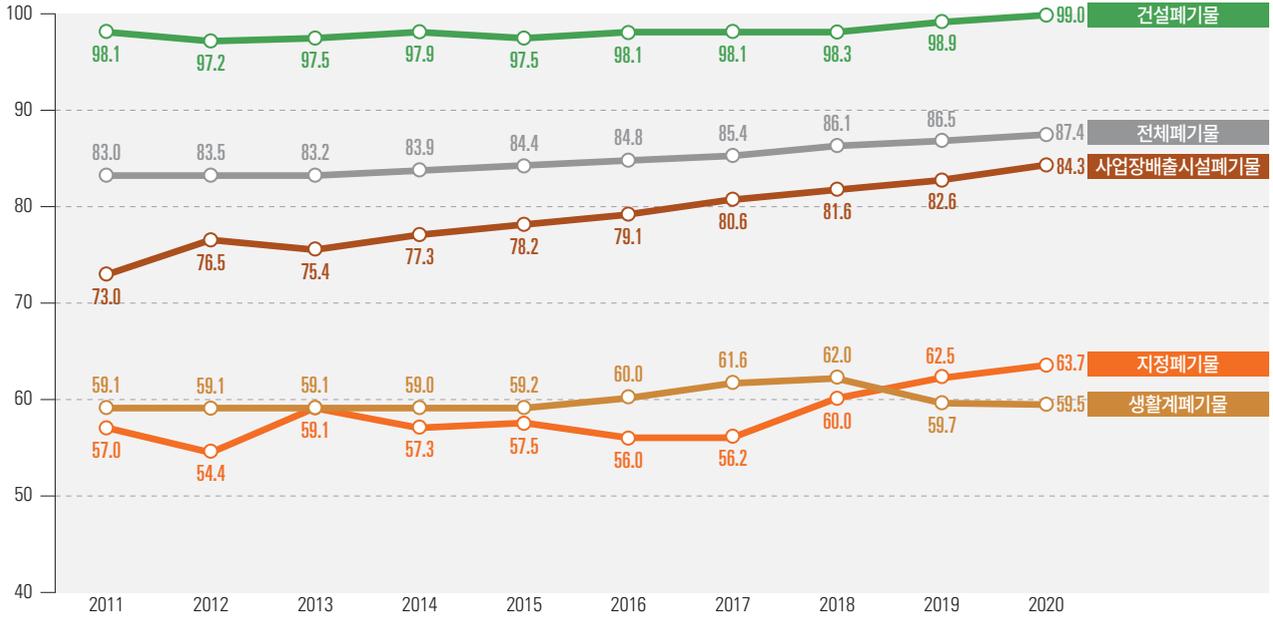
폐기물 재활용은 자원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020년 기준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87.4%로 전년 대비 0.9%p 증가했다. 이는 10년 평균 증감률 0.5%p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59.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한편 같은 해 사업장 배출시설계 재활용률은 84.3%로 전년 대비 1.7%p 증가했다. 지정폐기물 재활용률도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생활계폐기물 평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24.0%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56.5%로 31개국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다. 한편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과 재활용 품질의 문제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물질에 의한 재활용 선별품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2020년부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2021년 235억 원, 2022년 281억 원을 지원하였다.



###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률,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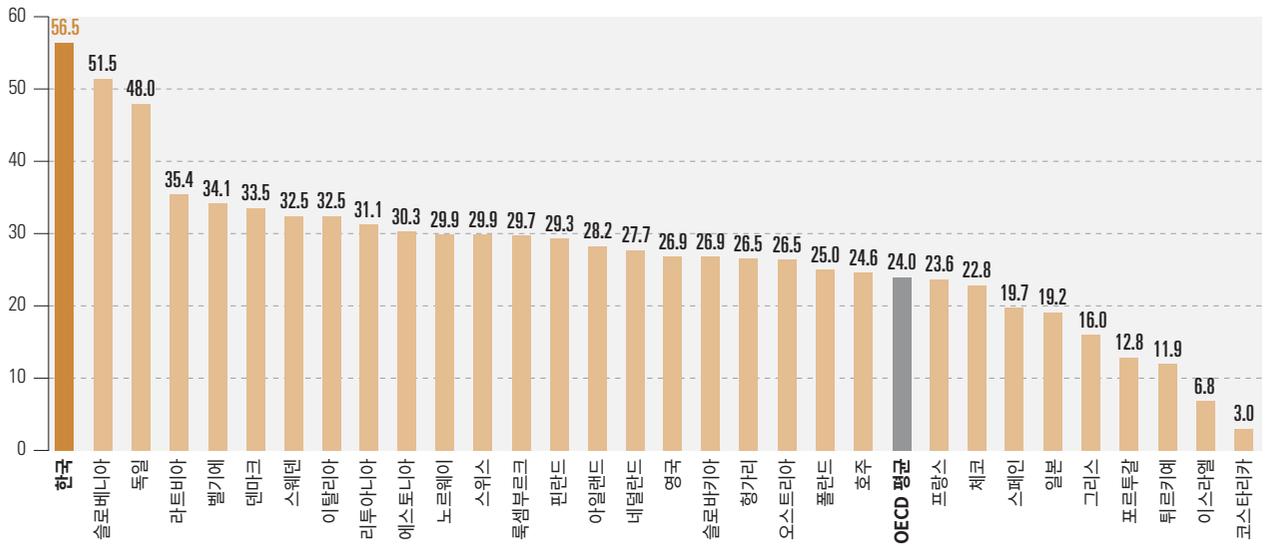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및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 OECD 국가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 2019

(단위: %)



출처: OECD.Stat, Municipal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 recycling"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1347>, 2022.08.10. 인출)

주 : OECD 38개국 중 2019년 수치가 없는 7개국은 제외함

### 코로나19와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 (☉ 관련 지표 12.5.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1~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 증가했다. 2015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종량제봉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통계에 추가됨에 따라 재활용률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

로 유지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2020년 1만 5464톤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배달음식 증가와 간편식 선호의 영향으로 보인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9.0%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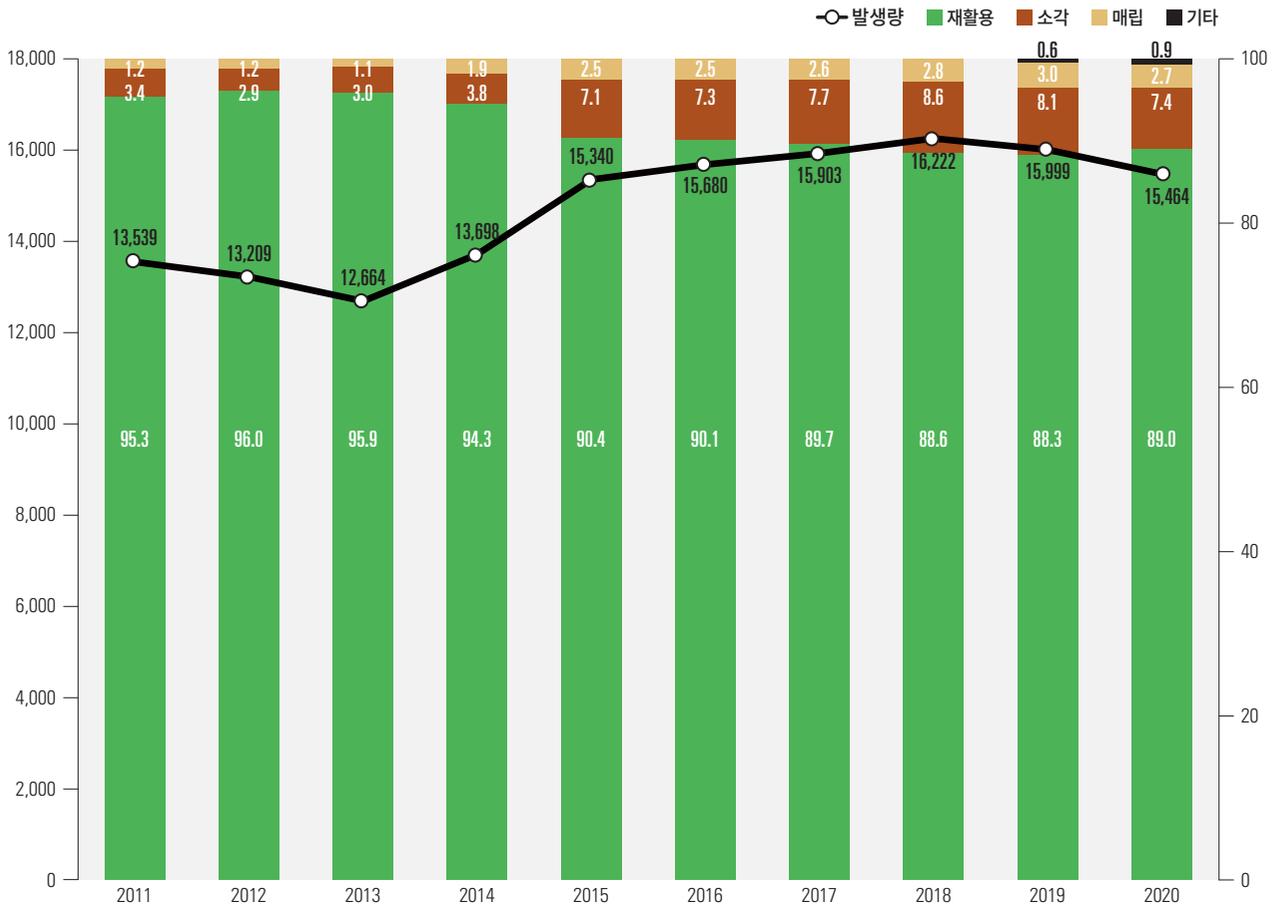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유형을 보면, 2020년 기준 분리배출이 1일 1만 4105톤으로 91.2%를 차지하고 종량제

봉투 등 혼합배출이 1일 1360톤으로 8.8%를 차지한다. 종량제봉투 등을 통해서 배출되는 양 중에서는 생활(가정) 폐기물(1317톤/일)이 대부분이다. 이는 병원이나 학교 등 다량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기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발생량(1344톤/일)에 맞먹

는 양이다.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70.1%)되는 반면 분리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거의 다 재활용(96.8%)된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음식물류 폐기물 중 분리배출 폐기물의 90.1%는 재활용되며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40.9%는 소각 처리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비율, 2011~2020

(단위: 톤/일, %)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유형 및 처리방법별 비율, 2020

(단위: %)

구분	배출유형	음식물류 폐기물 중 비율	처리방법별 비율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합계(생활계폐기물)	총계	100.0	89.0	7.4	2.7	0.9
		혼합배출	8.8	8.2	70.1	20.2	1.4
		분리배출	91.2	96.8	1.3	1.0	0.8
	생활(가정)폐기물	종량제	8.5	7.2	71.1	20.8	0.9
		분리배출	82.5	97.6	1.4	1.0	0.0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혼합배출	0.3	38.5	40.9	2.6	17.9
분리배출		8.7	90.1	0.6	0.9	8.3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



## 폐합성수지 폐기물 집계 보완으로 발생량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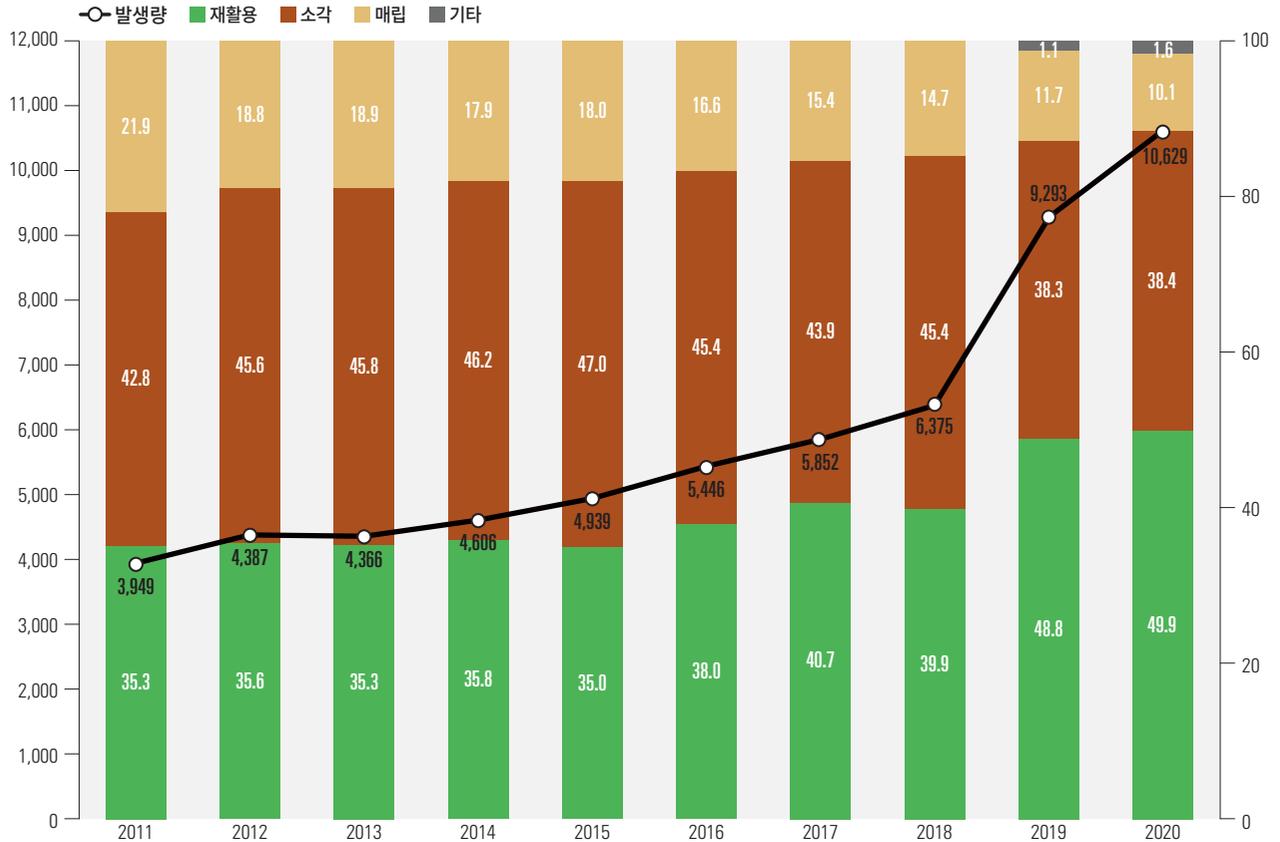
(☞ 관련 지표 12.5.1)

기준에 플라스틱류로 집계되던 통계는 2019년부터 폐합성수지류로 통합 집계되고 있다. 가연성 기타로 집계되던 일부 물량이 폐합성수지류 통계로 집계되면서 통계에 누락된 발생량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2020년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1만 2052톤으로 2019년 대비 9.4% 증가했는데, 이는 2011~2018년 플라스틱류의 연평균 증감률인 6.1%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 시기에도 통계집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2019년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기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혼합배출로 집계되던 폐합성수지류가 2020년에는 분리배출 항

플라스틱류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비율, 2011~2020

(단위: 톤/일, %)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주 : 플라스틱류는 2018년까지 별도 집계되었으나 2019년부터 폐합성수지류 안에 통합됨.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 2020년 폐합성수지류 통계에서 가능한 한 플라스틱류(PET병 및 기타)를 분리해 산정함. 단, 일부 혼합배출 등의 경우 플라스틱류가 별도 제시되지 않아 폐합성수지류 통계를 활용함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배출유형 및 처리방법별 비율, 2020

(단위: 톤/일, %)

구분	배출유형	총 폐합성수지류 중 비율	처리방법별 비율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처리
폐합성수지류	총계	100.0	55.8	33.9	8.9	1.4
	혼합배출	43.0	19.0	59.0	20.6	1.3
	분리배출	57.0	83.6	14.9	0.0	1.4
생활(가정)폐기물	총량제	38.7	13.9	63.0	22.5	0.6
	분리배출	26.3	100.0	0	0	0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혼합배출	4.3	64.6	23.5	3.9	8.0
	분리배출	30.7	69.6	27.7	0.0	2.7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

목으로 집계되며 기존에 누락되던 통계가 보완되었다. 2020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는 1일 4223톤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는데 이 중 일부는 2020년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된 폐합성수지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2019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집계된 불법 폐기물량이 2020년에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집계된 영향도 있다.

기존 플라스틱류 통계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폐합성수지류 중 플라스틱류를 분리집계해 보면, 2020년 플라스틱류 발생량은 하루에 1만 629톤, 이 중 재활용량은 5306톤으로 집계된다. 재활용률은 49.9%로 2019년에 비해 1.1%p 증가했으며, 소각률은 거의 변화가 없고 매립률은 1.6%p 감소했다.

생활계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중 43.0%는 종량제 등으로 혼합배출되며 나머지 57.0%는 분리배출 된다. 생활폐기물 중 분리배출 된 플라스틱류와 폐합성수지류는 전량

재활용되는 반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분리배출 된 폐합성수지류는 69.6%만 재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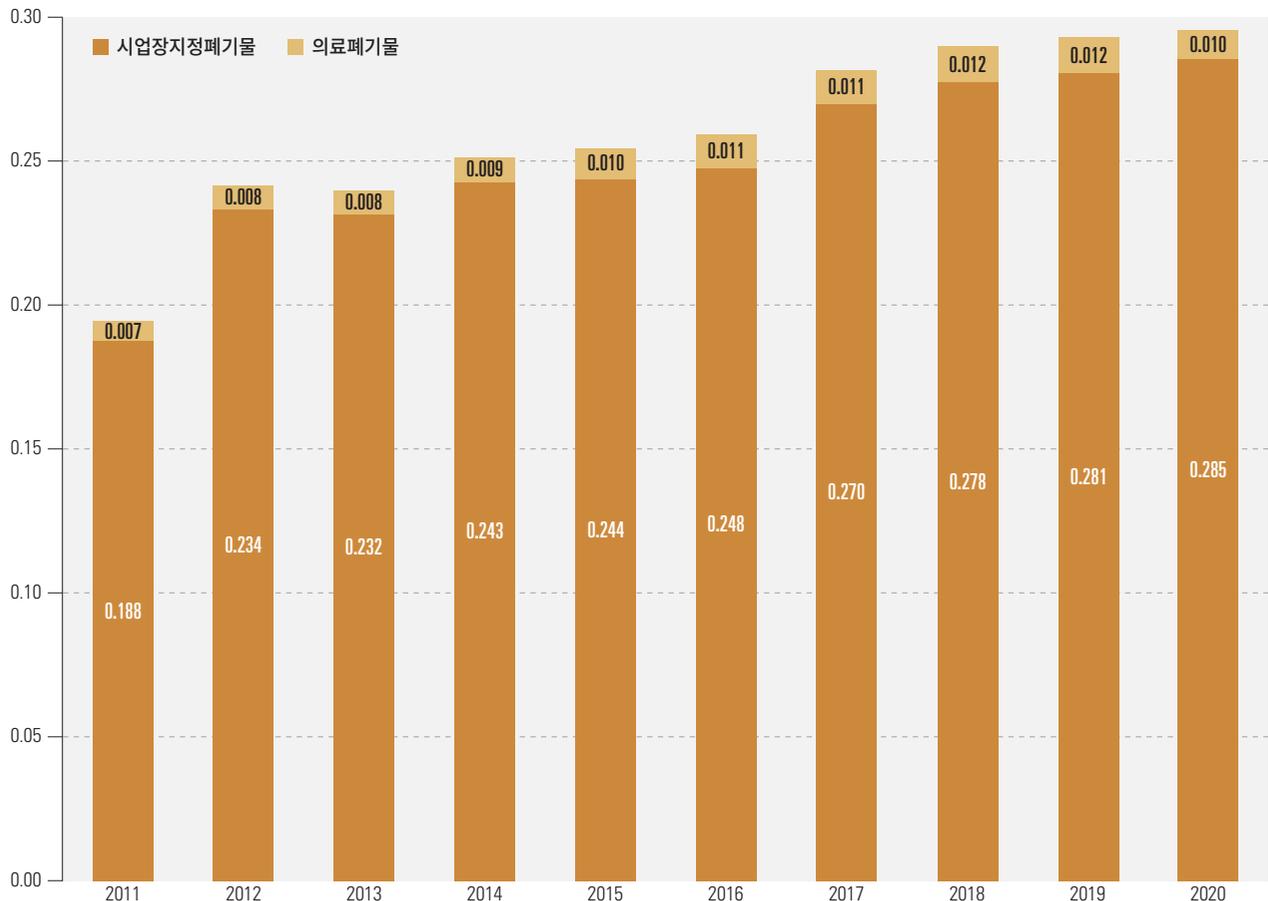
### 사업장이 배출하는 유해폐기물은 꾸준히 증가

#### (☞ 관련 지표 12.4.2)

유해폐기물은 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구분된다. 유해(지정)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일평균 1만 5324톤 발생했다. 이 중 사업장 지정폐기물이 전체 지정폐기물의 96.5%를 차지하고 의료폐기물은 나머지 3.5%를 차지한다.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일평균 0.296kg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최대량을 기록하였다. 1인당 의료폐기물 발생량 역시 최근 10년간 대체로 증가세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5.4% 감소한 일평균 0.010kg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인당 유해(지정)폐기물 발생량, 2011~2020

(단위: kg/인/일)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주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2018년부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통합되어 공표됨



# 13 CLIMATE ACTION



2022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세션 모습.

#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SDG 13번 목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주기 특별보고서와 실무그룹 평가보고서 승인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국제사회에 확산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눈여겨볼 변화는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더 이상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만의 문제가 아닌 내 삶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민간기업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IPCC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전 지구 온난화 수준은 약 1.09°C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 10만여 년 동안 기록된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온난화 크기와 속도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따라 세기말에 겪게 될 기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전 지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미래인 2040년 이전에 1.5°C 온난화 수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적응 노력도 시급하다.

한국도 지난 100여 년간 여름의 길이가 20일 늘어나는 등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의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서식지가 변화하는 등 점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 여름철 폭우와 태풍에 의한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에 제정되었다. 국가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모든 주체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감소세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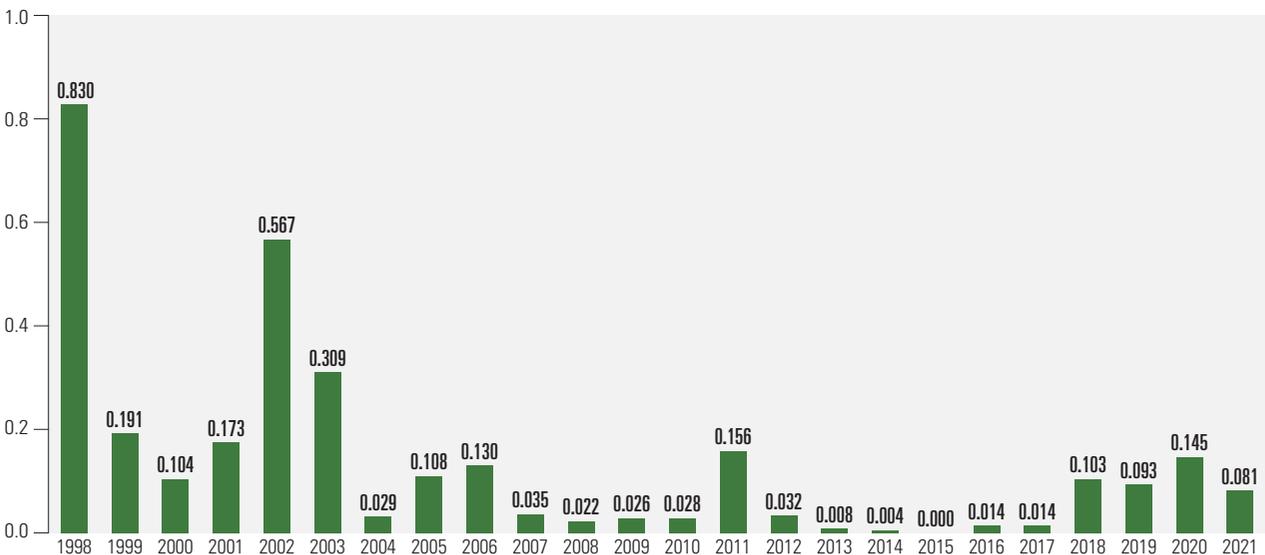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13.1.1)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8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8년 소폭 상승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큰데, 1998년 인구 10만 명당 0.83명으로 큰 피해가 기록된 이후 2002년 0.57명, 2003년 0.31명, 2011년 0.16명 등 재

난이 컸던 해의 피해 규모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에는 실종·사망이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 능력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2018년부터는 폭염이 자연재난 통계에 포함되면서 인명피해 수치가 소폭 증가했다.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보다 더 큰 재난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적응 능력을

인구 10만 명당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 1998~2021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tot/toteailist.jsp?emgPage=Y&menuSeq=111>, 2023.01.10. 인출)  
주 : 연도별 자연재해 사망 및 실종수를 주민등록 총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더욱 향상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 전 세계 19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리스크 평가인 'INFORM RISK'에 따르면 한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은 191개국 중 36위로(일본 3위, 중국 7위) 비

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성과 대응 역량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지수는 160위로 위험도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아래는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인데, 자연재난 발생위험은 5.9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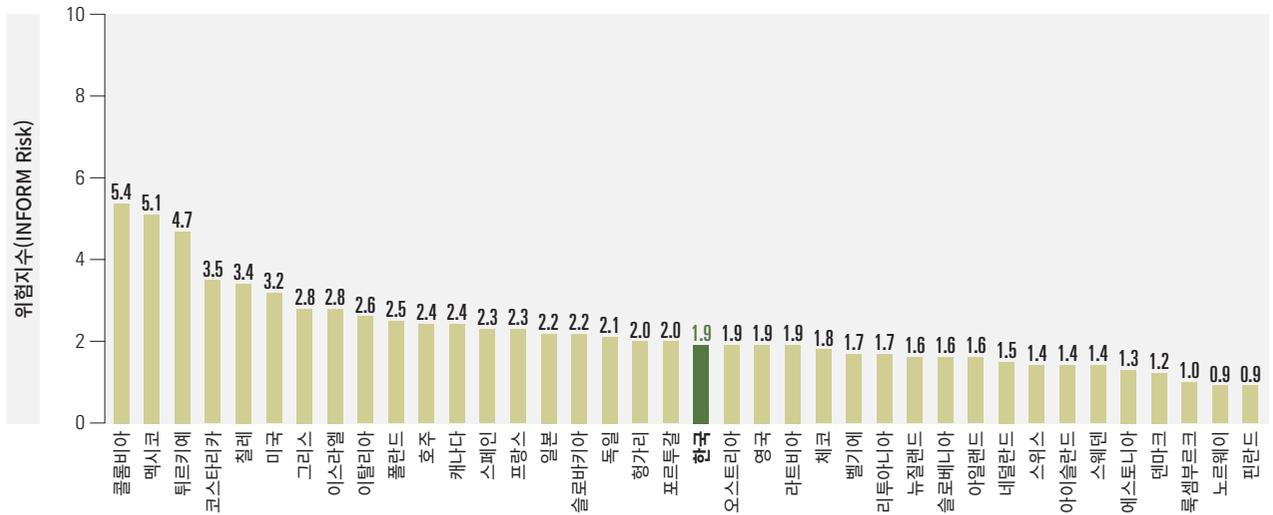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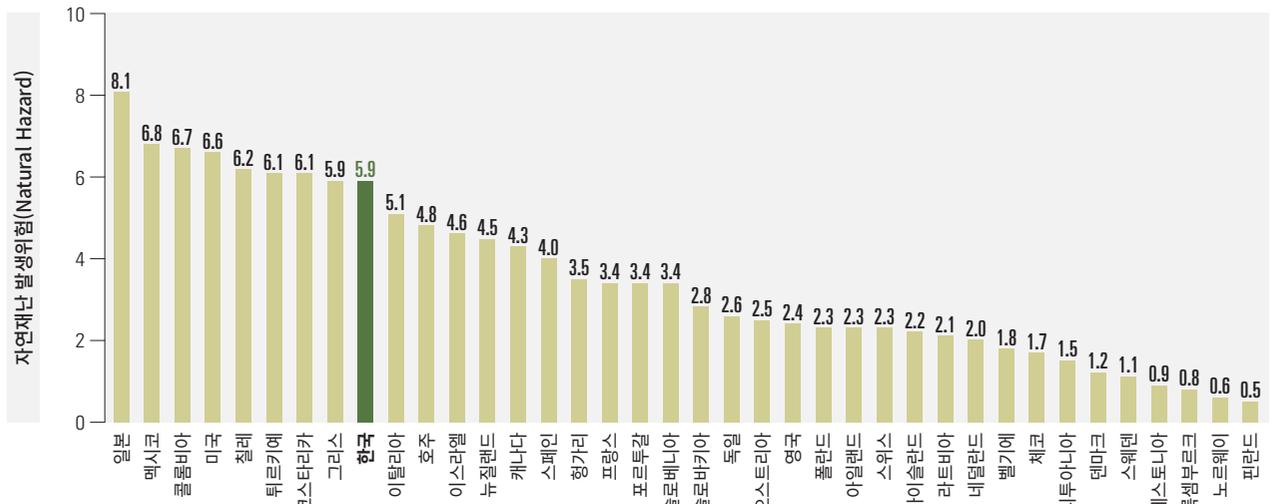
자연재난 유형별 실종·사망자 수, 2012~2021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년 평균
호우	2	4	2	-	1	7	2	-	44	3	6.5
태풍	14	-	-	-	6	-	2	18	2	-	4.2
태풍·호우	-	-	-	-	-	-	1	-	-	-	0.1
대설	-	-	-	-	-	-	-	-	-	-	-
폭염	미산정 (통계없음)						48	30	29	39	36.5
합계	16	4	2	0	7	7	53	48	75	42	25.4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재해연보: 자연재해, p.17

OECD 국가별 자연재난 발생위험 및 위험지수, 2022



출처: European Commission, INFORM RISK(<https://drmkc.jrc.ec.europa.eu/inform-index>, 2022.12.25. 인출)

주1 : 지수 범위는 0~10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한 상태임

주2 : INFORM은 인도적 위기와 재난 위험도를 국가별로 지수화한 것으로, UN·연구기관·시민사회 등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작성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으며, 종합위험지수는 1.9점으로 20번째로 높았다.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 관련 지표 13.2.2)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기준 6억 5622만 톤 CO<sub>2</sub>eq.이다. 이는 1990년 대비 124.7%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과 비교할 때는 6.4% 감소한 수준이고, 최고량을 기록했던 2018년의 7억 2698만 톤 CO<sub>2</sub>eq. 대비 9.7% 감소한 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과 2020년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사례다. 배출량 감소의 요인은 복잡적이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직·간접적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 5억 6992만 톤 CO<sub>2</sub>eq.(86.8%)을 배출하였다. 이어서 산업 공정 분야 4853만 톤 CO<sub>2</sub>eq.(7.4%), 농업 분야 2105만 톤 CO<sub>2</sub>eq.(3.2%), 폐기물 분야 1673만 톤 CO<sub>2</sub>eq.(2.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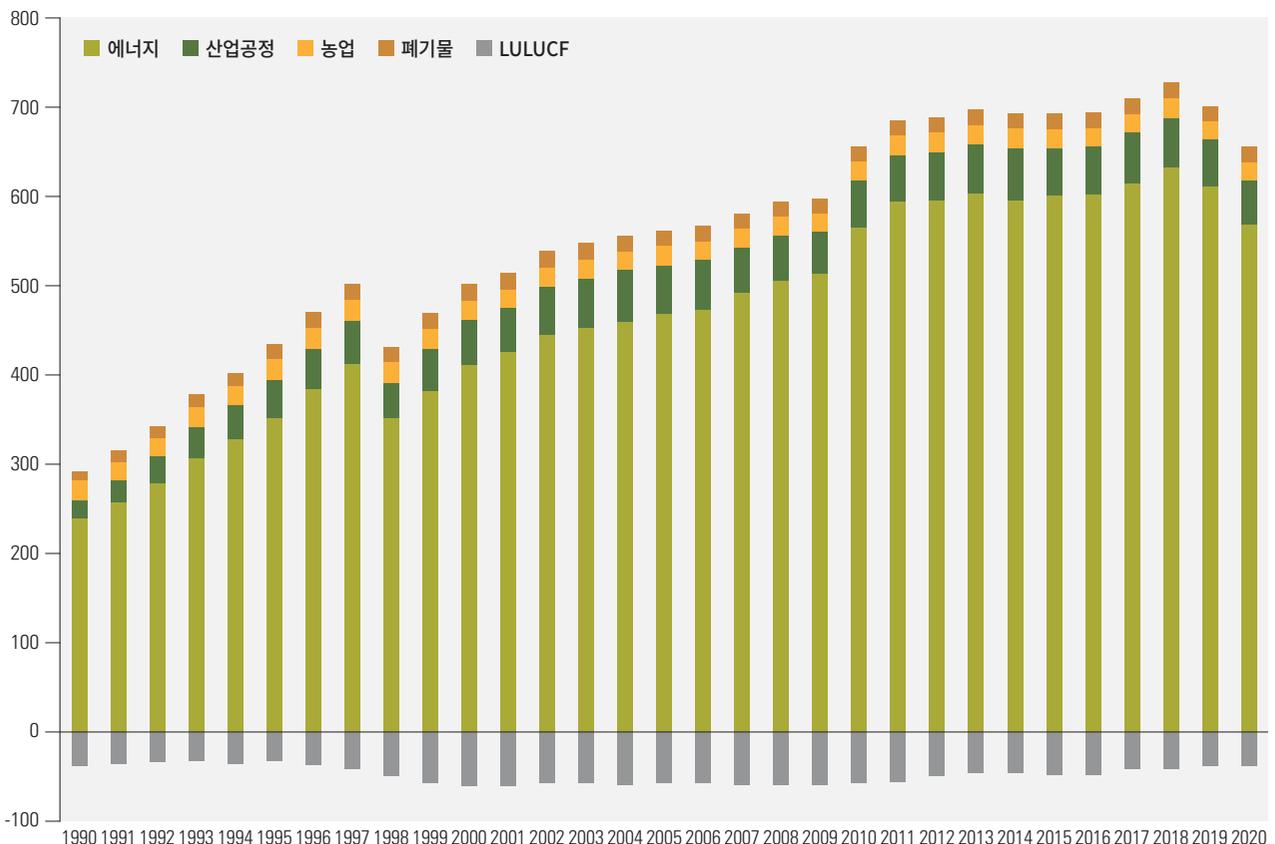
으로 배출량이 많다. 전년과 비교할 때, 에너지와 산업 공정 분야에서 각각 6.8%, 7.0% 감소했고, 농업과 폐기물 분야에서 0.4%,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발전·열생산으로 3068만 톤 CO<sub>2</sub>eq.(12.3%)이 줄고, 도로수송(421만 톤 CO<sub>2</sub>eq., 4.3%), 기타 제조업(비금속 등)(338만 톤 CO<sub>2</sub>eq., 8.6%) 등의 부문에서도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반면 에너지 분야 화학산업에서 전년 대비 53만 톤 CO<sub>2</sub>eq.(1.1%), 농림어업 에너지 소비에서 44만 톤 CO<sub>2</sub>eq.(11.1%) 등 일부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했다.

GDP 대비 배출량은 1990년 10억 원당 643톤 CO<sub>2</sub>eq.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10억 원당 357톤 CO<sub>2</sub>eq.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1인당 배출량은 1990년 6.8톤 CO<sub>2</sub>eq.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1인당 14.1톤 CO<sub>2</sub>eq.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에는 12.7톤 CO<sub>2</sub>eq.이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20

(단위: 백만톤 CO<sub>2</sub>eq.)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https://www.gir.go.kr/home/index.do?menuId=36>, 2022.12.25. 인출)

주1 : LULUCF는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말함

주2 : 총배출량은 LULUCF 분야의 흡수량은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분야의 배출량을 합산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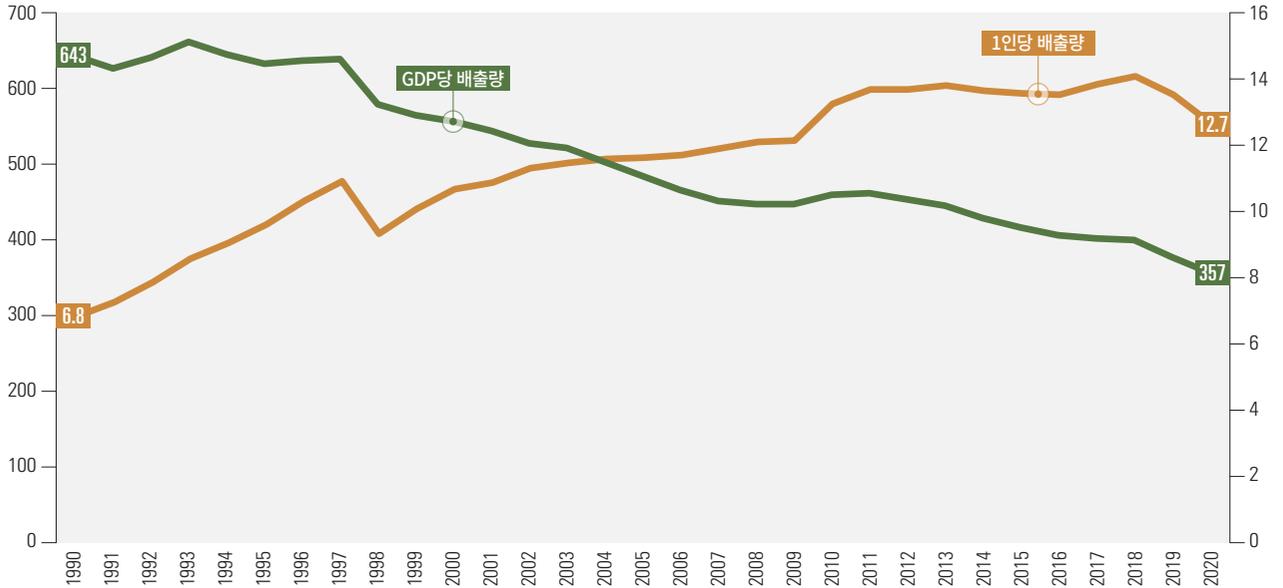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비교하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6571.7백만톤CO<sub>2</sub>eq.), 일본(1210.2백만톤CO<sub>2</sub>eq.), 독일(799.7백만톤CO<sub>2</sub>eq.), 캐나다(738.3백만톤CO<sub>2</sub>eq.), 멕시코(736.6백만톤CO<sub>2</sub>eq.)에 이어 한국이 6위의 배출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21.5톤CO<sub>2</sub>eq.), 미국(20.0톤CO<sub>2</sub>eq.),

캐나다(19.6톤CO<sub>2</sub>eq.), 룩셈부르크(17.3톤CO<sub>2</sub>eq.), 뉴질랜드(16.4톤CO<sub>2</sub>eq.)에 이은 6위로 나타났으며, GDP 천 달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0.45톤CO<sub>2</sub>eq.), 캐나다(0.43톤CO<sub>2</sub>eq.), 뉴질랜드(0.41톤CO<sub>2</sub>eq.)에 이어 미국(0.33톤CO<sub>2</sub>eq.)과 공동 4위로 나타났다.

GDP당 및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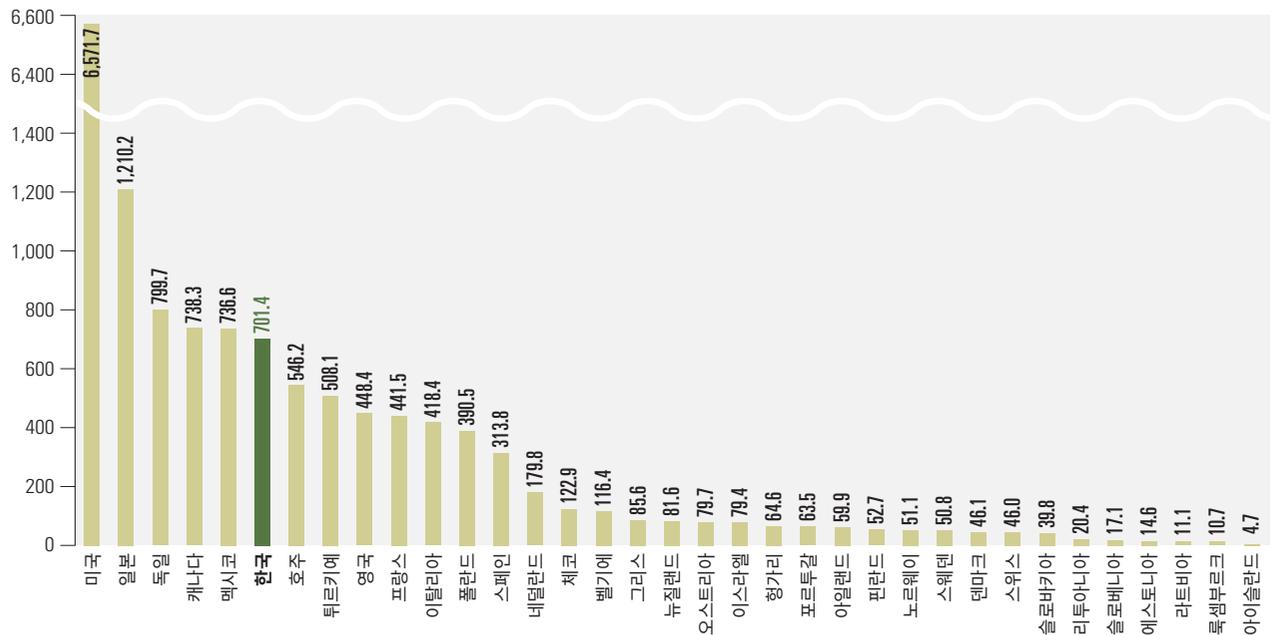
(단위: 톤 CO<sub>2</sub>eq./10억원, 톤CO<sub>2</sub>eq./인)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https://www.gir.go.kr/home/index.do?menuId=36>, 2022.12.25. 인출)

OECD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9

(단위: 백만톤CO<sub>2</sub>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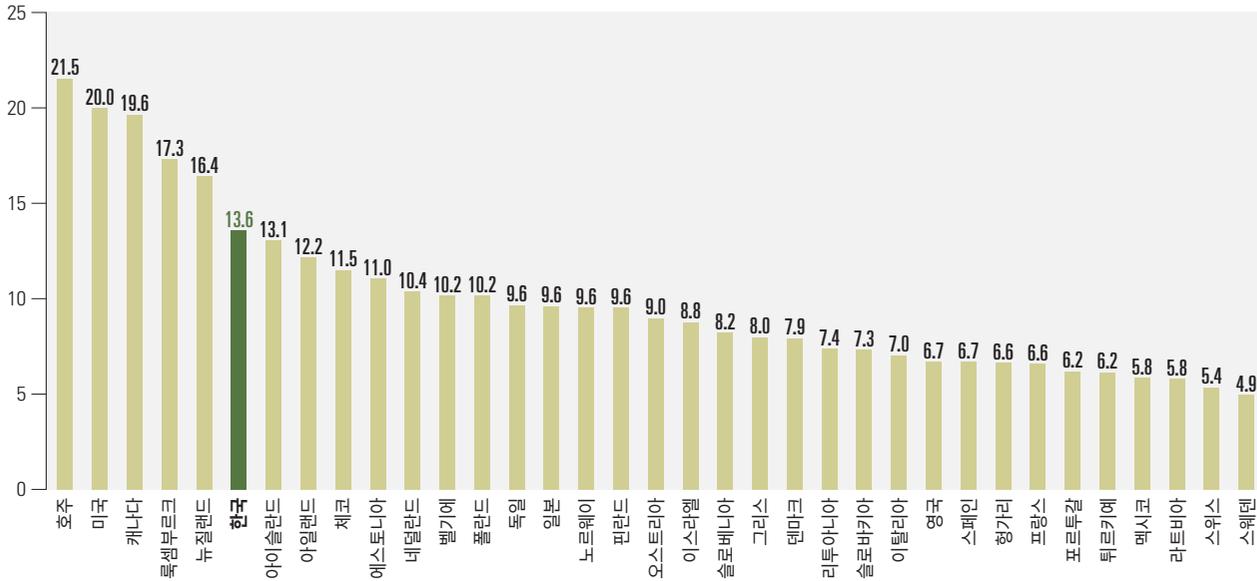


출처: OECD.Stat, Environmen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IR\\_GH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IR_GHG), 2023.01.20. 인출)

주 : OECD 38개국 중 수치가 제공된 35개국 기준임(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제외)

OECD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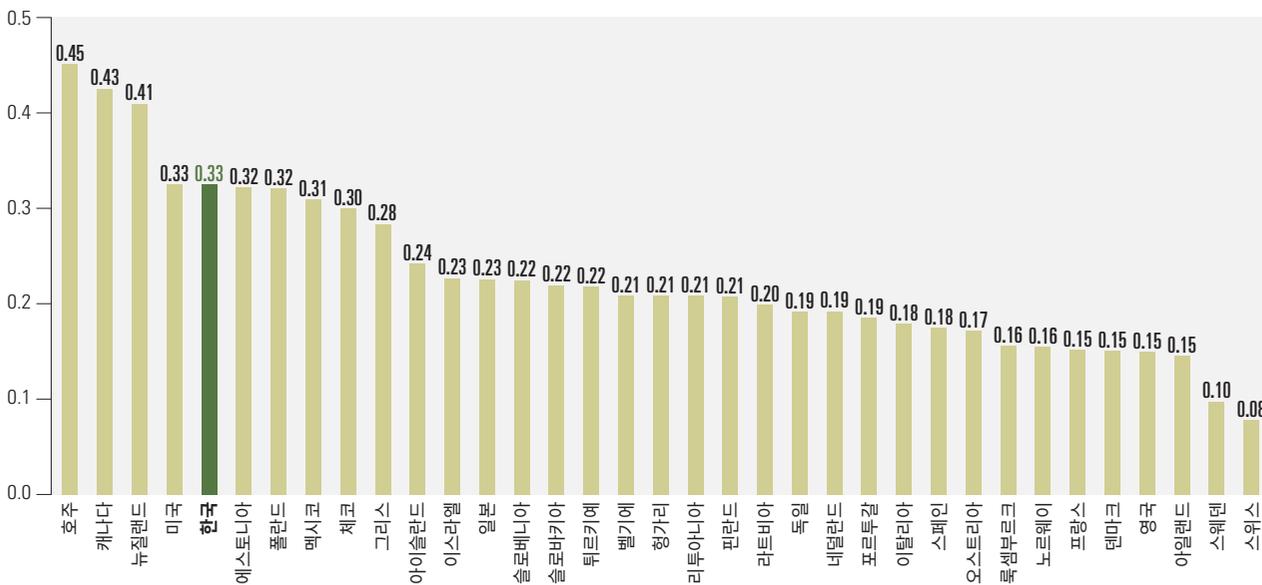
(단위: 톤CO<sub>2</sub>eq./인)



출처: OECD.Stat, Environmen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IR\\_GH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IR_GHG), 2023.01.20. 인출)  
 주 : OECD 38개국 중 수치가 제공된 35개국 기준임(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제외)

OECD 국가별 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9

(단위: 톤CO<sub>2</sub>eq./천 달러(2015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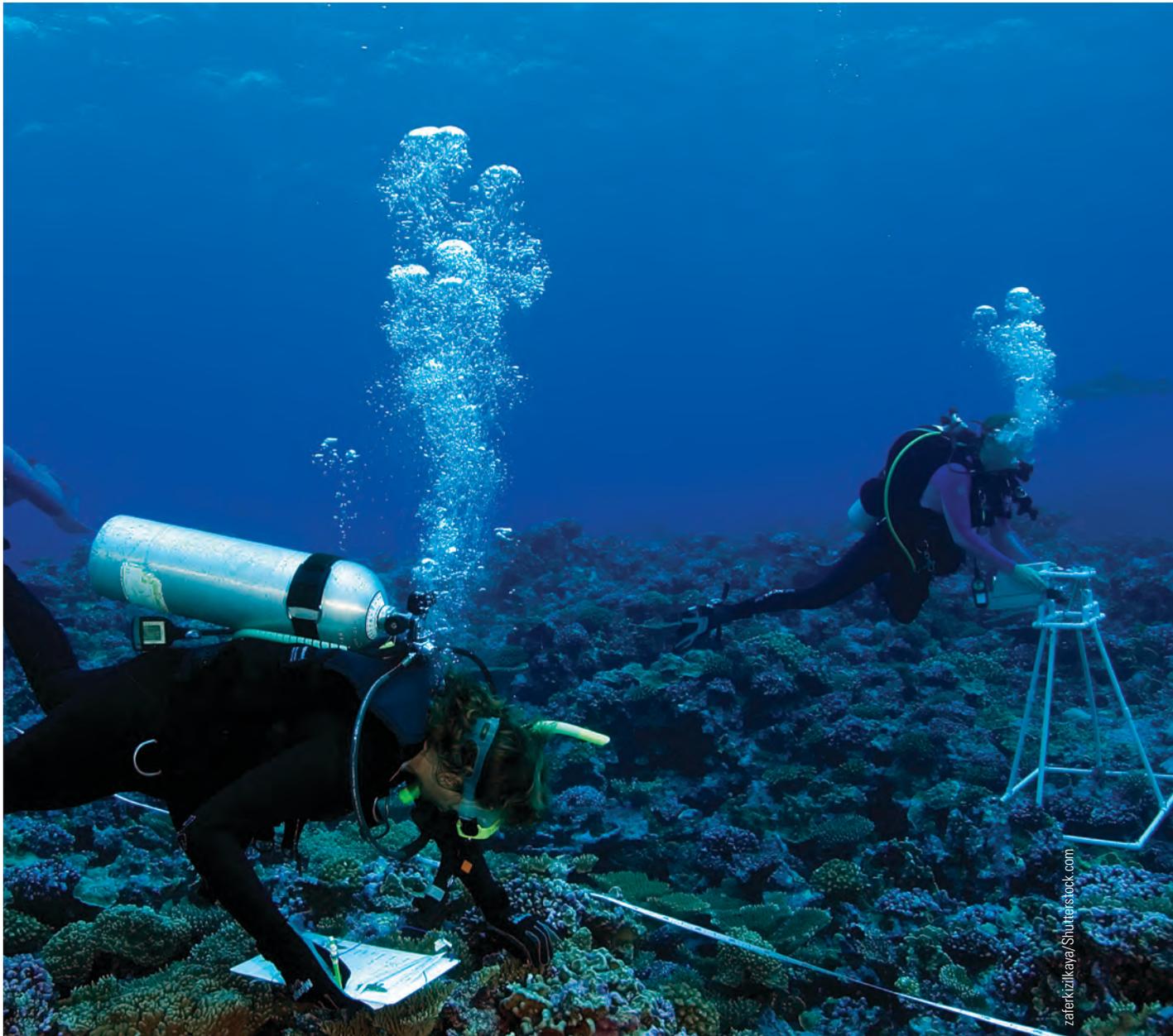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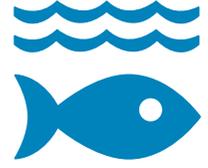
출처: OECD.Stat, Environmen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IR\\_GH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IR_GHG), 2023.01.20. 인출)  
 주 : OECD 38개국 중 수치가 제공된 35개국 기준임(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제외)

실질 요약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IPCC의 목표는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에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인벤토리)** :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원(sources)에 의한 배출량(emissions) 및 흡수원(sinks)에 의한 흡수량(removals)의 목록
- **CO<sub>2</sub>eq.** : IPCC에서 1995년 발표한 제2차 평가보고서의 지구온난화지수에 따라, 주요 직접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CO<sub>2</sub>)로 환산한 단위
- **총배출량**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 분야의 흡수량은 고려하지 않고 그 외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 배출량을 모두 합산한 값



# 14 LIFE BELOW WATER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건강한 바다란 생산적이며 연안·해양생태계가 회복탄력성을 갖는 상태를 뜻한다. SDG 14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바다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에서는 해양쓰레기, 연안 부영양화, 해양 산성화, 해양보호구역, 어업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14번 목표는 2번, 3번, 6번, 8번, 12번, 15번 등 SDG의 다른 목표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물질 소비는 지난 20년간 37% 증가했으며, 한 해에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약 4억 톤에 이른다. 이 중 매년 8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는 바다에 사는 600종 이상의 생물에겐 소화와 얽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205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1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자원 이용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획활동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 해양쓰레기 수거량 7년 만에 감소 (🔗 관련 지표 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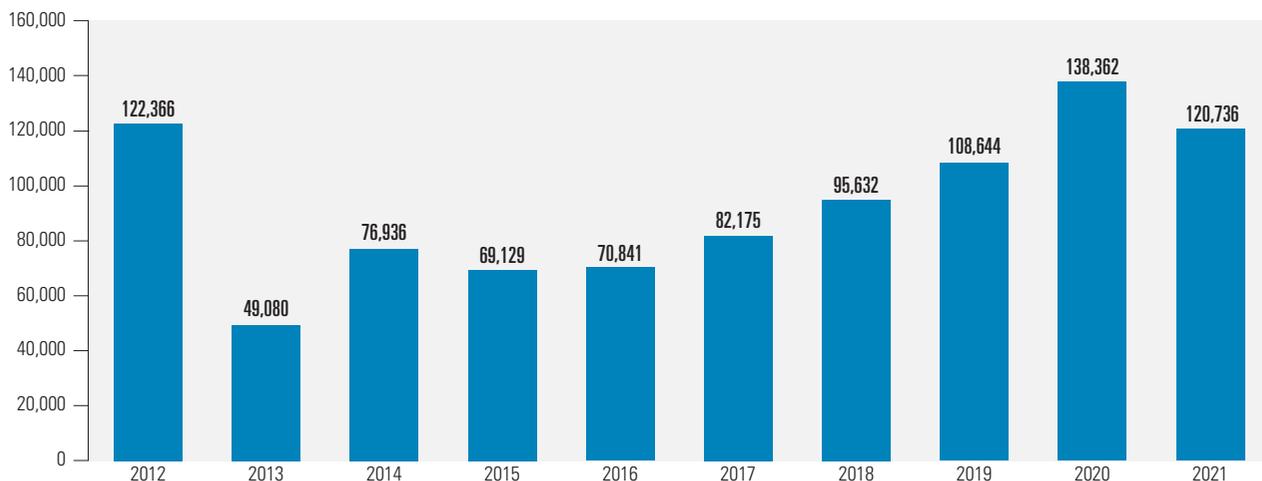
SDG 14번 목표의 첫 번째 세부목표는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는 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다. 부영양화란 해수에 영양염(nutrients)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뜻한다. 부영양화로 인해 식물플랑크톤(phytoplankton) 또는 유해 조류(algae)가 급속도로 번식하는 녹조나 적조(harmful algal blooms)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UN SDG에서는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클로로필-a 농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해양환경 측

정망을 통해 전국 연안 425개 지점에 대해 이 항목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SDG 지표로 활용할 대표 지점이 결정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클로로필-a 농도 대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을 통해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양이다.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해 오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7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1년 총수거량은 12만 736톤으로 2020년에 비해 12.7%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남(3만 5922톤), 제주(2만

해양쓰레기 수거량,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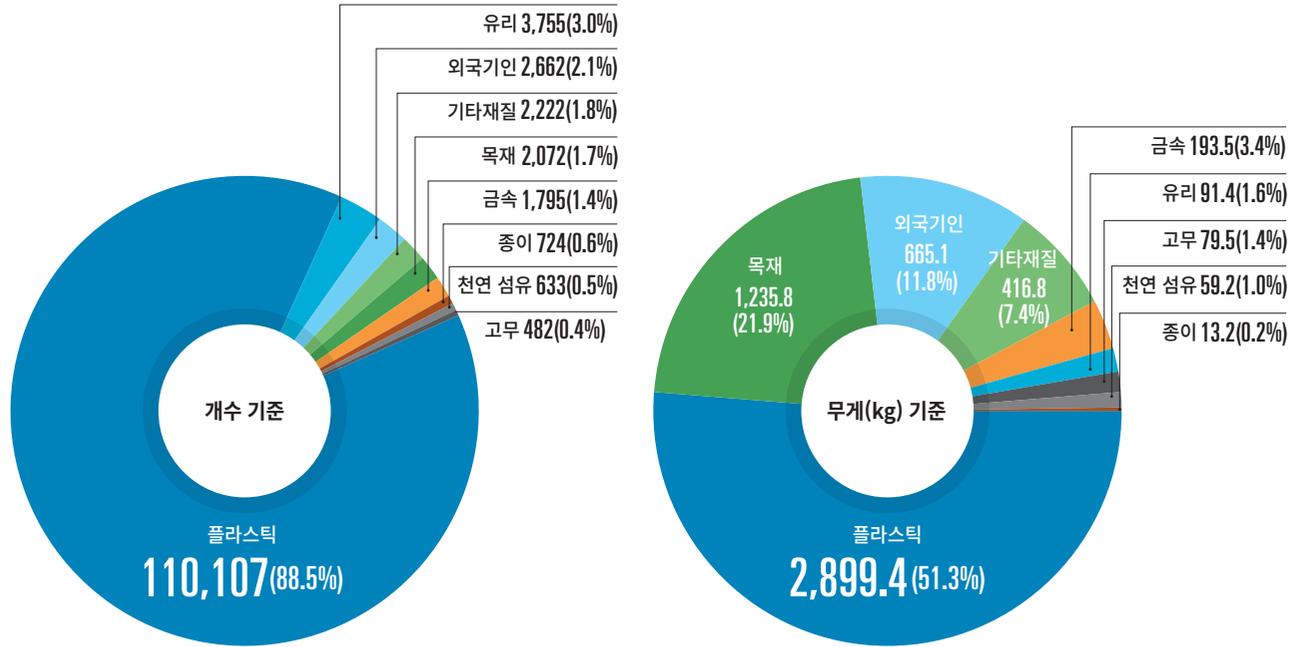
(단위: 톤)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meis.go.kr/mli/business/collectStat.do>, 2022.09.06. 인출)



## 해안쓰레기 유형별 구성비(개수 및 무게 기준), 2021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meis.go.kr/mli/monitoringInfo/stat.do>, 2022.09.06. 인출)

2083톤), 충남(1만 3508톤)의 순으로 많다.

UN SDG에서는 또 하나의 지표로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용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연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율을 지표로 사용한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에서는 전국 연안 60곳(2018~2020년은 40곳)을 선정하여 2개월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쓰레기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플라스틱이 전체 개수의 88.5%, 총무게의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목재, 금속, 유리 등이 조사되었다.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기 쉽고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에도 해를 입힐 수 있다.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활동은 감소 추세

#### (☉ 관련 지표 14.6.1)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바다에서 어획활동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영위함으로써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를 크게 저해하는 활동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다. SDG 14.6.1 지표에서 보듯이 모든 국가는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수단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2001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에서 IUU 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2005년에 IUU 어업 근절을 위한 IUU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세계의 지역수산기구(RFMO)들은 공해에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각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조치를 수립하여 회원국들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원양어선의 IUU 어업은 2008년 남극해역에서 단위노력당 어획량 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한 이래 2011년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및 2013년 기니 수역에서 다수의 해상 불법전재가 발생하는 등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12건의 폐업 미신고 사례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IUU 사례가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연 3건 이내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원양어업이 국제 기준에 맞게 어획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 수단 이행 정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한국 원양어선 불법(IUU)어업 발생 건수, 2008~2020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 건수	1	1	2	17	1	27	3	15	없음	2	없음	3	1

출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 실태조사(2016~2020), p.142

##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확대해 가는 중

### (☉ 관련 지표 14.4.1)

어업자원을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유재인 어업자원을 관리 없이 이용한다면 공유재의 비극이 일어나 어업자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어업자원 관리는 어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투입요소를 규제하는 투입량 규제, 잡는 어획량을 규제하는 산출량 규제, 그리고 어획 시기와 어류 크기 등을 규제하는 기술규제로 구분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투입량 규제는 어선 척수를 제한하는 것이고, 기술적 규제로는 금어기나 어획금지체장을 두어 조업 시기와 잡을 수 있는 어류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산출량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허용가능한 어획량을 설정함으로써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TAC는 어류의 성장 단계, 크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를 고려해 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다.

1999년에 도입된 TAC 제도는 처음에 4개 어종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22년에는 15개 어종(시범사업 대상 어종 제외)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에는 멸치를 TAC 시범사업 대상어종으로 선정했다. TAC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어종의 비율이 높을수록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연근해어업에서 잡는 총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어획량의 비율은 2020년 29%로 집계된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21).

## 해양수산 연구개발투자는 큰 변동 없음

### (☉ 관련 지표 14.a.1)

해양과학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바다를 건강하게 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양지식과 해양기술을 발전시켜 해양에 의존하는 현대 경제를 뒷받침한다. 현재의 해양과학 지식은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전 세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서 비롯되었다. SDG

##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1999~2022

(단위: 개)

연도	어종 수	대상 어종	비고
1999	4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2001	7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3개 어종 추가
2002	8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1개 어종 추가
2003	9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1개 어종 추가
2007	10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1개 어종 추가
2009	11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2개 어종 추가, 정어리 제외
2019	14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갈치*, 참조기*	3개 어종 추가
2020	15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1개 어종 추가
2022	16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삼치, 갈치, 참조기, 멸치*	1개 어종 추가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TAC소개([https://www.fira.or.kr/fira/fira\\_030601.jsp](https://www.fira.or.kr/fira/fira_030601.jsp), 2022.10.01. 인출)

주 : \*는 시범사업 대상 어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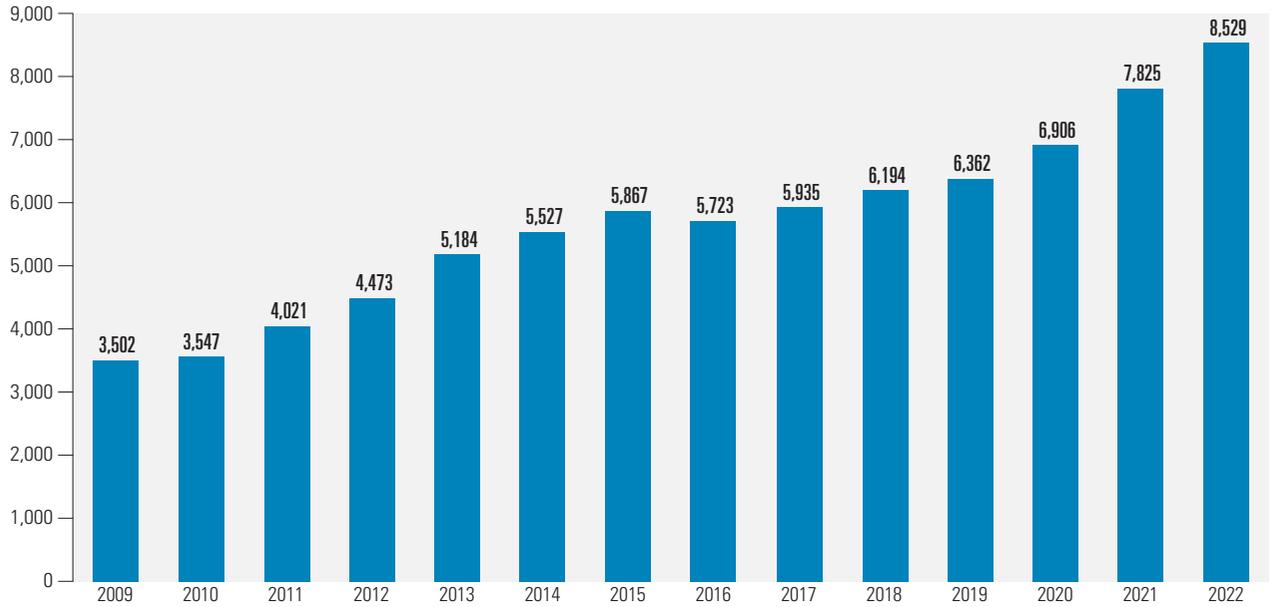


14.a.1 지표는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분야에 할당된 예산의 비율로 산출한다. 한국의 해양수산 연구개발비는 2009년 3502억 원에서 2022년 852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비율은 2009년 0.92%에서 2020년 0.74%로 최근 10여 년간 0.18%p 감소했는데, 이는 해양수산 연

구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년 성장하는 민간 연구개발에 해양수산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정부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민간을 제외한 정부 연구개발 총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예산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 없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 200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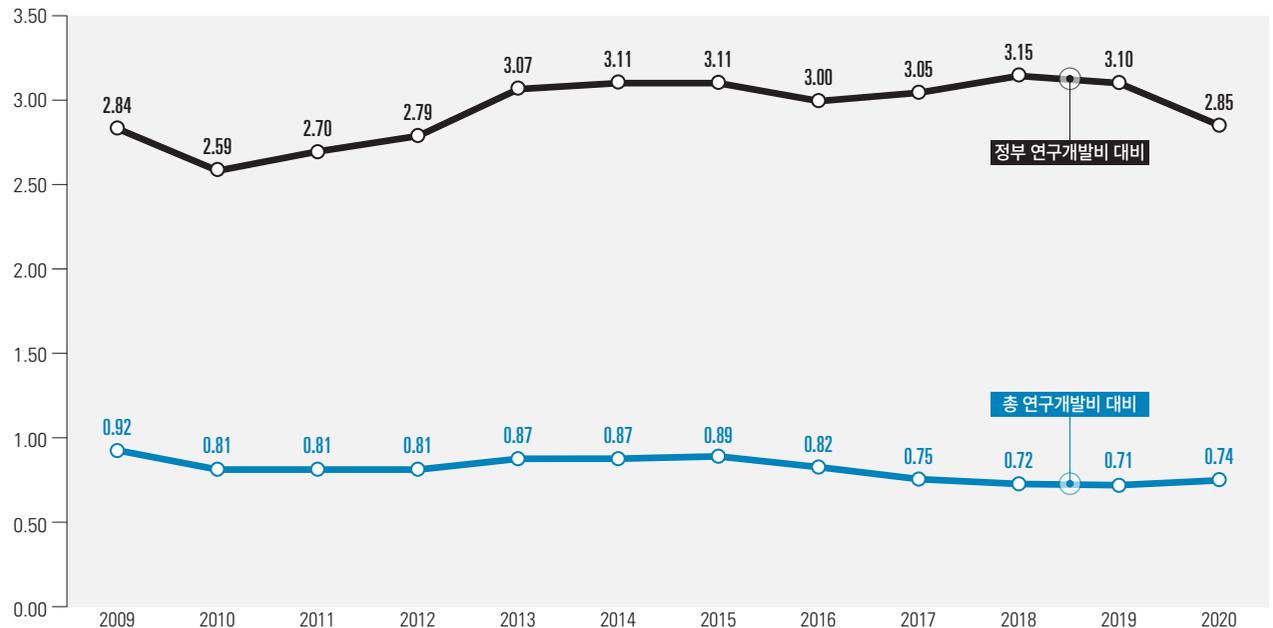
(단위: 억 원)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 및 시행계획(2019, 2022)

연구개발비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비율, 2009~2020

(단위: %)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 및 시행계획(2019,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enara>, 2022.09.06. 인출)

2.6~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연안통합관리에 이은 해양공간계획으로

### 영해에서 EEZ로 관리 범위 확장 ( 관련 지표 14.2.1)

한국은 1999년 연안관리법을 제정하고 2000년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연안의 해역과 육역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이 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인 데 반해 2019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공간계획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장했다.

해양공간계획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이다. 2019년에

수립된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에서는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시도별 해양공간관리계획도 순차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해양공간 통합관리란 사회·경제 수요를 고려해 해양공간의 특성을 평가하고 용도와 관리 방향을 사전에 제시하고 공간의 이용·개발·보존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 해양용도구역은 총 9개로 나뉜다. 여기에는 ① 어업활동보호구역, ②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③ 에너지개발구역, ④ 해양관광구역, ⑤ 환경·생태계관리구역, ⑥ 연구·교육보존구역, ⑦ 군사활동구역, ⑧ 항만·항행구역, ⑨ 안전관리구역이 포함된다.

### 연안통합관리와 해양공간계획 관련 법 및 계획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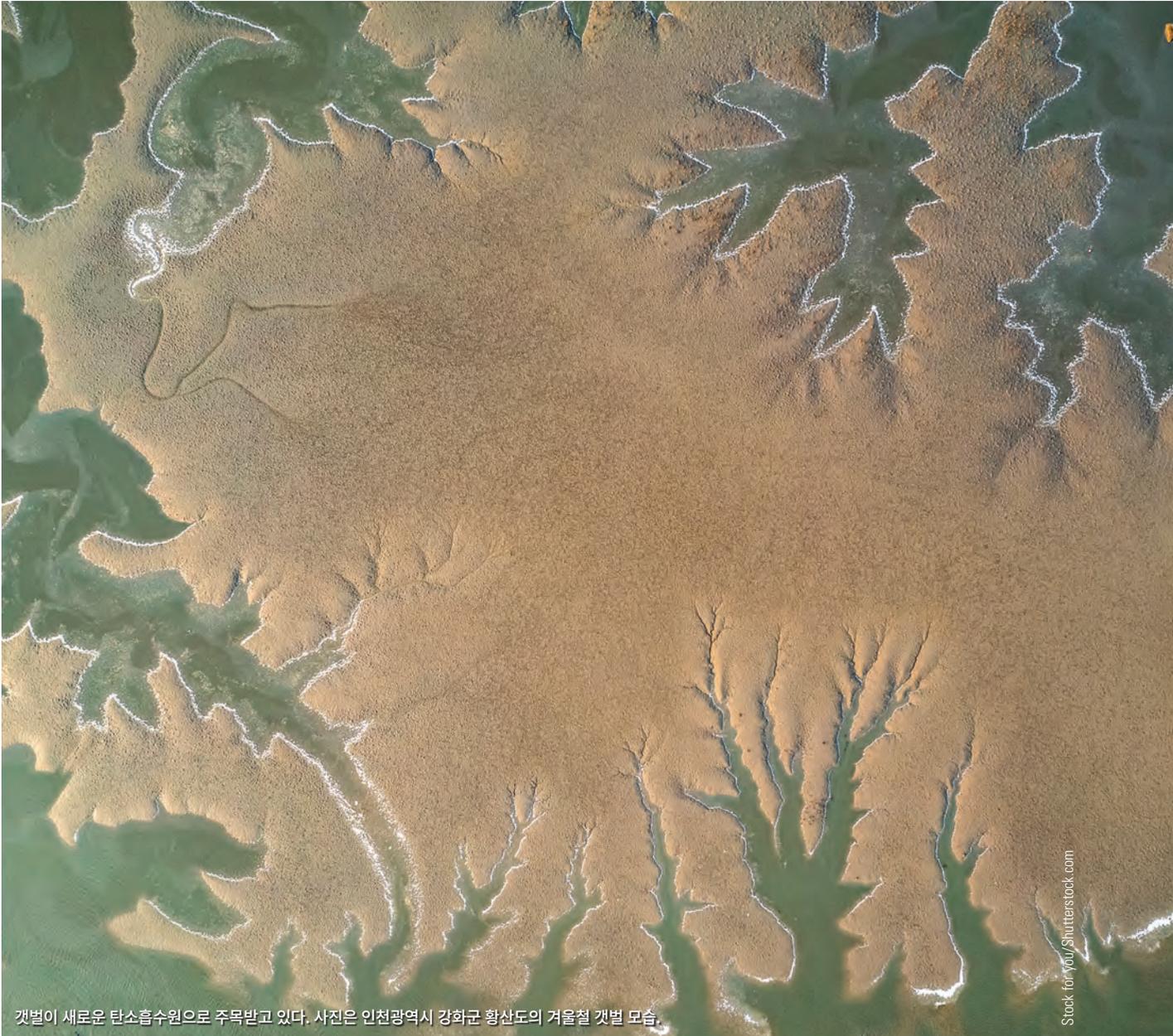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해양  
실  
업

- **부영양화(eutrophication)** : 인간활동에 의해 연안 환경에 잉여 영양염이 유입되는 것으로, 식물이나 조류, 식물플랑크톤 등의 폭발적인 증식을 유발함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 (1)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불법어업, (2)수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국내 법규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미보고 또는 오보고(거짓보고)를 행하는 비보고 어업, (3)지역수산기구(RFMO)의 비가입국(실질적 비가입국 포함)의 선박, 무국적 선박 등이 해당 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전관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행하는 비규제 어업을 통칭함
- **지역수산기구(RFMO)** : 관할 수역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다국적 수산관리기구임
- **해상전재(transshipment)** : 해상에서 배에서 잡은 어획물을 다른 배로 옮겨 실는 것
- **배타적 경제수역(EEZ)** :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해기선(영해관할권 확정)의 기본선)으로 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함(협약 제55조, 제57조)



# 15 LIFE ON LAND



갯벌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황산도의 겨울철 갯벌 모습.

Stack for you/Shutterstock.com

#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SDG 15번 목표는 ‘육상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통해 육상 생태계, 생물종, 유전자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2010년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20개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s)를 채택하고 추진했으며, 2022년 채택된 ‘2021-2030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0년 이후 새로운 10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서는 생태계 보전·복원, 보호지역의 확대, 멸종위기종 보호·복원,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통해 육상 생태계의 보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강조하였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으로 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EP)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출간한 「제5차 지구 생물다양성 전망(GBO-5)」에서는 현 추세상 생물다양성 및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이 위태로울 것으로 전망했다(GBO-5, 2020). 또한,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공동 워크숍에서 육상의 77%가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변형되었고 이는 야생포유류 83%(바이오매스 기준)의 손실과 더 많은 멸종위기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들은 모두 이러한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유종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전·복원 증대, 보호지역의 확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과 국가적색목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은 증가하고 있지만,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산림면적 보전, 멸종위기종의 보전·복원,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의 증가세 유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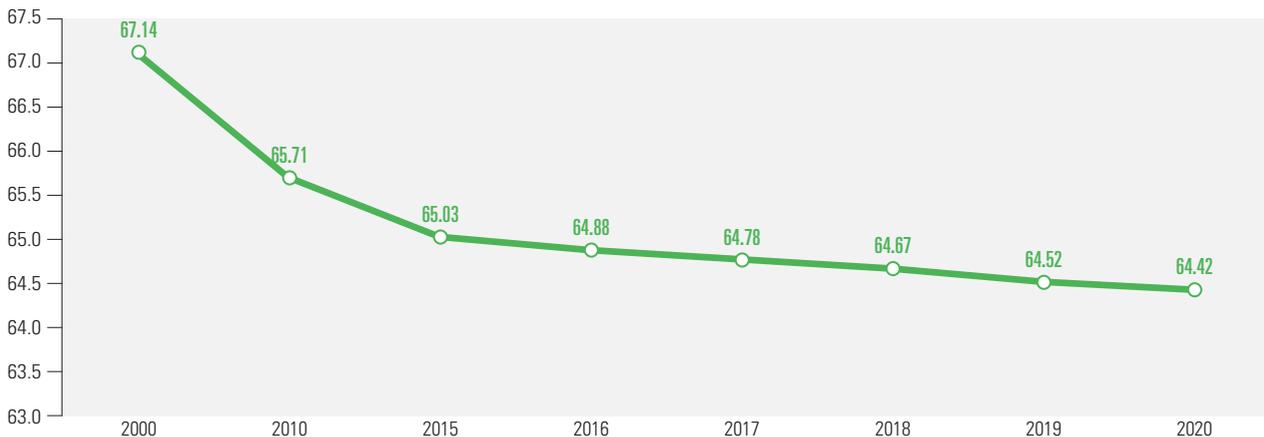
## 산림면적의 꾸준한 감소 (☉ 관련 지표 15.1.1)

산림면적의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유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산림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파라과이(2000년

대비 2020년 산림면적 비율 17.34%p 감소)다. 국내 산림면적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2000년 대비 2.72%p(연평균 0.14%p) 낮아졌다. OECD 38개국 중 2000년과 2020년 사이 산림면적 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다. 콜롬비아(-3.23%p), 멕시코(-1.39%p), 이스라엘(-0.60%p), 스웨

총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2000~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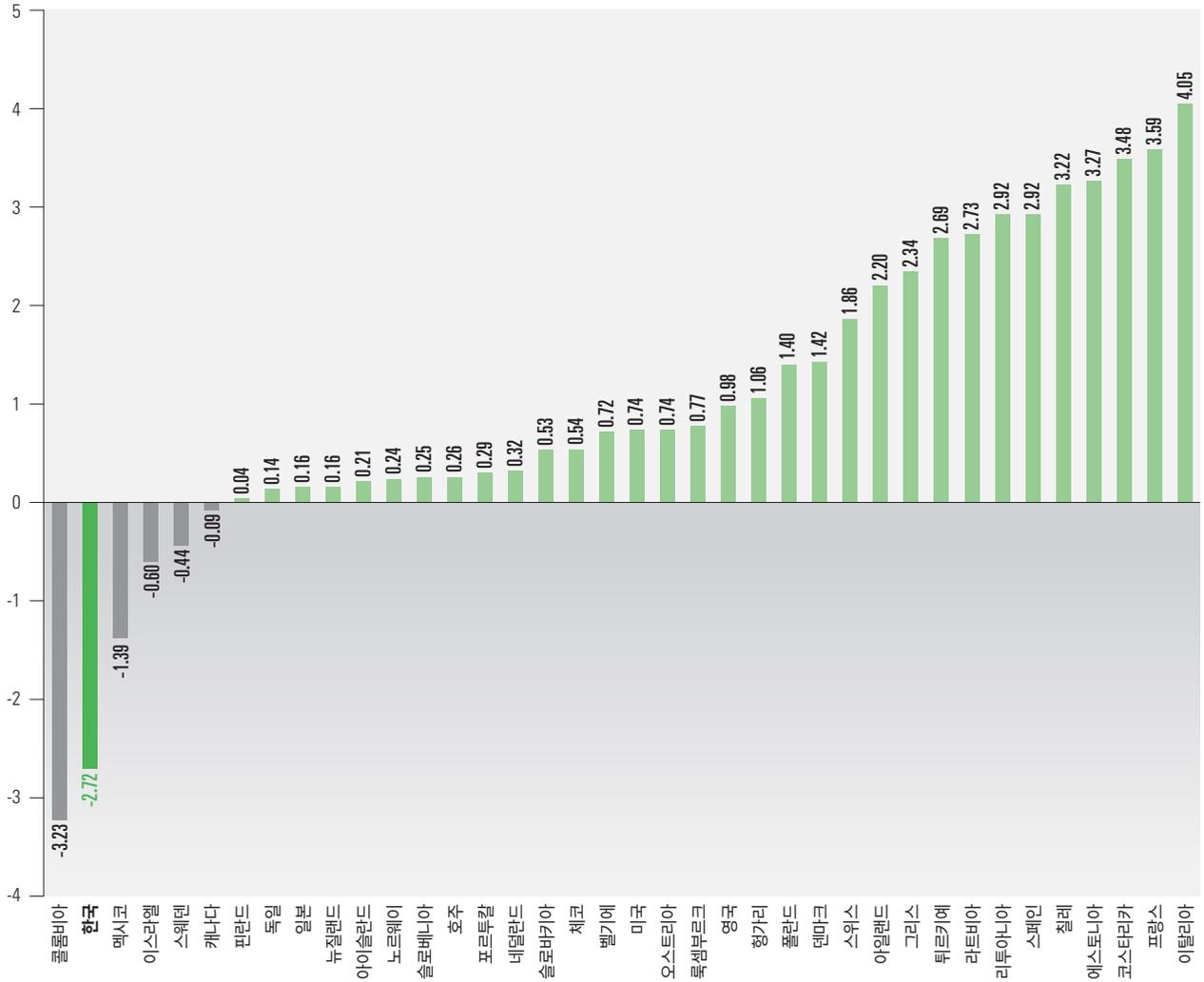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09.11. 인출)



# OECD 국가별 2000~2020년간 총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변화

(단위: %p)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09.11. 인출)

덴(-0.44%p), 캐나다(-0.09%p)가 산림면적 감소 국가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20년) 국내 산림면적 비율은 0.61%p(연평균 0.12%p) 감소했다. OECD 38개국 중 같은 기간 동안 산림면적 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11개국에 이른다. 여기에는 이스라엘(-1.15%p), 콜롬비아(-0.89%p), 슬로베니아(-0.49%p), 멕시코(-0.33%p), 헝가리(-0.08%p), 독일(-0.05%p), 미국(-0.03%p), 일본(-0.02%p), 캐나다(-0.02%p), 핀란드(-0.01%p)가 포함된다.

국내에서 산림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9120ha의 산림이 주택용지, 공장용지, 도로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20년 동안 산림의 전용이 연간

8000~9000ha 수준으로 일정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산림전용 압력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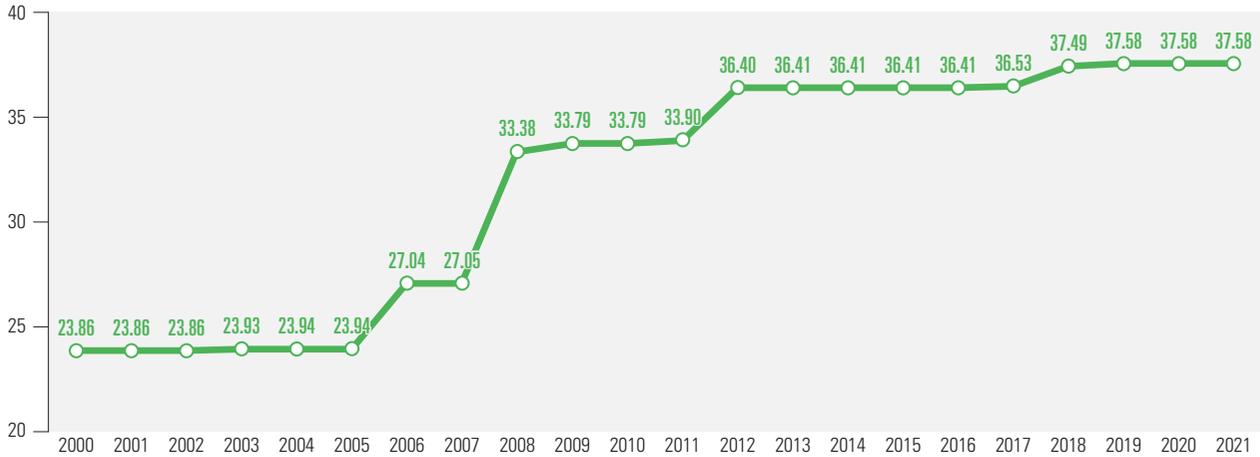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세 미약

( 관련 지표 15.1.2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에서는 보호지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새롭게 수립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을 각각 30%까지 늘리는 것을 주요 실천목표로 채택했다. 한국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을 포함한 14개 법률에 따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 육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 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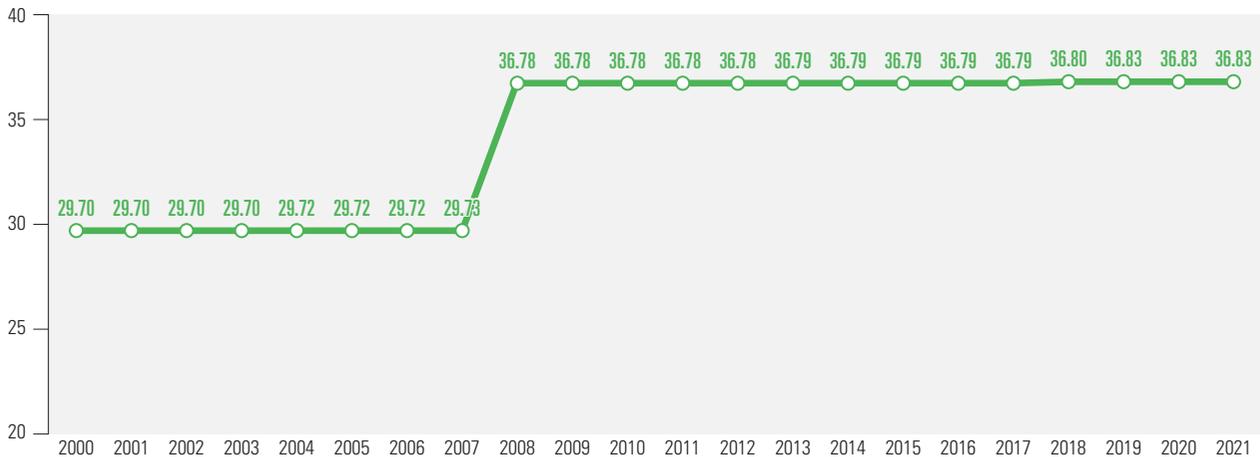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https://kostat.go.kr/sdg>, 2022.09.11. 인출)

### 담수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 2000~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https://kostat.go.kr/sdg>, 2022.09.11. 인출)

주 : 생태계 총면적 대비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비율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육지 및 담수 생물 다양성 보호지역은 2000년 이후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육지 및 담수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은 생태계 총면적 대비 각각 37.58%와 36.83%로 기록되었다. 육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은 2000년 대비 13.72%p, 담수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은 7.13%p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육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은 평균적으로 25.47%p, 담수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은 23.75%p 증가했다. 또한, 2021년 OECD 국가들의 육지와 담수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은 생태계 총면적 대비 각각 64.0%와 65.52%에 달한다. 한국의 보호지역 비율과 증가율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호지역 확대가 어려운 데에는 보호지역과 보호

지역 주변, 그리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사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있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통한 보상체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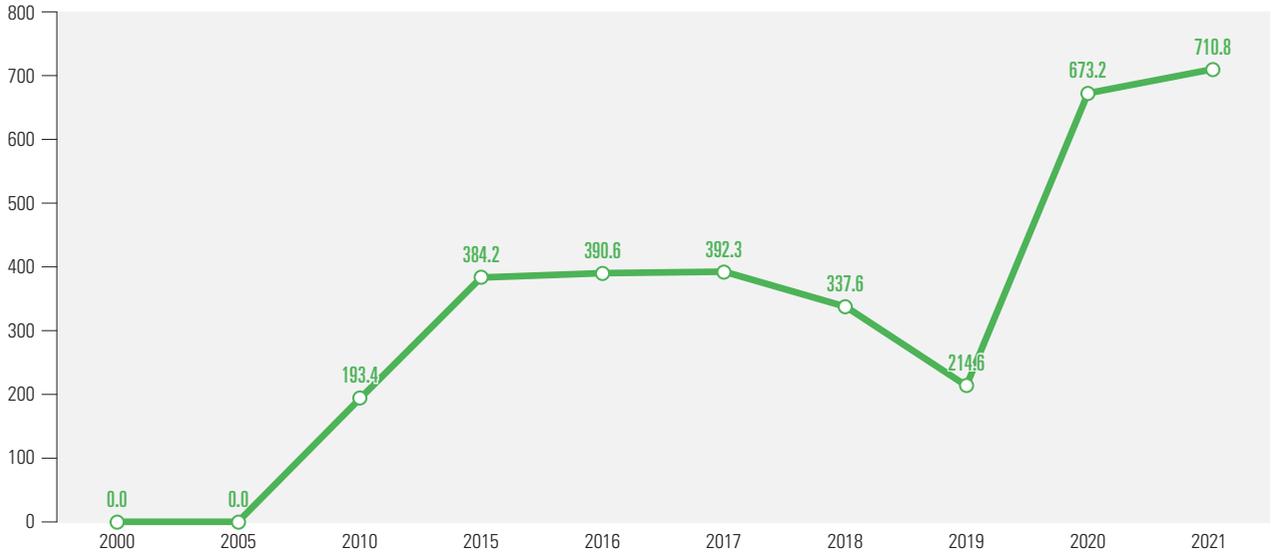
(📌 관련 지표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면적 연간 순변화율, 산림 내 지상 바이오매스 총량, 보호림 비율,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비율,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면적 등 5개 지표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산림면적



### 산림관리 인증 면적, 2000~2021

(단위: 1,000ha)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09.11. 인출)

주 : 독립적으로 증명된 산림관리 인증제도로 인증된 산림면적을 뜻하며, 현재 FSC와 PEFC(상호인정 포함)의 인증면적이 집계됨

연간 순변화율, 산림 내 지상 바이오매스 총량, 보호림 비율이 산림의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라면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인증면적은 현재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산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림관리 인증면적을 관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산림관리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된 산림면적은 2000년 대비 2021년에 71만 800ha 증가했으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 면적대비 높은 산림면적 비율(64.42%)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면적의 증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과학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이행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제도로는 북미지역 중심의 미국산림인증제도(FSC)와 유럽 중심의 유럽산림인증제도(PEFC)가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한국산림인증제도(KFCC)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KFCC는 2018년에 PEFC와 상호인정을 획득했다. 2016년 이전에는 주로 FSC 인증을 획득했던 국내 인증 취득 기관들은 2016년 이후 점차 KFCC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FSC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면서 2019년에는 KFCC 인증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자료 누락 등 비정상적인 인증면적 통계 자료가 생성되

었고, 2019년 이후 새로운 KFCC 인증 적용이 2020년 인증면적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가 적색목록지수 지속적 악화 추세

(📌 관련 지표 15.5.1)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야생생물의 현황과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수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22년 말에 새로 수립된 추진전략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보호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지표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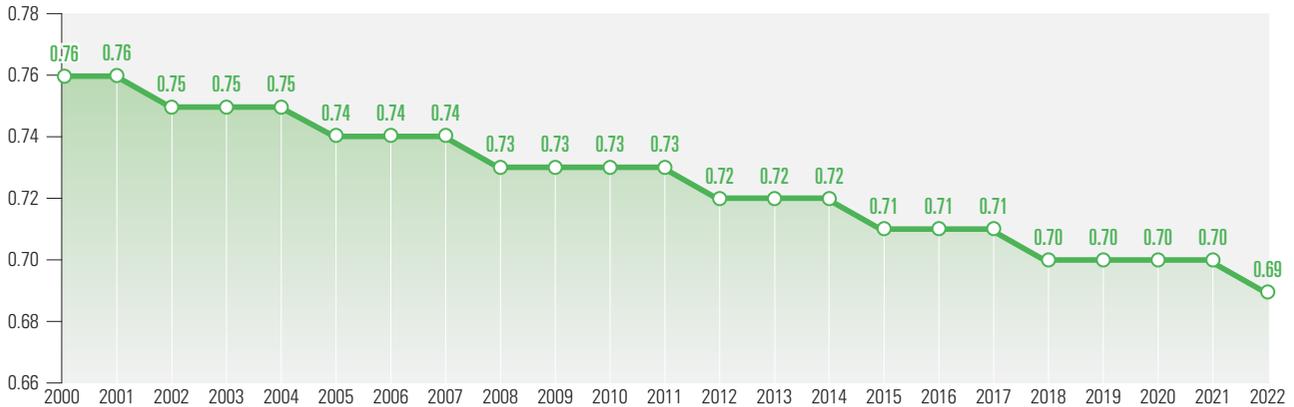
적색목록지수는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을 바탕으로 절멸(Extinct),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위급(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dangered), 취약(Vulnerable), 준위협(Near Threatened), 최소관심(Least Concern)의 7개 범주에서 생물종의 수가 변동된 추세를 계량화한 것이다. 지수는 0(모든 종이 절멸)과 1(모든 종이 관심대상)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적색목록지수는 유지되거나 감소한 가운데, 평균적으로는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2000년 0.76에서 2022년 0.69로 0.07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평균 감소폭인 0.02의 3.5배에 달한다. 2022년 적색목록지수를 비교해도 OECD 국가 평균은 0.88인 데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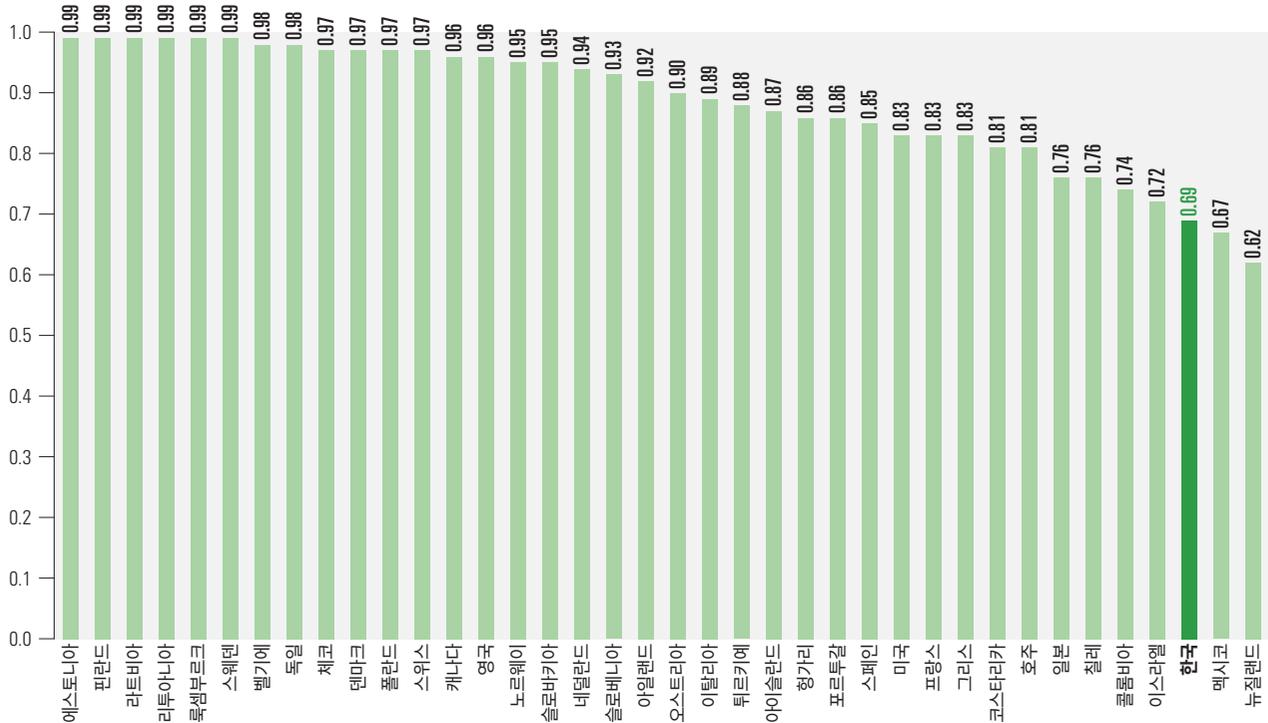
해 한국은 0.69에 그친다. OECD의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0.9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이 마련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적색목록지수, 2000~2022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09.11. 인출)  
 주 : 0-1 사이의 지수이며,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

### OECD 국가별 적색목록지수, 2022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09.11. 인출)  
 주 : 0-1 사이의 지수이며,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

### 실질 요약

-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20개 목표로, 2010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 : 기후변화, 식량, 물, 재난, 건강,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자연과 사회문제의 해법으로서 생태계를 보호,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 16 PEACE AND JUSTICE



2022년 3월, 러시아 폭력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우크라이나 민간 주택 단지.

Drop of Light/Shutterstock.com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평화, 정의와 효과적인 제도에 관한 SDG 16번 목표는 ‘폭력과 범죄의 퇴치, 공정성과 포용성 증진 그리고 공공정책과 민간경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지향한다.

16번 목표가 지향하는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살인, 강도, 폭행, 성폭력 등의 폭력범죄와 각종 조직범죄를 퇴치하고, 특히 아동 등 취약집단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 살인범죄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폭행, 성폭력 등의 폭력범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폭력범죄 추이를 주시하고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를 당하고도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여러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부문의 부패는 많은 경우 오랜 관행과 얽혀 있는 등 풀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최근 여러 지표를 통해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부패율이 아직도 높아 지자체 공무원의 부패행태 개선이 요구된다.

## 살인 발생의 감소세 지속 (☉ 관련 지표 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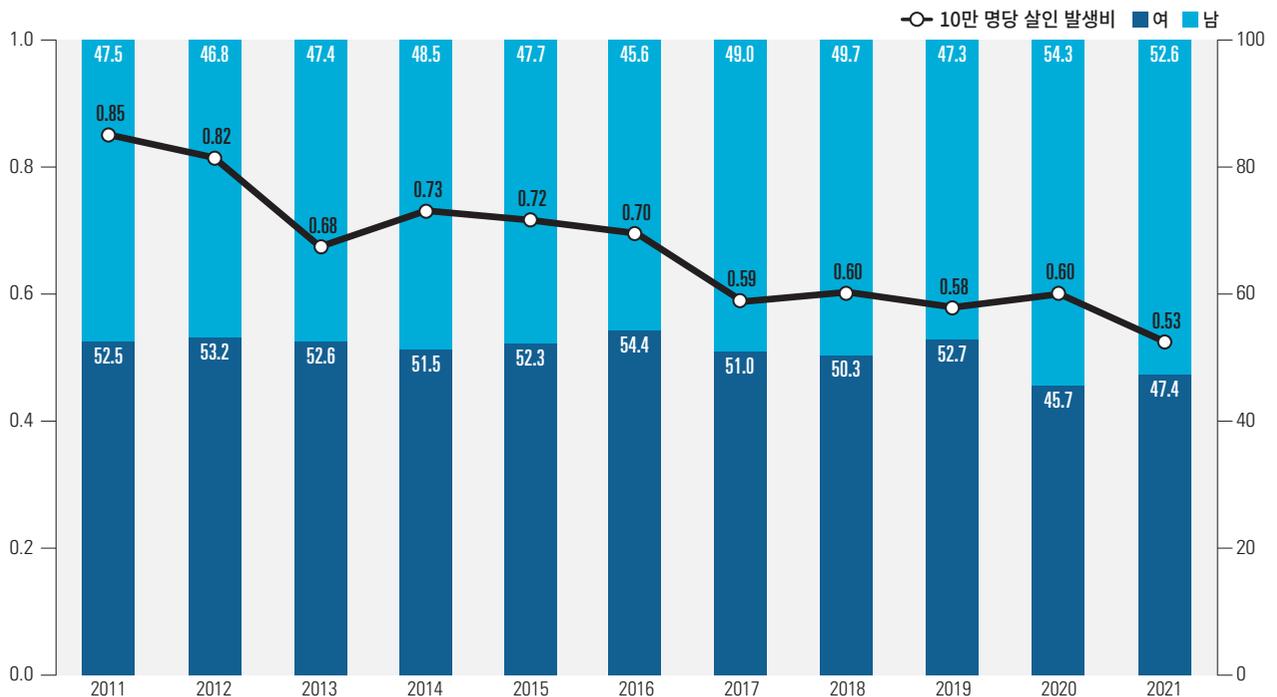
한국의 살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 수로 정의하는 살인범죄 발생비는 2021년 또다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2021년 한국의 살인범죄(기수)는 연간 270건, 인구 10만 명당 0.53명 수준으로, 이는 2011년 0.85명에서 10년 만에 38.3% 줄어든 수치다. 전통적으로 살인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으나 최근 2020년부터 그 비율이 역전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여성 대상 살인범죄는 전체의 47.4%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살인범죄의 남성 피해자는

조직범죄 등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는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성비가 변화함에 따라 범죄 예방의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보면, 살인 발생비의 OECD 38개국 평균은 10만 명당 3.09명 수준이다. 살인 발생이 월등히 높은 멕시코(28.37명), 콜롬비아(25.34명), 코스타리카(11.15명) 등 3개국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1.51명)과 비교해도 한국(0.53명)의 살인 발생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살인 발생비는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낮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의 살인 발생이 낮은 편인데 10만 명당 2.3명 수준이다.

살인범죄 발생비 및 피해자 성비, 2011~2020

(단위: 10만 명당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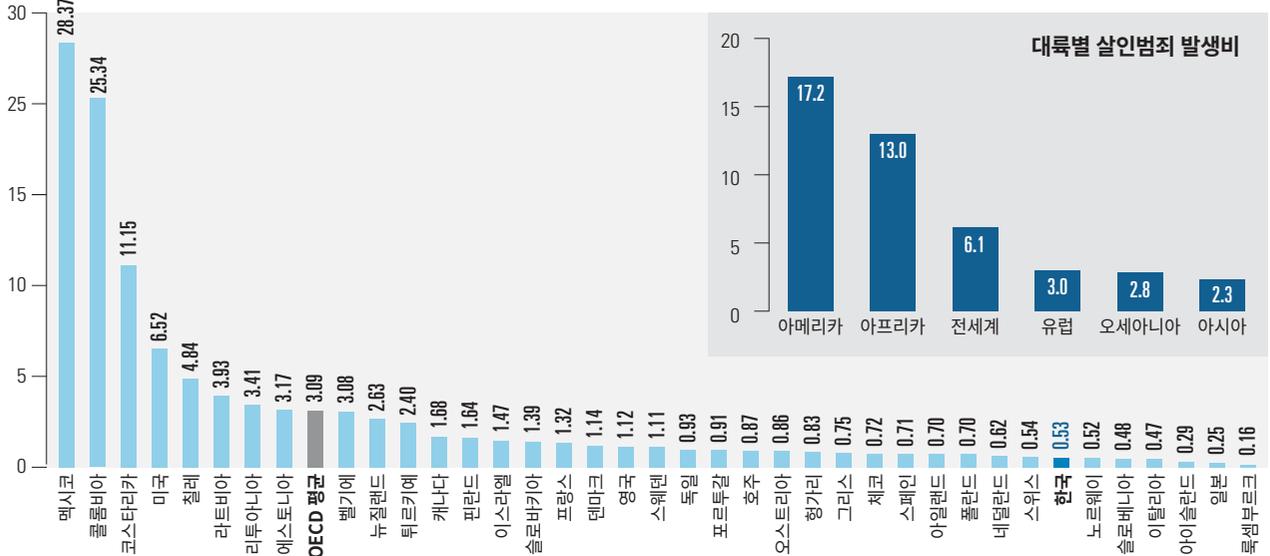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https://kosis.kr, 2022.09.02. 인출); 경찰청 2021 범죄통계

주 :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기수) 피해자수로 산정하며, 각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적용함. 피해자 성비에서 성별 불상 사건은 제외함



## OECD 국가별 살인범죄 발생비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2.09.12. 인출); 경찰청 2021 범죄통계

주: 벨기에(2002년), 캐나다(2016년), 콜롬비아 및 영국(2018년), 한국(2021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19~2020년 기준 수치임. 한국은 경찰청 「2021 범죄통계」 및 주민등록 연안인구(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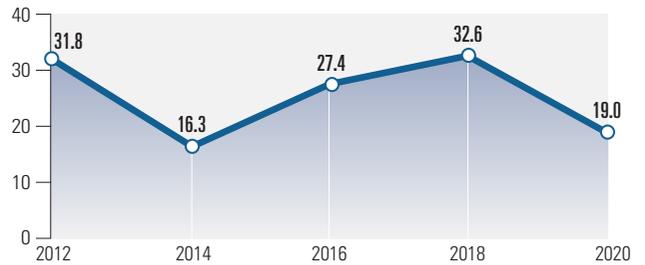
## 폭력범죄 피해가 늘고 있으나 신고율은 여전히 낮아

( 관련 지표 16.1.3 / 16.3.1 )

폭력범죄 피해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폭력범죄 피해율은 2014년 0.37%에서 6년 만인 2020년 2배가 넘는 0.88%로 증가했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2018년에 비해서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폭력유형별로는 특히 폭행 피해와 성폭력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둘 다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 폭력범죄 신고율,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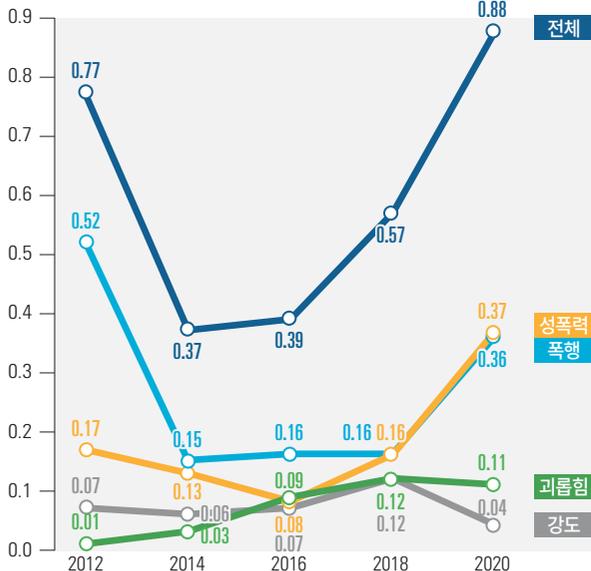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https://kosis.kr>, 2022.09.0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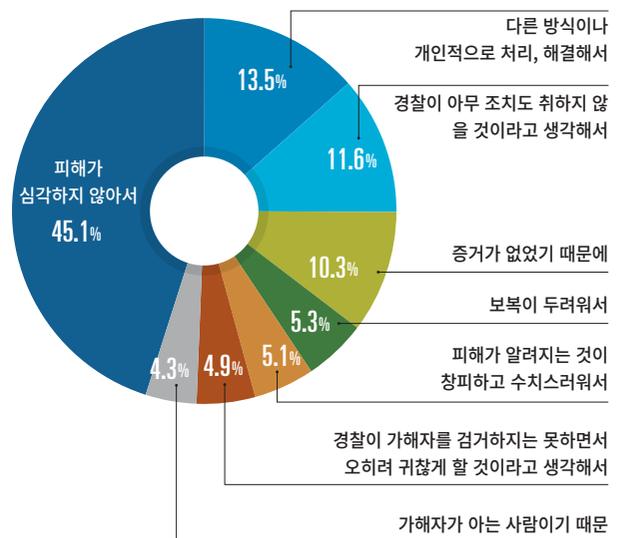
## 폭력범죄 피해율(추정), 2012~2020

(단위: %)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https://kosis.kr>, 2022.09.06. 인출)

## 폭력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202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분석보고서, p.154

주: 1순위 응답 비율

한편 폭력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이후 신고율이 가장 높았던 해에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폭력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11.6%),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귀찮게 할 수 있고(4.9%) 보복이 두려워(5.3%),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기(5.1%) 때문이다.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개선할 점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 공무원 뇌물 제공 등 부패행위 줄어들어

(☉ 관련 지표 16.5.1 / 16.5.2)

공무원의 부패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할 정부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든다. 한국에서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2016년 이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의 부패경험률은 2014~2016년 1.6~1.8% 사이를 유지하다가 이후 뚜렷이 감소해 2019년부터 0.4% 대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의 기점인 2016년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다. 국민의 부패경험률을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패율이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패율보다 지속적으로 높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

들에서 부패 개선이 미진함을 시사한다.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패경험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오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의 경우 기업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과정에서 공무원과 접촉하고 부패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경험률은 2000년 당시 거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10년부터 5% 이내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2.3%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경험률, 2000~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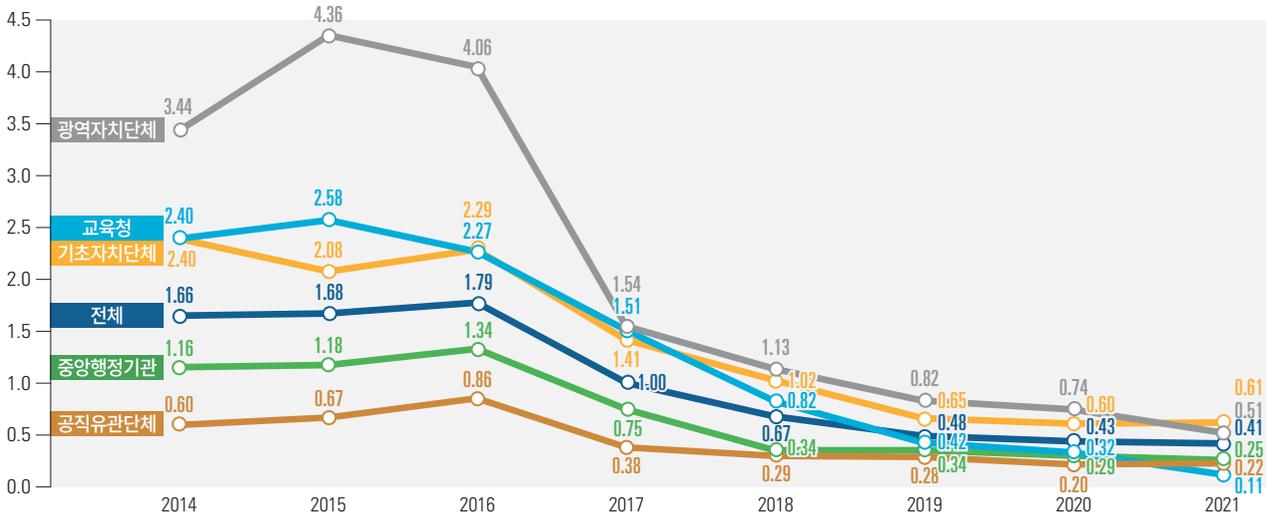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처 부패실태조사(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https://kostat.go.kr/sdg> 2023.01.16. 인출)

주: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음,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로 측정되며, 2002년과 2003년에는 조사 미 실시

일반국민의 부패경험률, 2014~2021

(단위: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p.15

주: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음, 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 비율로 측정되며, 2017년까지는 본인의 제공률, 2018년부터는 본인 또는 동료가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임



#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 특별 행사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Moment)' 개최식에서 전 세계 청년 대표로 연설하는 한국 7인조 보이밴드 방탄소년단(BTS).

Gettyimages

#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 17번 목표는 ‘SDG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와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SDG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협력대상국 정부, 개발협력기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SDG 17번 목표는 개발을 위한 자원, 기술, 능력배양, 무역 외에도 시스템 이슈로서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다자간 파트너십, 데이터 모니터링과 책무성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21년 1679억 달러(순집행액 기준)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백신 및 방역물품 지원, 긴급차관 공여 등 보건 의료 분야 지원을 늘리면서 2021년 ODA 규모가 28억 408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도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0.1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됨에 따라 개도국의 성장기반과 경제·사회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저개발국(LDC)은 낮은 소득과 국내 저축, 비효율적인 국내 자원 동원 등으로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송금이 급감했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ODA 지원 확대는 물론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공조와 협력기반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체제 재편에 대응하여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주도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SDG 이행역량을 지원하고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일관성을 갖도록 중장기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 0.16%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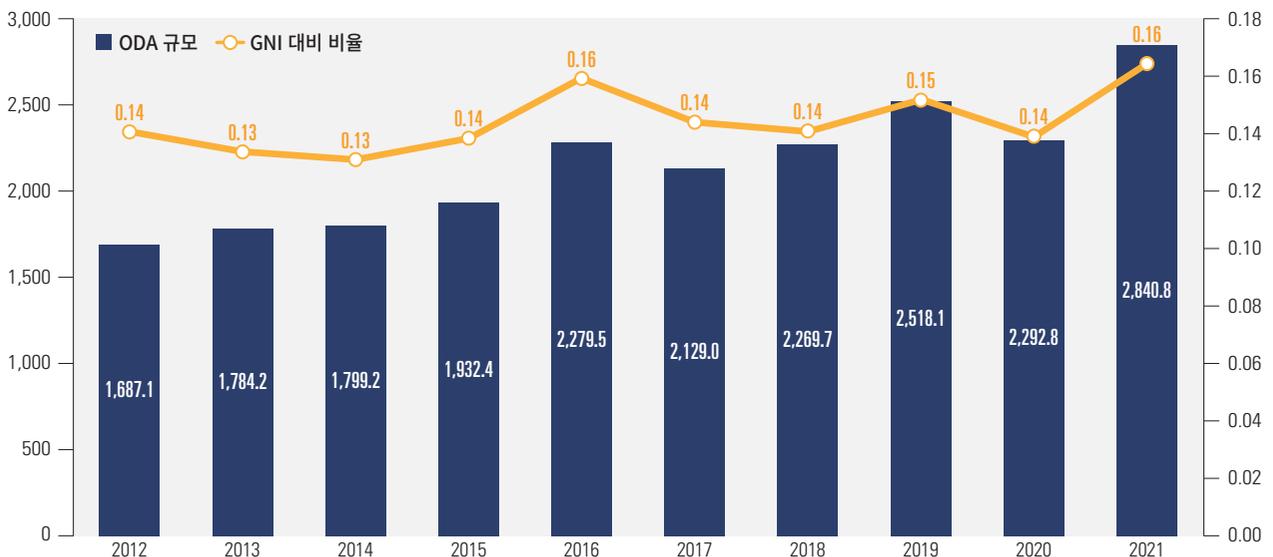
(📊 관련 지표 17.2.1)

한국의 ODA 규모는 2021년 28억 4080만 달러(잠정치)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

인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에 위축되었던 양자협력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고 세계은행과 유엔 등에 대한 출자·출연 등 다자협력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규모 대비 원조 규모를 나타내는 GNI 대비 ODA 비율도 2021년에 전년 대

한국 ODA 지원규모 및 GNI 대비 비율, 2012~2021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OECD.Stat(<https://stats.oecd.org/>, 2022.08.29. 인출)

주 :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2021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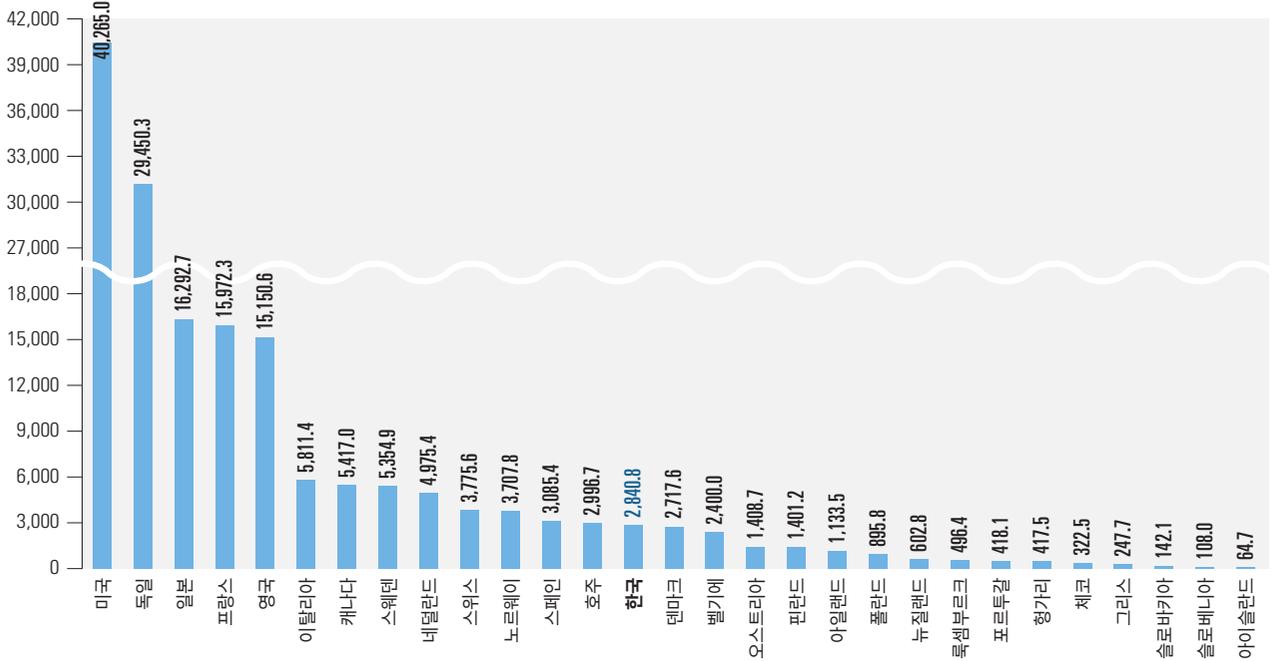


비 0.02%p 증가한 0.16%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ODA 지원이 증가한 것은 지구촌 공동번영과 SDG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외교부, 2022).

그러나 한국의 ODA 비율은 OECD DAC 회원국 평균(0.3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ODA 규모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1년 채택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OECD DAC 회원국별 ODA 지원규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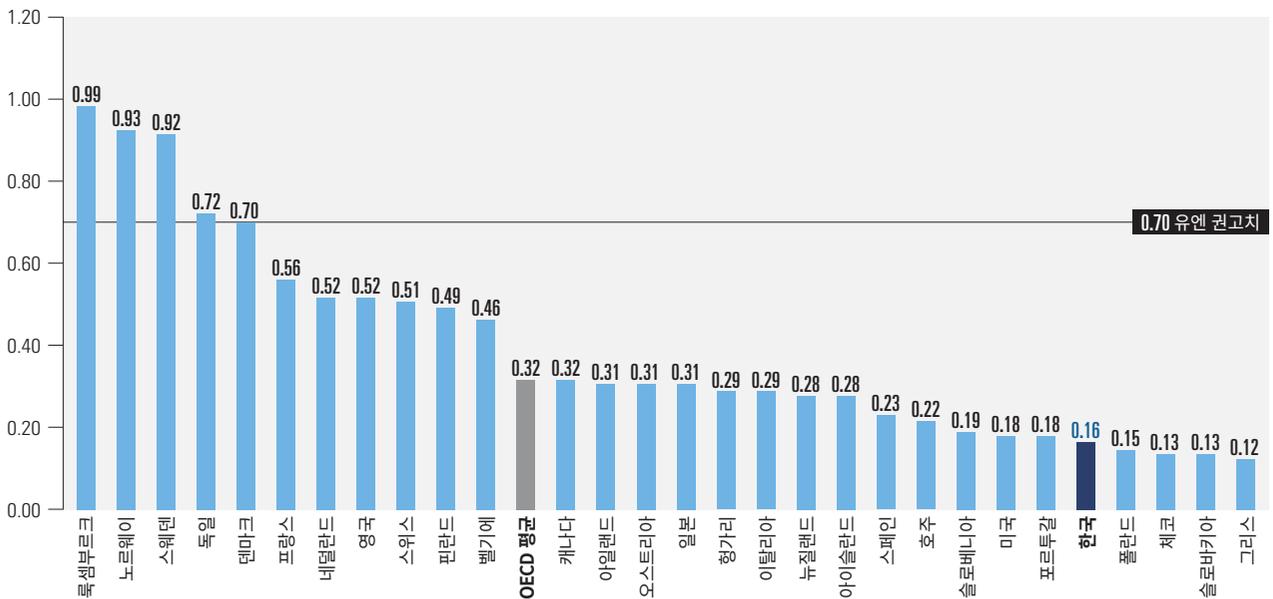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출처: OECD.Stat(<https://stats.oecd.org/>, 2022.08.29. 인출)  
 주 :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2021년은 잠정치임.

OECD DAC 회원국별 GNI 대비 ODA 비율, 2021

(단위: %)



출처: OECD.Stat(<https://stats.oecd.org/>, 2022.08.29. 인출)  
 주 :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2021년은 잠정치임.

해 SDG 이행을 위한 ODA 양적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권율 외, 2021).

OECD 국가들의 ODA 잠정통계(순지출 기준)에 따르면, DAC 회원국들의 ODA 규모는 2021년에 전년 대비 3.8% 상승한 1679억 달러에 이르지만 같은 해 DAC 비회원국들의 원조 규모는 110억 달러에 그친다. ODA 규모가 큰 공여국은 미국(403억 달러), 독일(295억 달러), 일본(163억 달러), 프랑스(160억 달러), 영국(152억 달러) 등이다. 한국의 지원 규모는 OECD DAC 29개 회원국 중 14위로, 이는 2020년 16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OECD 국가들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21년에 평균 0.32%를 기록하였지만 유엔 권고치인 0.7%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룩셈부르크(0.99%), 노르웨이(0.93%), 스웨덴(0.92%), 독일(0.72%), 덴마크(0.70%) 5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늘려 왔지만 GNI 대비 ODA 비율은 0.16%에 그쳐 DAC 회원국 중 25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는 ODA의 양적 규모 확대와 함께 질적 기준을 개선하기 위

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원조사업 조달에 제한을 두지 않는 언타이드(untied) ODA 비율이 2019년 62.7%에서 2020년 80.0%로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전체 ODA 증여율도 86.5%에서 90.5%로 증가하는 등 OECD DAC 권고수준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OECD,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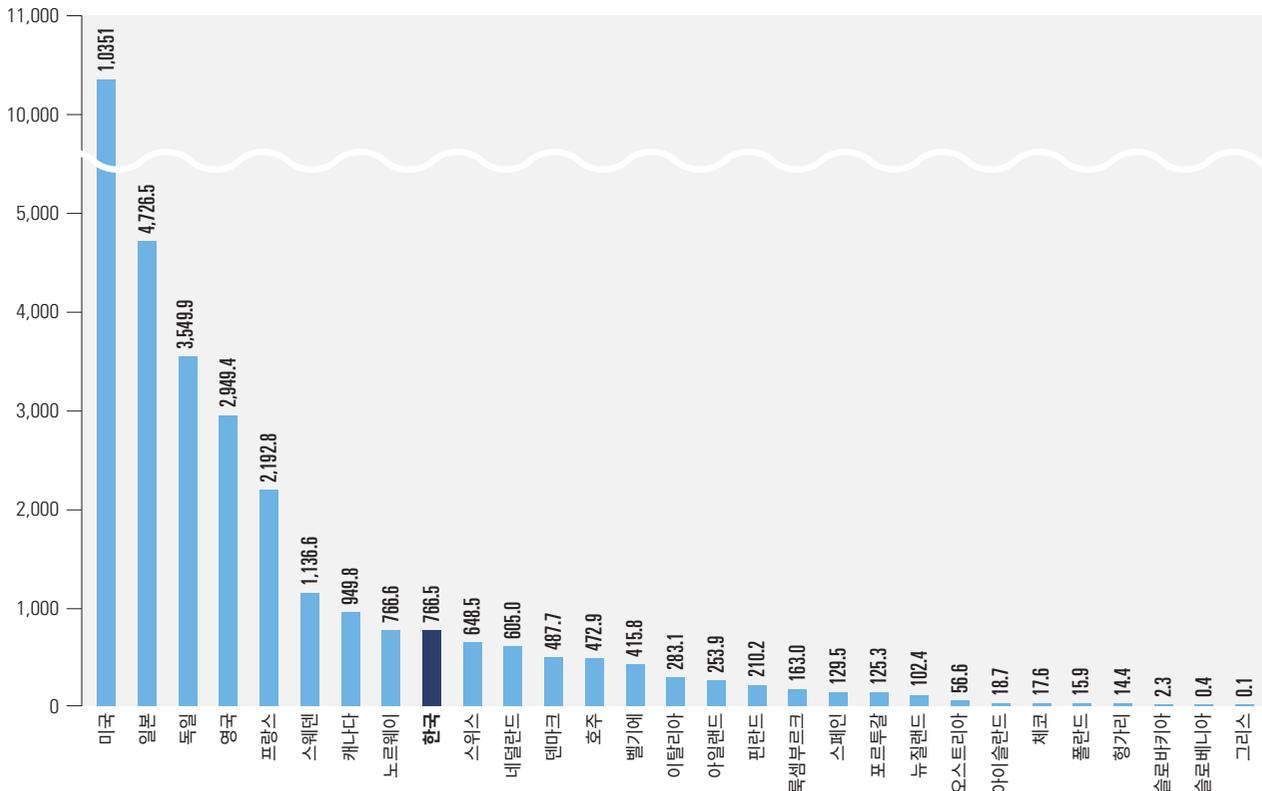
###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39.8%로 높아져

#### ☉ 관련 지표 17.2.1

한국의 양자원조는 2020년 총지출액 기준 19억 252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조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양자원조 지원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유엔은 개도국 개발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개발재원 수요가 높은 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비중을 GNI 대비 0.15~0.2%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GNI 대비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은 2020년 0.05% 수준이지만 지원 규모가 DAC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양자 ODA에서 차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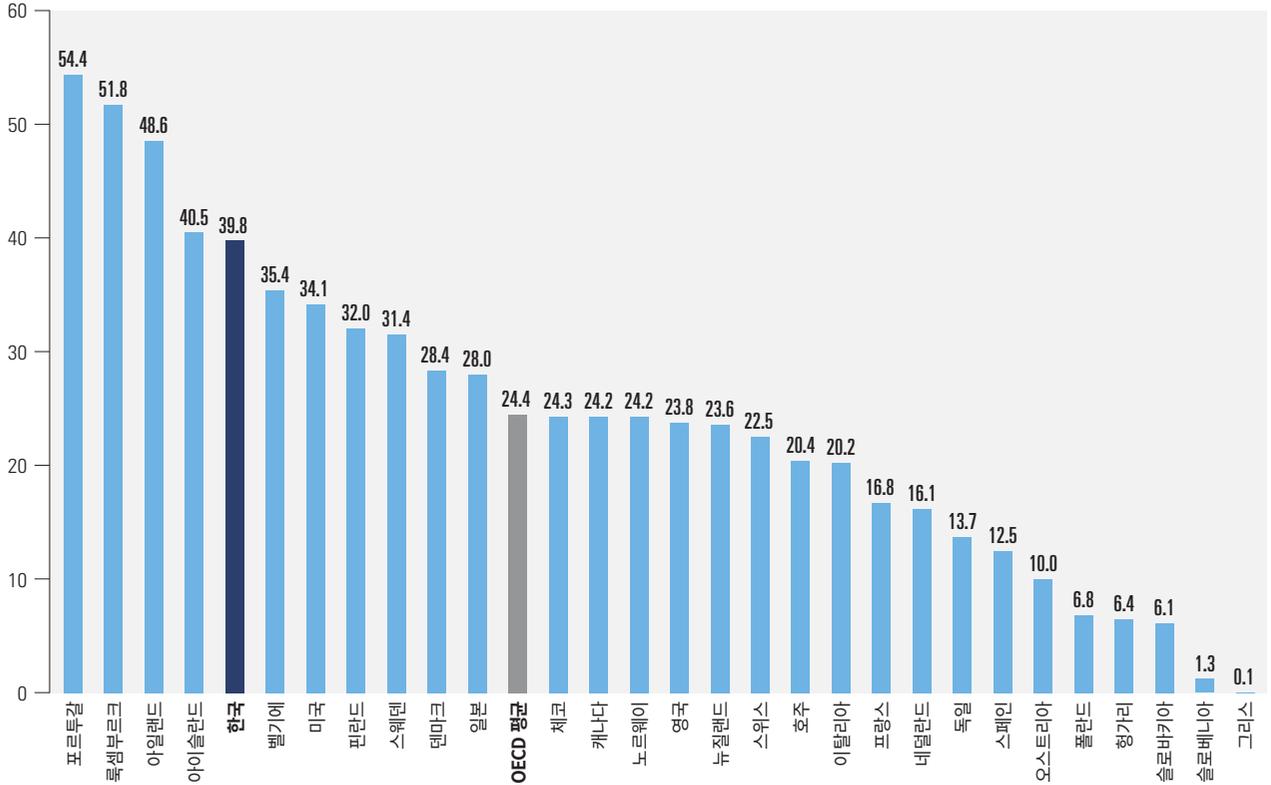
OECD DAC 회원국별 최저개발국 ODA 지원규모, 2020

(단위: 백만 달러)



출처: OECD.Stat (<https://stats.oecd.org/>, 2022.8.29. 인출)

주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출처: OECD.Stat(<https://stats.oecd.org/>, 2022.08.29. 인출)  
주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는 최저개발국 지원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한국의 최저개발국 ODA 지원 규모는 2020년 기준 7억 6650만 달러다. 이는 DAC 29개 회원국 중 9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동안 ODA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2011년 3억 7040만 달러에 불과했던 최저개발국 지원은 2015년에 6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개발국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58억 449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ODA 총액이 감소하였으나 양자원조에서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은 39.8%로 전년 대비 1.7%p 증가했다. OECD 국가들의 양자 ODA 중 최저개발국 지원 비율은 2020년 기준 포르투갈(54.4%), 룩셈부르크(51.8%), 아일랜드(48.6%) 등의 순으로 높다. 한국은 39.8%로 최저개발국 지원 비율이 다섯 번째로 높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42개 최저개발국가에 대해 1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외교부, 2021). 최저개발국은 소득과 국내저축 수

준이 낮고 효과적인 국내재원 동원이 어려워 외부재원의 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위축, 외국인직접투자 둔화, 해외송금 급감, 채무상태 악화 등이 겹치면서 양자 ODA 지원이 매우 중요해졌다. 보건 역량, 상하수 설비 등의 방역시스템이 취약한 가운데 최저개발국 정부는 소득 및 식량 지원, 대출·보증, 세금 감면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ODA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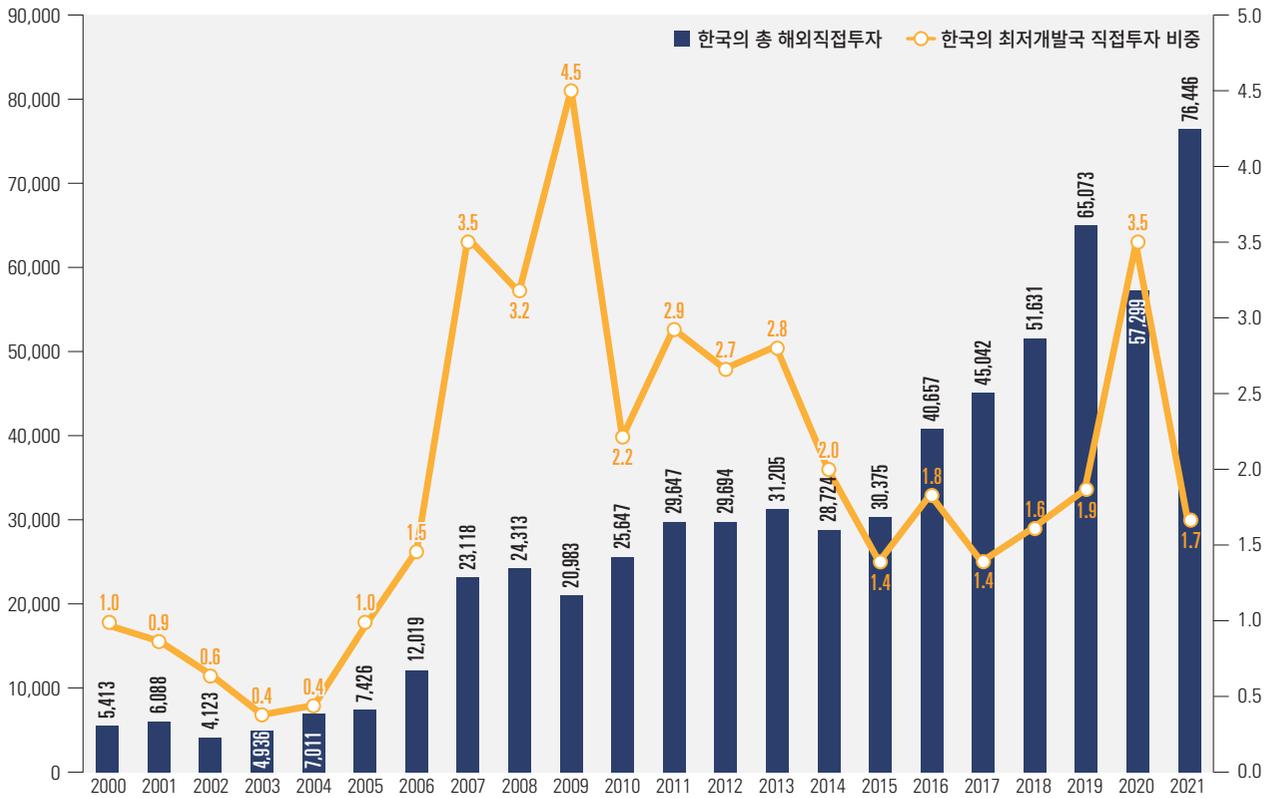
###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감소

#### ☞ 관련 지표 17.3.1 / 17.5.1

SDG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포트폴리오 투자, 송금, 민간 차입 등 추가적인 재원 동원이 중요하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연간 303억 7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9년 650억 7300만 달러로 크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비중, 2000~2021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 2022.08.29. 인출)

게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봉쇄와 교역 감소로 인해 2020년 572억 9900만 달러로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SDG 이행에 필요한 자원 중에서 민간투자는 대부분 중소득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저개발국을 위한 투자 촉진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와 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포용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면에서 SDG 달성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최저개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 약 20억 달러에 달하고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1년에는 12억 81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 최저개발국에 대한 교역규모 증가

#### (☉ 관련 지표 17.11.1)

한국의 개도국 교역액은 2022년 7876억 달러로 총교역액의 55.7%를 차지한다. 반면 최저개발국과의 교역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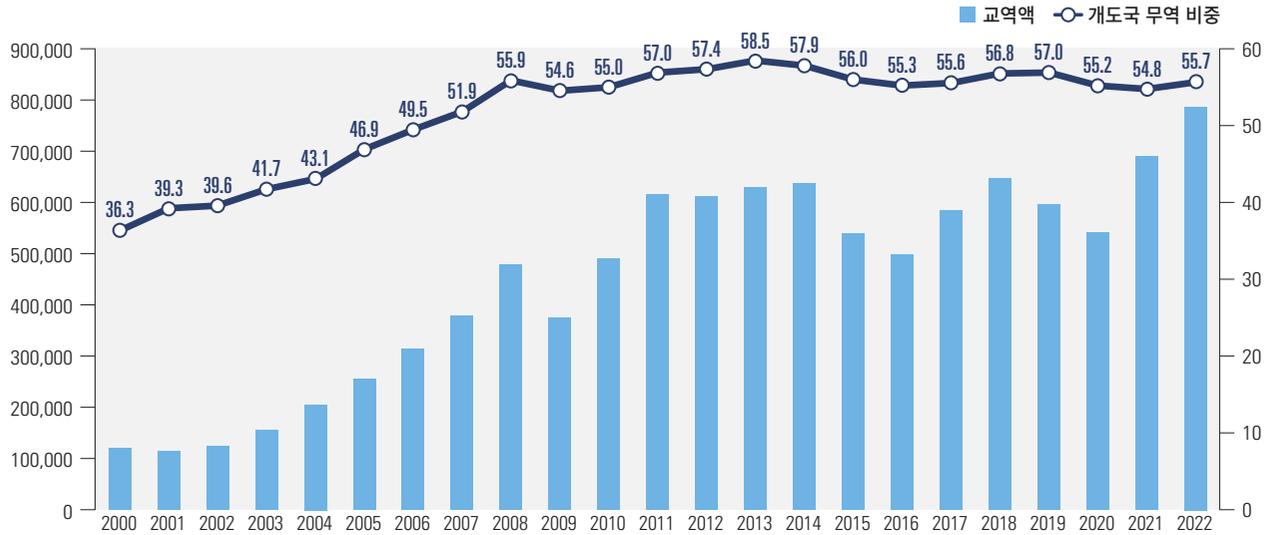
148억 달러에 그치고 총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0년 이후로 최저개발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최저개발국과의 교역액이 2003년 41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최저개발국 특혜관세 시행 초기에는 전체 교역품의 1.8%에만 적용되어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조항에 합의하면서 수혜품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는 전체 교역 품목의 95%까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교역액도 점차 증가하였다. 2014년 최저개발국에 대한 교역액은 151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SDG 17.11 세부목표는 전 세계 수출에서 최저개발국의 비중을 두 배로 늘리고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국경봉쇄로 인한 교역액이 급감하면서 개도국 및 최저개발국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최저개발국과의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



###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규모, 2000~2022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KITA.NET(<https://stat.kita.net/stat/kts>, 2023.01.30. 인출)

### 한국의 최저개발국에 대한 교역규모, 2000~2022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KITA.NET(<https://stat.kita.net/stat/kts>, 2023.01.30. 인출)

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의 경우 최저개발국에 대한 교역규모는 86.9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국경봉쇄가 완화되고 교역기반이 확충되면서 교역규모는 147.7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회복되고 있다.

SDG 17번 목표에서 무역은 SDG 이행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행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결과의 이행 및 WTO 체제하의 다자무역시스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권율 외, 2016). 무역 관련 세부목표에는 WTO 다자무역시스템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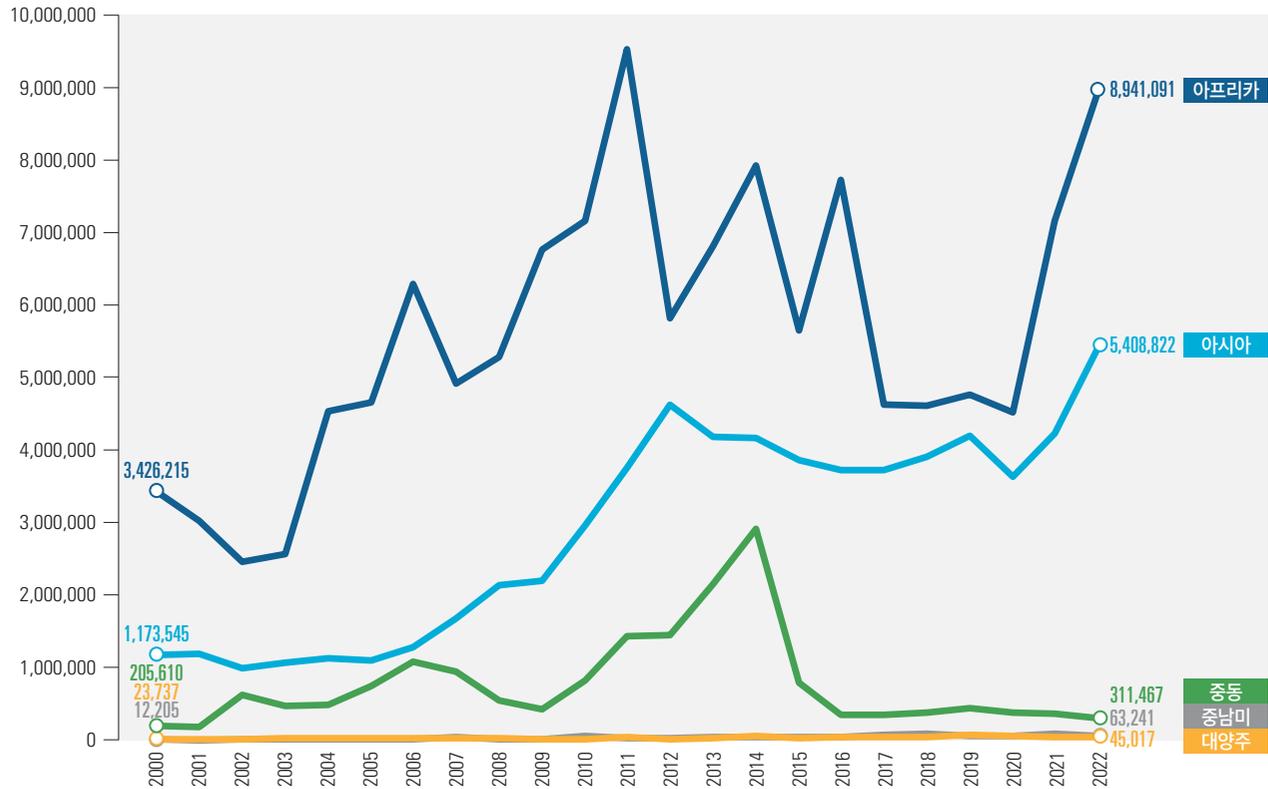
화(SDG 17.10), 개도국의 무역 확대(SDG 17.11), 최저개발국의 시장접근 개선(SDG 17.12)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도하개발어젠다의 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WTO체제의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위해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촉진을 지원하고 최저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기술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이행 수단이기 때문이다.

SDG 17.10.1 지표는 전 세계 가중관세 평균치를 측정 지표로 설정하고 UNCTAD, WT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가용자료 및 통계의 부재로 새로운 조사체계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와 수량제한 철폐는 대표적인 시장 접근 조치이지만 사실상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를 활용하

여 최빈국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이행 수단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저개발국 특혜관세 및 군소도서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측정할 수 있는 일반화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국내자료 가운데 가용할 수 있는 통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역별 교역규모, 2000~2022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KITA.NET(<https://stat.kita.net/stat/kts>, 2023.01.30. 인출)

- **공적개발원조(ODA)**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concessional)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 **언타이트(Untied ODA) 원조** :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지 않는 원조방식



강민정·이재희, 2022, 소상공인 금융실태 및 시사점, 소상공인 금융시장동향 리포트 Vol.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병욱, 2021, 2021 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찰청, 2022, 2021 범죄통계

고용노동부, 2022,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보도자료(2022.03.15.)

고용노동부, 2020~2022,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2022,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관계부처합동, 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관계부처합동, 20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교육부, 2022,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2.01.19.)

국민권익위원회, 2021,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토교통부, 2008, 2022,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21, 2020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2022, 2021년 도시계획현황

국토교통부, 2022,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권율·윤정환·이은석·이주영·유애라·김성혜, 2021,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정지원·허윤선·정지선·이주영, 2016, SDGs 도입이후 개도국의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업분야 주요사업 성인지통계

박형민, 2020, 세계의 살인 범죄(1): 추세와 분포, 세계의 살인 범죄(2): 피해자 특성, 이슈통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형민·최수형·김남희·이선형·조계성, 2020,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 분석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산림청, 2006, 2011, 2016, 2021, 산림·임업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서문희, 2006, 외국의 보육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 2021, 서울시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에너지통계월보(2022.12.)

여성가족부, 2021,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양경우, 2020,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년...성평등 정책 얼마나 진전됐나, 연합뉴스(2020.05.12)

외교부, 2021, 다자외교조정관「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LDC) 총회」 아태지역 고위급 준비회의 참석, 보도자료(2021.08.31.)

외교부, 2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 보도자료(2022.04.12.)

유혜영·김남순·박환보, 2017,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이공연, 2017, 한국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행, 국제개발협력

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준미, 2015, 영유아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분석, 육아정책연구

인사혁신처, 2022, 2021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정가원·김효주·선보영·권도연, 2019, 보건복지부 성평등 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질병관리청, 2022, 2021 감염병 감시 연보

최혜민, 2021, 2021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통계청, 2022,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도자료(2022.04.12.)

한국교육개발원, 2021, 통계로 보는 한국의 교육 2021

한국에너지공단, 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환경연구원, 2021,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이행평가-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6, 2015년도 원양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1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

해양수산부, 2019,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

해양수산부, 2021, (2021년 7월~2022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021, 원양산업 실태조사(2016~2020)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18, 2019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1, 2022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2022, 2021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2021.12.31. 기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

환경부, 2021,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 중, 보도 설명자료(2021.12.20.)

환경부, 2021, 2021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환경부, 2021,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2021,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0-202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CBD, 2020, Global Biodiversity Outlook 5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OECD DAC, 2022, ODA Levels in 2021-Preliminary data,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0, Blended Finance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20: Supporting a Resilient COVID-19 Recovery,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 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

OECD, 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1, OECD Skills Outlook 2021: Learning for Life, Paris, France: OECD Publications.

Sachs, J., Kroll, C., Lafortune, G., Fuller, G., F. Woelm, 2021,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22, Global Innovation Index 2022: What is the future of innovation-driven growth?

## 참고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http://nlic.go.kr/nlic/parcelServiceLogistics.action>)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통계(<https://www.eum.go.kr/>)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산림관리인증, FSC 인증(<https://kr.fsc.org/kr-ko>)

산업연구원, 산업통계 분석시스템(<https://www.istans.or.kr/>)

외교부 주OECD대표부(2021), 최저개발국(LDC)에 대한 혼합금융([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6/view.do?seq=242](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6/view.do?seq=24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6/1224/page/0](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6/1224/page/0))



## 참고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SubStat.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nhanes.kdca.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 통계청,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https://kostat.go.kr/sdg>)
- 한국무역협회(KITA.NET)(<https://stat.kita.net/stat/kts>)
- 한국산림인증제도(<https://kfcc.kofpi.or.kr/>)
- 한국수산자원공단, TAC소개([https://www.fira.or.kr/fira/fira\\_030601.jsp](https://www.fira.or.kr/fira/fira_030601.jsp))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시스템(<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https://www.msp.go.kr/>)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
-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s://www.waternow.go.kr/>)
- CBD, Preparations for the Post-2020 Biodiversity Framework(<https://www.cbd.int/conferences/post2020>)
- European Commission, INFORM(<https://drmkc.jrc.ec.europa.eu/inform-index>)
- FAO, AQUASTAT(<http://fao.org/aquastat/statistics/query/index.html?lang=en>)
- FAO, 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https://www.fao.org/dad-is/en/>)
- IEA Data Services, Energy Statistics Data Browser(<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tools/energy-statistics-data-browser>)
-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FSIs)(<https://data.imf.org/?sk=51B096FA-2CD2-40C2-8D09-0699CC1764DA>)
-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https://ipbes.net/global-assessment>)
- IPBES, IPBES-IPCC Co-Sponsored Workshop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https://ipbes.net/events/ipbes-ipcc-co-sponsored-workshop-biodiversity-and-climate-change>)
- IUCN, Nature-based Solutions(<https://www.iucn.org/our-work/nature-based-solutions>)
- IUCN, Raw Data to Red List(<https://www.iucnredlist.org/assessment/process>)
- OECD.Stat(<https://stats.oecd.org/>)
-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unstats.un.org/sdgs/dataportal>)
- UNEP, Beat Plastic Pollution(<https://www.unep.org/interactives/beat-plastic-pollution/>)
- UNEP, Freshwater Ecosystem Explorer(<https://map.sdg661.app>)
- UNESCO Cities Platform([https://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10/pamphlet\\_-\\_unesco\\_cities\\_platform-v2-en%5B1%5D.pdf](https://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10/pamphlet_-_unesco_cities_platform-v2-en%5B1%5D.pdf))
- UNFCCC Glasgow Climate Pact([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cma2021\\_10\\_add1\\_adv.pdf](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cma2021_10_add1_adv.pdf))
- United Nations(<https://sdgs.un.org/topics/education>)
- WHO, Electronic State Parties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Tool(e-SPAR): IHR score per capacity(<https://extranet.who.int/e-spar#capacity-score>)
- WHO, Gender and health([https://www.who.int/health-topics/gender#tab=tab\\_1](https://www.who.int/health-topics/gender#tab=tab_1))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WorldBank, self-employed(indicator)(<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EMP.SELF.ZS>)

## 용어 약어

-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다양성협약)
- 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
- EEZ** 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수역)
-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발전교육)
-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유엔식량농업기구)
-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미국산림인증제도)
- FTE** Full Time Equivalent(상근상당)
- GBO** Global Biodiversity Outlook(지구 생물다양성 전망)
-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세계시민교육)
- GJ** GigaJoule(에너지의 단위, 1 GJ=1십억 J)
- GNI**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
-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석탄가스화복합발전)
-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국제보건규정)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 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 IPOA-IUU**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국제자연보전연맹)
-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 KFCC**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한국산림인증제도)
- LDC** Least Developed Country(최저개발국, 최빈개도국)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 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해외직접투자)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DAC**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 개발원조위원회)
- PEFC**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유럽산림인증제도)
-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 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지역수산기구)
- SEEA** the System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환경경제통합계정)
- TAC** Total Allowable Catch(총허용어획량)
-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
- TOE** 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1톤의 석유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 기준)
-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유엔에이즈프로그램)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유엔무역개발기구)
-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유엔환경계획)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세계지식재산기구)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 지표 총괄표

체계적·포괄적 현황 점검을 위해서 2023년부터 목표별 대표지표 및 순환지표 체계를 운영함. 대표지표의 경우는 매년, 순환지표는 3~5년주기로 현황 점검에 활용 예정임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에는 2019, 2021, 2022, 2023년 이행현황 점검시 활용된 지표를 표시함).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a)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동원 보장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	○	○	●
	2.1.2 식량불안정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해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 여부별)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가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	○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 소득(성 및 원주민 여부별)	○	○	○	●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식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			●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농업지향지수				
	2.a.2 농업 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해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 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		●

###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모성 사망비	○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로 감소	3.2.1 5세 미만 사망률	○			
	3.2.2 신생아 사망률			○	
3.3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		
	3.4.2 자살률	○		○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3.8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3.b	3.b.1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3.b.3			적정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3.c	3.c.1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 상당 수준 증가		보건요인 인력 밀도 및 분포		○ ○ ○ ●
3.d	3.d.1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4.1	4.1.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이수 보장		(a)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초등학교 말 (c)중학교 말에 (i)읽기와 (ii)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 ○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4.2	4.2.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 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
4.3	4.3.1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 ●
4.4	4.4.1	2030년까지 전문, 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 실질적으로 증가		정보통신기술(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 유형별)		○ ○
4.5	4.5.1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 ○ ○
4.6	4.6.1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보장		특정 연령집단에서 기능적 (a)언어역량과 (b)수리역량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
4.7	4.7.1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
4.a	4.a.1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유형별)		○
4.b	4.b.1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 부문 및 연구유형별)		
4.c	4.c.1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에 근거한 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	○	●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 보호 정책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축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	○	○	
5.5 정치, 경제, 공공 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	5.5.1 (a)여성 국회의원 비율 (b)여성 지방의원 비율	○	○	○	●
	5.5.2 여성 관리자 비율	○	○	○	●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 및 생식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형태별)				●
	5.a.2 토지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 사용 강화(특히 ICT)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와 성평등 축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정결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배변 금지	6.2.1 (a)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과 (b)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 등을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6.3.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
6.a 물 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 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 지원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하게 증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	○	○	●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2배 증가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	○	○	●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 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 연간 7% GDP 성장을 유지	8.1.1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	○	○	●
8.2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	○	○	●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적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 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	○	○	●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8.10.1 (a)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 인구 비율				
8.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포함)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8.b 2020년까지 청년 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9.1 경제 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	○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	○	●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
	9.5.2 인구 100만 명당 (상근상당)연구원 수	○	○	○	●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 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해 개도국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10.2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	●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	○	○	●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				●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 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	○	
	10.7.2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 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10.7.3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재원지원, 직접투자권장	10.b.1 개발재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로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	○	○	●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 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		○	●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도시의 비율				●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6 대기의 질과 지체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해,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 감소	11.6.1 지체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	○	○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인구수 가중)	○	○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	●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해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 지원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균형개발, (c)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12.2.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2분의 1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2.4.2 (a)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		○	●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	○	○	●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틀 이행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해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3.1 기후 관련 위험 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3.2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	○	●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달러 동원 즉각 이행	13.a.1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	○	○	●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	○	●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업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 보장	15.1.1 총 국토면적중 산림면적의 비율	○		○	●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유형별)		○	○	●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	○	●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해,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		○	●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동물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 다양성의 통합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 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산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 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6.1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 (성 및 연령별)	○		○	●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신체적, (b)정서적, (c)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 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6.10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 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국내 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목표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 재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7.1.2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 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순ODA의 비율 2)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	○	○	●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혁신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해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해, 특허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 증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강화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 지원금액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	●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해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틀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만·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SDG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 보안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 연도별 데이터 수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sdgs>)

또는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https://kostat.go.kr/sdg>)



## 2015

- ① 유엔 SDG 채택
- ② SDGs 지표 전문가 그룹(IAEG-SDGs) 발족

①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리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의 핵심이 바로 SDG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목표로서,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를 포괄한다. SDG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원칙으로, 매년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통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유엔총회 사진

② SDG 이행 점검은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지표 프레임워크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27개 국가 통계청을 회원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인 IAEG-SDGs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그룹은 2015년 3월에 조직되었으며,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 개발·개선, SDG 이행 지원, 국가통계 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2016-2017

- ③ 유엔 SDG 지표 개정안 합의
- ④ 한국의 자발적보고서(VNR) 발표
- ⑤ 유엔 공조 SDG 포럼 개최

③ SDG 이행 원년인 2016년에 맞추어 지표 프레임워크도 같은 해 3월에 개발되었으나,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2017년 3월 제48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232개 지표가 합의되었다. 해당 지표 프레임워크는 같은 해 7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SDG 지표 선정 기준은 방법론적 명확성, 측정 가능성, 해석 용이성, 국제 비교 가능성, 결과 지표 중심이며, 지표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에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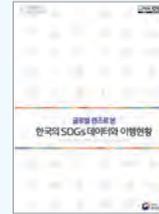
④ SDG 채택후 2016년 7월에 처음 개최된 유엔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한국은 자발적보고서(VNR)를 발표하였다. 자발적국별 보고서는 국가 단위의 SDG 이행체계 보고서로서, 각국에 2030년까지 2~3 차례 발표 기회가 제공된다. 2016년 한국 VNR에는 SDG 이행을 위한 국내의 법 및 제도적 기반, 이행계획 및 이행 수단 등이 담겨져 있다.

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사무소와 공조로 SDG 이행을 위한 포럼을 2017년 5월에 개최했다. 본 포럼에서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관리와 분석,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 SDG 지표 측정이 논의되었다.

## 2018-2019

- ⑥ 한국형 SDG 수립
- ⑦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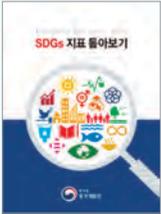
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지구촌협력이라는 5대 전략하에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목표는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룹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⑦ 통계청은 글로벌 차원의 SDG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SDG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 발간된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 데이터와 이행현황』보고서가 이후 정기 발행되는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의 기초보고서라 할 수 있다.

2020

- ⑧ 「SDGs 지표 훑아보기」 발간
- ⑨ 유엔 SDG 지표 종합개편 및 IAEG-SDGs 동아시아 대표 활동 수행 (2020~2021)



⑧ 국내 SDG 관계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유엔 SDG 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020년에 지표별 메타데이터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231개 지표의 개념 및 측정산식, 글로벌 및 국내 데이터 출처 등이 수록되었다. 메타데이터 북은 2025년 종합개편에 맞추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⑨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는 방법론 개발 진척도 등을 고려해 2020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종합 개편을 한다. 기존 지표 프레임워크의 큰 틀은 유지하되 방법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지표의 대체 및 삭제, 추가 지표 등이 제안된다. 2020년 3월 제51차 UN 통계위원회에서 231개 지표가 합의되었다. 2023년부터는 다음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한국은 2020~2021년 동안 IAEG-SDGs 동아시아 지역 대표를 역임했다.



종합개편 논의를 위한 제13회 IAEG-SDGs 회의 참석자 사진

2021

- ⑩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발간
- ⑪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구축
- ⑫ SDG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⑩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021년부터 매년 3월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 발간 중이다. 글로벌 지표 중에서 국내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고 데이터 가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시계열 추세를 살펴보는 동시에, 성 및 연령, 지역 등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집단의 이행현황을 분석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 및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⑪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021년 4월 오픈소스 기반 SDG 한국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9월에는 영문서비스도 개시하였다. 데이터 서비스는 지표별 한국 데이터 원자료뿐 아니라 표 및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지표 개념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URL: <https://kostat.go.kr/sdg>

⑫ 통계청은 유엔 SDG 한국 데이터 책임기관으로서, 국제기구의 데이터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고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1년 7월에 각 부처에 SDG 지표별 담당자 및 총괄담당관을 지정,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해당 거버넌스에는 SDG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28개 관계부처 및 통계작성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2

- ⑬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
- ⑭ 통계청 지표누리 SDG 서비스 확대

⑬ 매년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과 한국의 SDG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개최된다. 데이터 관점에서 SDG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포럼으로, 그 첫 번째 포럼이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최로 2022년 5월에 개최되었다.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⑭ 한국의 SDG 데이터 서비스는 통계청 공식 사이트인 지표누리를 통해서도 2022년 12월부터 접근가능하다. 지표누리에는 SDG 지표뿐 아니라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여타 지표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 SDG 지표와의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우리는 2030 의제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 우리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

### 집필진

연구책임 정우현(한국환경연구원, 목표16)  
공동연구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1)  
황윤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표2)  
정다운(한국환경연구원, 목표3)  
한효정(한국교육개발원, 목표4)  
김도균(한국환경연구원, 목표5)  
안종호(한국환경연구원, 목표6)  
이상엽(한국환경연구원, 목표7)  
안소은(한국환경연구원, 목표8)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목표9)  
이상운(한국환경연구원, 목표10)  
이지영(한국환경연구원, 목표11)  
이소라(한국환경연구원, 목표12)  
홍제우(한국환경연구원, 목표13)  
김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해양))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수산))  
구경아(한국환경연구원, 목표15)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표17)  
연구보조 류환희(한국환경연구원)

### 편집진

박영실(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민희(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

발행 2023년 3월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 2765-3803

디자인 숨쉬는책공장

인쇄처 나래기획



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71-10



# SDG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23